2018
여름

생협 평론

31

계간
『생협평론』
2018 여름
31호

차례

길잡이

환경문제와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생협 6
—박종현(편집위원장)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14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30
—윤숙희(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46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61
—김경하(더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76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89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109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이슈

협동조합 정체성에 주목한 독일 협동조합의 감사제도 129
—박성재(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소비자는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141
: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의미와 과제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특별 기고 모두가 스스로 주인 되기 149
: 현장에서 만난 브라질 연대경제의 자주관리
—주영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학습성장부문)

생협 줌 인 zoom in 맑은 하늘을 담고 싶다 168
—김성광(한겨레 기자)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2**
협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170
: 송인창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
—차형석(시사IN 기자)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 1
자영업의 문제를 극복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182
—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

서평 평화를 향한 또 다른 길, 협동조합운동과 우애의 경제학 192
: 로버트 실젠,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김이경(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수료)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귀중한 앎이 닫힌다 196
: 류지현, 『사람의 부엌』
—문보라(아이쿱 기자, 서울아이쿱생협 조합원)

협동조합 소식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200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생활 속 사회적경제 엄마의 꿈을 펼치다 204
—신효진(편집위원회)

독자의 소리 4
정기구독 안내 23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207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25

생협 평론

계간 2018년 여름 제31호 **펴낸날** 2018년 6월 20일 **펴낸이** 윤유진 **편집위원** 김현대 박경숙 박범용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편집위원장** 박종현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편집간사** 신효진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반품 및 유통 관련 문의** 도서출판 **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독자의 소리

김 경 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니저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시민들의 상담을 받곤 한다. 대부분 창업을 하고 싶은데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그 설립 추이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데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창업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참가율도 꽤 높다.

많은 시민들이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간지원조직의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설립 교육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 실무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일부 협동조합이 살아남아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성공 사례로 다시 발굴되기도 한다. 개인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5명 이상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통해 해결하고 어느 정도 성장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설립된 수많은 협동조합이 휴업 또는 해산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를 현장에서 보며 '옳은' 협동조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졌다. 협동조합은 결사체(association)이면서 기업인 조직이다. 자생력을 갖고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익을 창출하여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협동조합들이 내부 갈등에 의해 와해되기도 하고, 5명이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 1인 기업처럼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스스로 가치 있는 조직임을 주민들에게 증명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와 결합하여 공동체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난 『생협평론』 2018년 봄호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과 사례들을 다루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모두가 공감하는 일자리, 돌봄, 의식주 문제 등 개인이 살아가는 데 위협을 느끼는 모든 요소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 지점에서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의미를 증명해내고 다른 법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생협평론』은 협동조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느끼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돕는다. 더 건강한 개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생태계가 생겨나는 데 『생협평론』이 앞으로도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길잡이

박종현
편집위원장

환경문제와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생협

서울시장 후보 첫 번째 TV토론회는 미세먼지에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시간이 미세먼지 공방에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지난 4년간의 서울시 시정을 평가하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미세먼지가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던 것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3월 '쓰레기 대란'이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시민들은 좋은 일자리나 먹고살기에 충분한 소득 못지않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질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 복잡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 〈특집〉으로 환경문제를 다각도로 재조명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쓰레기 대란'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이 다루어주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생활 폐기물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고, 관련 시장들이 어떻게 작동했으며,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마을에서 발생하는 의류나 재활용품과 같은 유가품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자원관리' 모델을 모색하자는 등의 여러 정책 제안에도 주목해주시면 좋겠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가에 대해

서는 세 분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의 윤숙희 이사는 두레, 아이쿱, 행복중심 등 생협들이 순환과 공생 그리고 환경을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이 글을 통해 우리쌀 지키기 우리밀 살리기 운동, 논 습지 보전과 논 학교, 자원순환형 축산과 동물 복지, 토종씨앗 지키기, 공정무역 등 '땅과 물을 살리는 활동들'과 식품안전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GMO 완전표시제 등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의 가능성 등 그동안 생협이 펼쳐온 활동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출발을 이끌었던 한살림이 수행해온 실천에 관해서는 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이 상세히 소개해주었다. 환경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삼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더나은미래의 김경하 부편집장으로부터 들어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진 물건을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해내는 업사이클링기업 모어댄, 시민들이 힘을 합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10년차에 접어든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나무 심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해외 협동조합의 모습은 〈협동조합 소식〉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환경문제를 한층 넓은 시야 속에서 살펴보고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기 위해 과학 전문가와 경제학자로부터도 글을 받아보았다. 과학기술은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도구이기도 한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는 과학기술의 이러한 두 얼굴을 바닷

물 담수화 사례를 통해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주었다. 이때, '중간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적정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태계에 주는 영향도 적으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맥락에 맞춤하게 배치되기 용이한 기술이라고 한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의 정건화 교수는 현재를 생태적 위기로 규정한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명사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윈, 화이트헤드, 에른스트 마이어, 제레미 리프킨 등 여러 학자들의 통찰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과학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담당할 역할은 무엇일지 등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좌담〉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 관련 과제들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환경문제 중 우선순위로 무엇을 꼽는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체계 전환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 및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는 없는지,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새로운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소중한 토론의 장에 참여해준 김성경 자락당 대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윤성미 강서아이쿱 이사,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호 〈이슈〉에는 두 편의 글이 실렸다. 박성재 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협동조합 선진국인 독일이 독특한 협동조합 감사제도로 조합원과 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 독일 협동조합 감사제도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해주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의미와 과제를 다루어주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소비자·환경·농민·학부모·생협 단체들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 GMO 학교급식 금지, Non-GMO 표시 허용을 요구하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생협 조합원들과 주부·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21만 명이 넘는 참여자 숫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아이쿱의 여러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참여하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얻기도 했다. 이 글을 통해 이 국민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는 무엇이며 청와대의 응답이 왜 실망스러웠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기고〉에서는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학습성장부문 주영호 님의 브라질 연대경제 현장 탐방기를 실었다.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 남부 꾸리찌바시의 연대경제의 자주관리 현장이 어떠한 철학과 조직 원리 위에 움직이는지, 그곳의 활동이 한국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성공과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으로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

았던 송인창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적경제 사업 현장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목적으로 연재 중인 또 다른 〈기획 연재〉는 이번 호부터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으로 코너 제목을 바꿨고, 자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고민하거나 선택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부터 살펴보았다. 〈서평〉에서는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의 삶을 소상히 들려주는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과 우리의 식생활을 자연친화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의 부엌 : 냉장고 없는 부엌을 찾아서』, 두 권의 책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 먼지를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한 〈생협 줌 인〉, 엄마로서의 삶과 '나 자신'의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
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그동안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슈에 비해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비닐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OECD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경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수질은 26위, 대기오염 부문은 꼴찌다. 이제 환경 이슈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자연은 흔히 자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적 성장은 이러한 능력을 박탈해가면서 쌓아왔는지 모른다. 순환과 회복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무엇일까.

생협 평론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_____홍수열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_____윤숙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_____유현실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_____김경하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_____강양구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_____정건화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_____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재활용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피해왔지만,
재활용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소비자와 주민 참여의 확대,
생산자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 대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호들갑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실제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리적 공포와 재활용이 생각만큼 잘되고 있지 않다는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비교적 잘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어쨌거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쓰레기 문제가 온 나라의 화두가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큰 바람이 불고 난 후에야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누적된 한국의 쓰레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과 재활용 체계의 문제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 문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가 2017년 7월에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9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난타를 당했다. 그런데 사실 환경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둔감했다. 수집, 선별, 재활용을 하는 업체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원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다. 국내 재활용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얽히면서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폐지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폐지 가격이 폭락했고, 공동주택과 거래하는 폐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는 폐비닐 및 혼합플라스틱 수거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한편,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양질의 선진국 페트병이 압축품 혹은 재생원료(플레이크)[1]의 형태로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재생 플레이크 및 압축품의 거래 가격을 연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민간 선별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비닐 반입을 거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선별잔재물[2] 처리 가격 인상[3],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성형고형연료 제품(성형SRF)[4] 제조업체의 고질적인 경영난[5]이 겹치면서 선별업체를 통해 폐비닐 재활용업체로 가는 흐름에서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수거 단계와 선별 단계, 재활용 단계로 구분되고, 폐지, 고철, 금속캔, 의류,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 등 품목에 따라 시장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영향이 각 단계 및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1 페트병을 파쇄해서 세척한 것을 플레이크라고 한다. 플레이크를 녹여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재활용한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의류를 만들거나 인조 솜을 만들 수 있다.

2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한다. 선별하고 남은 것은 폐기물로 다시 배출된다. 이것을 선별잔재물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배출된 혼합플라스틱을 선별하면 대개 40% 내외의 선별잔재물이 발생한다.

3 페트병 압축품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페트병은 혼합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선별장에서 유가품 선별량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페트병 가격 하락은 선별장 운영의 수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선별품 판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선별 인력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소각 단가 등 선별잔재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비용은 증가하면서 선별 업체의 수익성은 매우 나빠졌다.

4 성형고형연료 제품은 비닐을 가래떡 모양으로 압축 성형해서 10cm 크기 정도로 자른 것을 말한다. 이는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폐비닐은 약 70%가 성형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물질 재활용이 된다.

5 성형고형연료 제품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이번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폐비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고질적인 재원 부족과 환경부의 성형고형연료 제품 관리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의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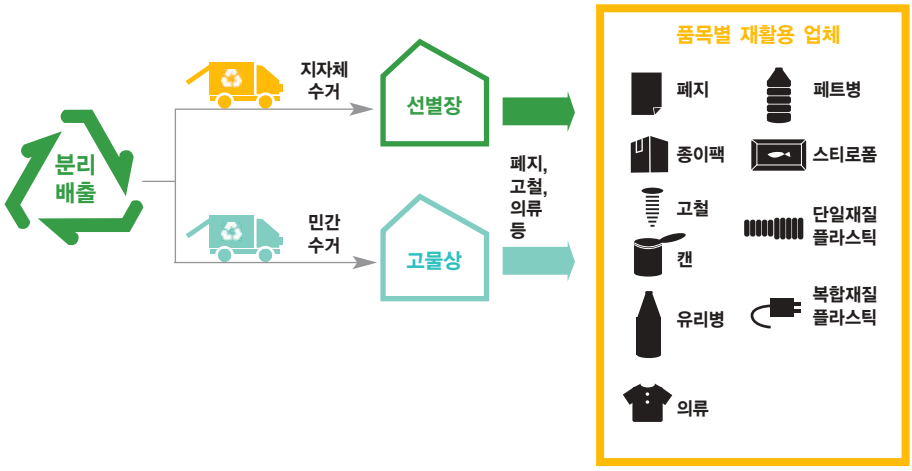
품목에 어떤 경로로 어떤 원인이 영향을 미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웠다.

둘째, 문제 발생 원인과 경로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국내 재활용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장의 동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은 물론 재활용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전문기관도 부재하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나 한국환경공단을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실적 관리 업무와 재활용 시장에 대한 단순 정보 취합을 넘어 국내 재활용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은 매우 취약해 보인다. 환경부도 재활용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채널이 다양하지 못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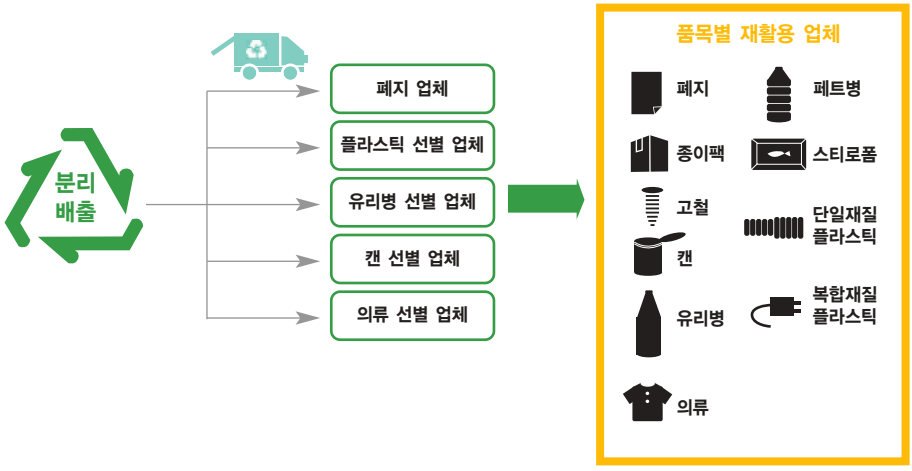
그렇다면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폐지, 페트병 압축품 등 유가품의 하락이 수거 및 선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런 충격이 수거 중단 사태까지 야기하게 되었는가? 나아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내 재활용 체계의 민낯은 무엇인가?

첫째,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에 대한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독특한 시스템은 재활용 시장의 변동에 취약하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에 대한 민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국내 재활용 체계의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민간시장이 활발할 경우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데, 민간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시장 변동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1〉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체계



〈그림2〉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체계



우리나라는 19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의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선별한 후 재활용하는 것이 종량

제 체계의 주요 원칙이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 폐지, 고철 등 유가품의 경우 수집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수거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6]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 재활용품을 수입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특히 페트병 등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가격이 급등했다. 따라서 이전에 돈이 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도 민간 사업자가 매입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2004년 폐비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시행[7]에 따라 분리배출되었다. 유가성이 없는 품목으로 지자체가 수거 및 선별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유가 재활용품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 때문에 유가성이 없는 폐비닐까지 다른 유가품과 함께 수거, 선별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8] 재활용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활용품 확보를 위한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과정에서 생산자에 의한 재질 악화,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미준수(혼란) 문제는 덮이거나 크게 문제 되지 못했다. 분리배출을 잘하지 않아도 잘 치워 가니 주민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고, 분리배출 상태는 더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면서 지자체와 생산자, 민간 사업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혼선이 발생했다. 그럼

6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하는 재활용업체는 주로 폐지를 취급하는 고물상이 하게 되고, 폐지 외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전문 업체에서 선별을 담당한다. 품목별 전문 선별업체로 품목별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유형은 전문 수거업체(폐지업체와 수거계약 체결)가 수거 및 운반을 하거나 폐지업체가 직접 수거 및 운반을 해주거나 선별업체에서 직접 수거 및 선별을 하거나 지역 및 업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들에게 생산자들이 판매한 제품이 가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될 때 이것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책임을 생산자들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고, 폐비닐 및 폐형광등은 200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공식 적용되었다. 정부에서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면 생산자들이 재활용 사업자에 재활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

8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폐지 등 유가품에 돈이 되지 않는 폐비닐을 '끼워 팔기' 한 것이고, 민간 재활용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장의 호황은 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렸고,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에게 시스템이 커다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둘째, 재활용 시장의 호황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에서 생산자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포장재에 대해 지자체가 수거 및 선별, 재활용해야 하는 책임을 생산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설계할 때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의 각 단계별로 지자체와 생산자의 책임과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포장재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했다.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전국의 가정에서 포장재를 포함해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고 있었다. 단독주택 지역은 지자체, 공동주택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수거 및 선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자들은 재활용 단계만 책임 지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수거 및 선별로부터 생산자들이 빠지고, 선별장에서 선별 후 유가품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산자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것이다.

재활용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에 대한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 주체가 모호할 경우 이번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폐비닐처럼 유가성이 없고,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폐비닐과 생산자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폐비닐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수거 및 선별의 물리적 책임과 비용 부담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초 작업이 부실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분리배출만

독려해서 폐비닐 분리배출량만 늘려온 것이다.

셋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생산자의 책임이 단순한 비용 부담에 한정되었고, 국내 재활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의 문제는 간과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페트병의 경우 유색 및 복합재질의 증가 문제가 많은 언론에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페트병 외에도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하지만 실제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포장재의 종류가 매우 많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한 것이다. 이처럼 재활용이 되는 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에 무임승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존재한다. 사실상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기만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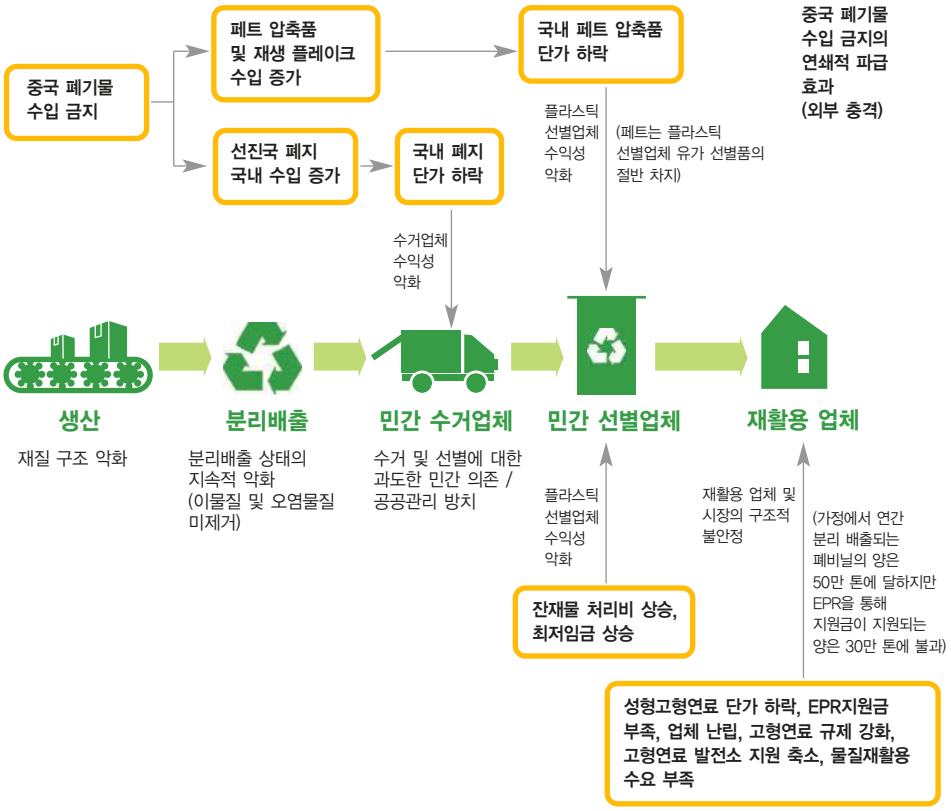
넷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고, 선별장의 선별잔재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분리배출을 적정하게 유

분리배출 기준을 어기고 배출된 재활용품 ©홍수열

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혼란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자체에는 분리배출을 독려하기만 할 뿐,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은 미흡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양이 증가하는 양적 성과 지표에만 매달려 재활용품에 대한 질적 관리는 사실상 방치했다.

다섯째, 플라스틱의 경우 국내 재생원료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 재활용 시장은 재생원료 혹은 재활용 제품의 소비까지 완결되어야 재활용 체계가

〈그림3〉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 원인과 재활용 체계의 문제



원활히 작동한다. 플라스틱은 국내 재생원료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량을 해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 해외 재생원료 수요의 변동에 따라 국내 재활용 체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국제 재활용 체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한국은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중국이 재활용품을 수입하는 압도적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에 폐기물과 재생원료를 수출하지만, 이번과 같이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할 경우 품목에 따라 선진국의 재활용품 혹은 반가공된 재생원료를 반입하여 재생원료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중국의 재생원료 생산기지가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지위에 있다. 이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사태를 국내 재활용 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각 단계별·주체별로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감량이라고 하면 비닐봉투나 컵과 같은 일회용품에만 한정하여 접근하는데,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 전체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개발 촉진, 과대포장 억제, 재사용 용기 활성화와 같은 생산 단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점 등 유통 단계에서도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나 뉴욕의 필러리the Fillery처럼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협 매장의

◀ 독일 오리기날 운페어팍트

▼ 뉴욕 필러리

경우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고민을 넘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 판매를 넘어,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의 비닐 포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 시 제품 박스 크기를 최소화한 슬림박스Slimbox[9], 플라스틱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한 패트팩Padpak은 물론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존은 간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 프로그램Frustration Free Pack을 실시하고 있으며, 러쉬LUSH는 샴푸를 고형비누처럼 만들어서 플라

9 제품의 크기를 자동으로 측정한 후 제품의 크기에 맞는 박스를 맞춤형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사용한다.

스틱 용기의 사용 자체를 줄였다. 스플로쉬Splosh는 샴푸를 리필형 고형가루로 판매해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접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남용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패트팩(Padpak) ▶

아마존 포장재 최소화 박스(사진의 왼쪽) ▼

러쉬(LUSH)의 샴푸

스플로쉬(Splosh)의 샴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생활 속 소비 습관의 변화와 정착이 필요하다. 일회용 컵과 생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부reject할 수 있어야 한다. 1950년대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처음 나왔을 때 플라스틱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한 번 사용한 컵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조바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을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에 중독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회용품 사용은 이전부터 있었던 당연한 소비문화가 아니라 생산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된 것이다.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한 용기 및 포장재의 재질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선별 및 재활용 현장의 심층조사를 통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여 생산 단계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생산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및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과 관련해 등급을 평가하고, 용기에 표시하는 재활용 등급 표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생산자

들이 소비자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용기를 바꾸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활용 등급 표시제를 강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소비자 운동을 통해 소비자 단체가 포장 및 용기의 재활용성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별 및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선별 및 재활용 단계에서 잔재물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상담 해주는 사례도 있다. 분리배출 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 대상의 교육을 진행할 때 단순히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유리로 된 것들은 모두 유리병과 함께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하지만 냄비 뚜껑과 같은 내열유리 제품, 크리스탈 제품은 유리병과 소재가 달라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칫솔이나 빨대, 볼펜 등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 제품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선별장에서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당연히 재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분리배출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넷째,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 선별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와 역할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자원순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주택이 민간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지 등 유가품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관리하고,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등 재활용 취약 품목은 공공 주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소각·매립 처분 부담금의 지자체 교부 비율 증가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선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의 관리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순하고 선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쓰레기 제로 마을" 혹은 "자원순환 마을"과 같은 목표는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없다. 초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처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이 목표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형 마을자원관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의류, 재활용품 등의 유가자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조(수거비용 절감액)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강화, 민간업체의 재활용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별 및 재활용 단계의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비닐류의 경우 선별 품질을 높여 고형연료 제품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탈피하여 물질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역 자원순환 완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분리배출만으

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 제품의 소비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쓰레기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은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고 있고, 위생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피해왔지만, 재활용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소비자와 주민 참여의 확대, 생산자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윤숙희*
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생협 활동은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더 큰 맥락에서
'순환과 공생'이라는
자연의 질서에 부응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 궁극적으로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생협의 활동과 가치를 응원하는 지구인.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일상에 지친 주인공이 고향 시골집에 내려와 농작물을 가꾸고 요리를 해 먹는 것으로 거의 모든 장면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150만 명을 동원하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영화 속 주인공은 배춧국부터 배추전, 아카시아 꽃튀김, 오이 콩국수 등 계절마다 나오는 제철 재료로 요리의 향연을 펼치고, 먹고 또 먹고, 친구들과 함께 또 먹는다. 자급자족하는 생활 속에서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주인공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간다. 자연과, 친구들과, 엄마와 그리고 본연의 자신과의 관계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생명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먹거리가 되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살리며 상생의 관계와 공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이윤 추구와 탐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대상화해 자연 생태를 파괴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며, 동식물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남용하여 멸종에 이르게 했다.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 논리 속에서 필요한 대책과 실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노력은 거대한 재난 앞에 무기력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여기, 삶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비를 공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으로 이끌어 농업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먹거리가 우리의 몸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업 방식을 지키는 동시에,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생산 방식과 물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바로 그들이다.

1. 순환과 공생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땅에서 먹거리를 거두어 생명

을 유지하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농사일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이 된다.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부미宇澤弘文는 '농사'란 자연과 조우하는 인간 본래의 생활 방식이며, '농업'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사의 범위를 농작물 생산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가공과 판매, 연구 개발까지 포함한 종합적 사업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각종 생산 활동과 생활양식이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생산물의 질 또한 건강·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우수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

아이쿱,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등 국내 주요 생협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친환경유기농업이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유기적 관계망을 통해 생명이 살아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3]. 생협 활동은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더 큰 맥락에서 '순환과 공생'이라는 자연의 질서에 부응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1 우자와 히로부미 (2000). 『사회적 공통자본 :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社会的共通資本)』. 이병천 옮김 (2008). 필맥.

2 윤병선 (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 유기농업운동과 생협운동, 지역먹거리운동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20집 1호. 131–160쪽.

3 정은미 (2006).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4권 2호. 117–137쪽.

2. 환경을 위한 생협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

농업과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의 문제는 소비자 식탁 위 안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보존과도 연결된다. 생협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식품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생태적 감수성과 공적 안목을 높여왔다[4]. 단순한 소비를 벗어나 나와 이웃,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와 생산 방식을 고민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 땅과 물을 살리는 활동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와 소득을 보장한다. 이는 생산자로 하여금 친환경유기농법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 땅과 물의 오염을 막고 지구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생산을 가능케 한다. 농지 트러스트 활동으로 구입한 농지를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지 보호와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과 수매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수매선수금 제도로 생산자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생협 생산자는 화학자재 사용을 줄이고, 축산분뇨를 재활용하며, 농사의 기반인 토양과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4 김도균, 이정림 (2017). 「지역생활협동조합의 동원과 성장 : 대전의 한밭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2호. 69–107쪽.117–137쪽.

✻ 우리쌀 지키기, 우리밀 살리기 운동

우리쌀과 우리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자연 환경을 살리는 것이다. 정부가 곡식의 수매제도를 폐지한 이후 국내 농산물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밀의 경우 멸종 위기에까지 몰렸다. 생협은 우리쌀과 우리밀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왔으며, 우리 곡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막걸리, 과자, 빵류 등의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우리 농업 지키기 100만 소비자 서약운동'으로 쌀 소비를 높이고, '쌀 지키미* 기금'을 마련하여 유기농 쌀 전환과 면적 확대에 사용하고 있다. 쌀을 재배하는 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한다. 벼를 수확하면서 얻는 볏짚, 왕겨 등은 가축의 먹이로 활용되며, 볏짚을 먹은 가축의 배설물은 소중한 거름이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가므로 유기농 벼농사는 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

10월 중순에 파종해 혹한의 겨울을 보낸 후 초여름에 수확하는 우리밀은 병충해의 위험이 적고 겨울철에도 파랗게 들판을 수놓으며 토양의 유실을 막고 다량의 산소를 공급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1ha당 165만 원에 이른다[5]. 1990년 밀 자급률이 0.05%까지 하락하자 각 생협과 농민들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계약 재배와 소비 촉진 운동, 물품 개발 등을 통해 밀 자급률을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우리밀 4,200톤을 소비했으며, 이는 전체 우리밀 생산량의 약 12%에 해당한다. 우리밀 소비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1만 2,600톤 감소시키고 산소를 1만 500톤 발생시킨 효과를 얻었다. 또한 우리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이웃과 함께 우리밀 국수를 나누는 '우리밀 국수데이' 행사를 지난 5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우리밀

5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oorimil.or.kr

글루텐'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밀을 100% 사용한 라면과 빵을 생산·공급하고 있다[6].

논 습지 보전과 논 학교

논은 쌀 경작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지구온난화 감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질 정화, 토양 보존, 홍수 예방 등의 기능을 가진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다. 국내 생협은 아시아 벼농사 국가들과 연대하여 논의 공익적·생물학적 가치를 알리고 공식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총회[7]에서 '논 습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힘써왔다. 결의안 채택으로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논의 생태학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행복중심생협은 환경위원회와 함께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논다 팀'을 구성하고, '논생물농법'으로 쌀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논생물농법은 벼의 성장에 따라 논의 물을 조절해 잡초의 생장을 억제하고, 쌀겨 등으로 만든 발효 거름을 논바닥에 깔아 생물 다양성을 늘려가는 것이다[8]. 논 생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먹이사슬이 이루어져 병충해가 줄어들고 잡초 억제 효과도 볼 수 있다. 유기농 쌀 한 말(8kg)을 이용하면 약 7평 정도의 논 습지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 논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본다면 논이 보존할 수 있는 토양 유실량과 맞먹는 댐 건설 비용은 666억 7,042만 원, 논의 관개수가 지하수로 저장되는 양은 157억 5,000만 톤으로 전 국민의 수돗물 사

6 아이쿱 2017년 연차보고서.

7 람사르총회라 줄여 부르는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는 생태계에 꼭 필요하나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습지 소실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된 '람사르협약'에 속한 회원국들이 지구 차원의 습지 보전 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는 국제환경회의이다.

8 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http://happycoop.or.kr

용량의 2.7배이다. 벼가 대기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연간 616만 5,007톤으로 보리 등 9종의 다른 곡식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24배나 된다. 벼농사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비용은 4,178만 원인 반면, 벼농사의 산소 공급 효과는 2조 3,905원[9]이다.

아이쿱생협은 주곡 생산지에서 논생물다양성 농법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메벼 생산량의 1.9%인 124톤을 생산했으며,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그 양이 늘고 있다. 또한, 논 습지 보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논 생물 조사, 논 학교 운영, 국내외 연대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전국 15개 조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논 학교를 운영하여 2,700여 명의 조합원이 논농사를 체험하고, 오랜 세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논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했다[10].

✻ 자원순환형 축산과 동물 복지

자원순환형 축산 기술은 농민의 영농과 생활의 근거지인 지역의 자원과 관행 속에서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어져왔다. 동물을 자연 상태에 방목하여 동물의 생리와 행동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은 사료로, 동물의 분뇨는 거름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현황 축산 기술로 축산 농가는 경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축산을 진흥시키는 동시에 생태와 환경 보존에도 기여한다.

국내 생협들은 동물 복지와 환경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의 특정 부위만 소비하고 폐기하는 식의 방식을 지양하고 가공식품으로의 개발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온전한 소비를 실현하고자 한다. 방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곡물사료의 비중

9 최수연 (2008). 『논 : 밥 한 그릇의 시원』. 마고북스.
10 아이쿱자연드림 블로그 https://blog.naver.com/icoopkorea

을 줄여 유기농가의 볏짚을 먹이거나 Non-GMO 곡물사료로 대체하는 등 최대한 자연의 질서에 맞는 축산 시스템을 마련해온 생협의 노력은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없이도 양질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부터도 안전한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350여 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이후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상적 가축 전염병이 되어버렸다. 백신 처방과 무차별적 살처분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고기를 얻기 위해 좁은 우리에 동물을 가두고 생산에만 치중하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농후사료의 투입과 항생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면역력 약화와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가져와 질병에도 취약하게 만든다. 이는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높이는 것이며,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토종씨앗 지키기[11]

옛 농부들과 어머니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 하나는 좋은 씨앗을 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고 질병에 강한 씨앗을 지키고 개량해 다시 씨를 뿌려 후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연의 순환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사명이었다. 하지만 그 고유한 사명이 대기업의 사유화로 사라지고 있다. 땅과 물, 씨앗, 농사기술 등 다양한 자원을 농민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즉 농부권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몬산토Monsanto, 듀폰DuPont, 신젠타Syngenta 등 10대 다국적기업은 세계 종자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

11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홈페이지 '토종씨앗' 관련 내용 정리.

고 있으며, 600만 품종의 씨앗 중 90%를 소유하고 있다[12]. 튼튼한 종자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미네이터 기술을 사용해 씨앗의 발아 기능을 없애고 특허권이란 제도를 통해 종자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IMF 이후 국내 종자 소유권의 다수가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갔으며, 2002년 국제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이후에는 모든 식물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국적기업들의 GMO 종자 개발과 유통은 종자 오염 확산과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중심생협은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과 함께 토종씨앗 채종포[13] 공동 경작과 토종씨앗 보존운동을 펼쳐왔다. 토종씨앗이란 지역 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잘 적응한 작물의 씨앗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발아가 가능하고, 자가 채종을 통해 5년 이상 된 씨앗을 말한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은 앉은뱅이밀, 쥐이빨옥수수, 구억배추, 개쎄바닥상추 등 이름도 유별난 토종 채소들을 찾아 다음세대를 이어갈 종자를 모으고 있다. 그 외에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기금 모금, 채종포 공동 경작, 생산물 소비 등의 체계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강원도 횡성군과 홍천군에서 토종 수수, 콩, 감자, 옥수수 등 230kg의 토종작물을 수확했다. 현재 식량자급률이 22%가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의 먹거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자원인 씨앗의 사유화를 막

12 6월 초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사그룹 바이엘(Bayer)은 몬산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향후 두 달 안에 매각을 완료하면 몬산토와의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바이엘과 몬산토 외에도 2015년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합병, 지난해 말 중국 국영 화학회사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 등 최근 화학회사와 종자회사 간 인수합병으로 종자 시장은 사실상 3개사의 과점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편집자 주)

13 종자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밭.

출처 : 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고 식량 주권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토종씨앗을 지키고 공유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공정무역 : 마스코바도 설탕과 발랑곤 바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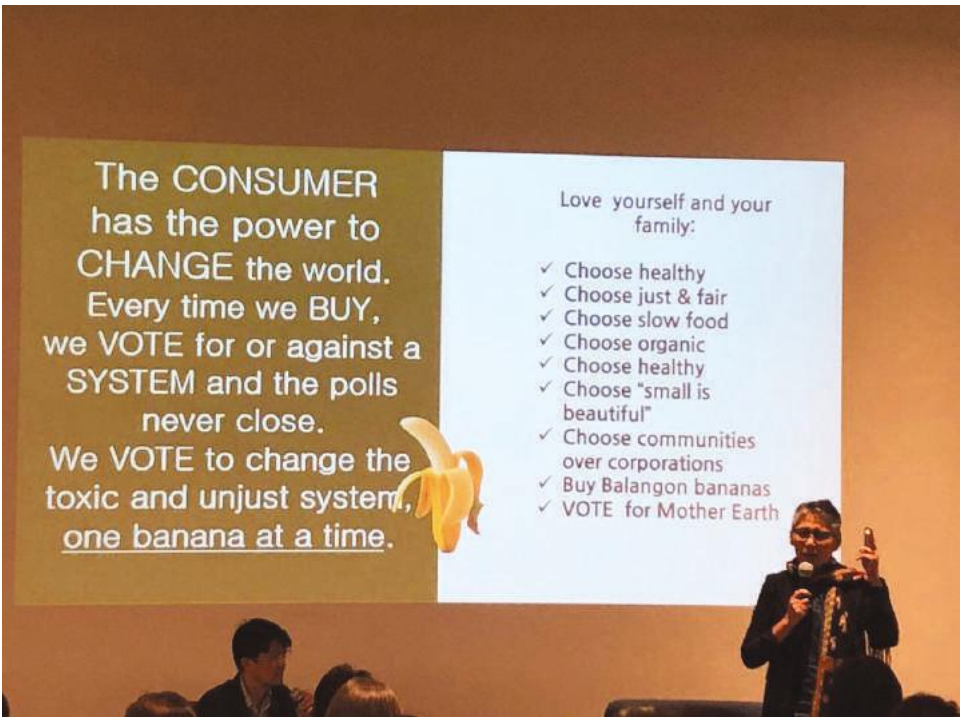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생협은 제3세계와의 공정무역을 통해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 수준의 협동을 실현하고 있다. 공정무역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설탕, 커피, 바나나 등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품들을 공급하고, 제3세계 생산자의 자립과 친환경 생산 방식을 지원한다. 그 중에서도 마스코바도Mascobado 설탕은 1980년대 중반, 국제 설탕 가격의 급락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던 필리핀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자들의 자립을

출처 : 더페어스토리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정무역의 대표 물품이 되었다. 한국 생협 중 가장 처음으로 2004년부터 마스코바도 공급을 시작한 두레생협은 설탕 판매 대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우물, 수도관, 펌프 등의 관개시설을 마련하고, 설탕을 운반하고 농사의 힘이 될 가축 분양을 지원했으며, 응급장비를 갖춘 건강센터도 설치하여 생산지의 자립과 생활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두레생협이 공급하고 있는 발랑곤Balangon 바나나는 네그로스 지역민의 자립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국적기업의 단일 대규모 농장이 아닌 발랑곤 지역의 야생 정글에서 자라는 발랑곤 바나나는 지역 주민들이 키우는 소, 염소 등의 가축 배설물과 코코넛 열매 껍질 등을 퇴비 삼아 자란다.

아이쿱생협 역시 2007년부터 공정무역을 시작해 초콜릿과 커피가 대부



출처 : 두레생협

분이던 공정무역 제품을 후추, 바나나, 와인으로 다양화했다. 2017년 공정무역 거래 규모는 99억 원으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소속 단체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생산자에게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친환경 생산 방식을 지원하며, 자립을 돕는 공정무역은 물과 토양, 음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공동체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소비를 통해 생산자의 삶과 지구 환경을 돕는 협동의 방식이다.

2)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생협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과 캠페인의 지속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이

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 있으며, 가입 후에도 마을 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에서 식품안전과 물품, 기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강좌가 이어진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은 생협의 사회적 목표와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하게 된다.

✻ 식품안전 교육

생협에 가입하는 주된 동기는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이다. 환경이 나빠지면서 아토피 증상과 식생활에서 비롯되는 병이 더 많이 나타난 것도 생협 조합원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각 생협은 식품안전과 환경호르몬, 화학약품 등의 유해성을 알리고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교육함으로써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의 변화를 견인한다. 또한 개인의 삶과 이웃, 지구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친환경 식품을 소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생활을 단순화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의식적 노력으로 환경에 미치는 해를 줄이는 행동을 이끈다. 눈앞의 먹거리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나아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냈으며, 어떤 경로로 왔는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식품안전 교육의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2003년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에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차별 없는 급식을 통해 평등한 교육권과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와 생태 환경의 회복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 급식 납품 시장을 건강, 환경과 생태, 지역사회와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

으로 원산지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를 확인하고, 우리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환경과 경제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14].

GMO 완전표시제

생협과 생산자 단체, 환경 단체들은 꾸준히 GMO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GM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에는 생협과 소비자, 농민 단체가 함께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시작했으며, 한 달 만에 2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가공 중에 첨가할 경우, 이에 대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과 환경,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각 생협은 GMO가 포함된 물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물품 취급 기준에 따라 부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공식품과 첨가물을 Non-GMO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대안 물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GMO 옥수수 사료를 일체 먹이지 않는 목장에서 우유를 공급받고 Non-GMO 사료를 먹인 가축만 취급하는 등 GMO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나중에 올 미래세대에게도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고 먹을 것이라곤 옥수수가 전부인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은 우리가 잘 쓰

1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012).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동포럼.

고 보존하여 앞으로 올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국내 생협들은 건강한 소비와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과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농업과 환경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왔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자연을 공정한 관계로 연결시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와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올해 4년째 접어드는 아이쿱생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 녹색 도시의 이상적 모델을 보여준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생산 공정을 한데 모아 생산과 유통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친환경유기 클러스터 모델이 확산되고 사회적 변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양적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족을 친환경적 소비와 생산 시스템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동시에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이다.

더 나아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산림 보존과 녹색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적 삶으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롤모델로 일본의 코프삿포르COOP札幌와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Totnes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 절감을 사업 목표로 매장의 건축과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유통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5~50% 수준까지 줄이려 노력하는 코프삿포르는 폐식용유로 가공한 BDF바이오디젤 연료를 생협 공급 차량 연료로 사용한다. 조합원은 나무 심기와 리사이클링 등 자연 친화적 운동을 이어가며, 매장과 조합원의 적극적 협조로 재활용품 수거와 분리 사업으로 수익도 내고 있다. 조합원의 참여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병과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한다.

영국 남서쪽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는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에너

지 사용을 줄이고 효율은 높이며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가고자 한다. 종자를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수확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창고, 인위적 구조물 없이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심은 나무, 태양열 발전, 비를 모으는 수로를 설치하는 등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 생협 역시 지구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식, 교육, 에너지, 경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자연의 순리와 공존의 철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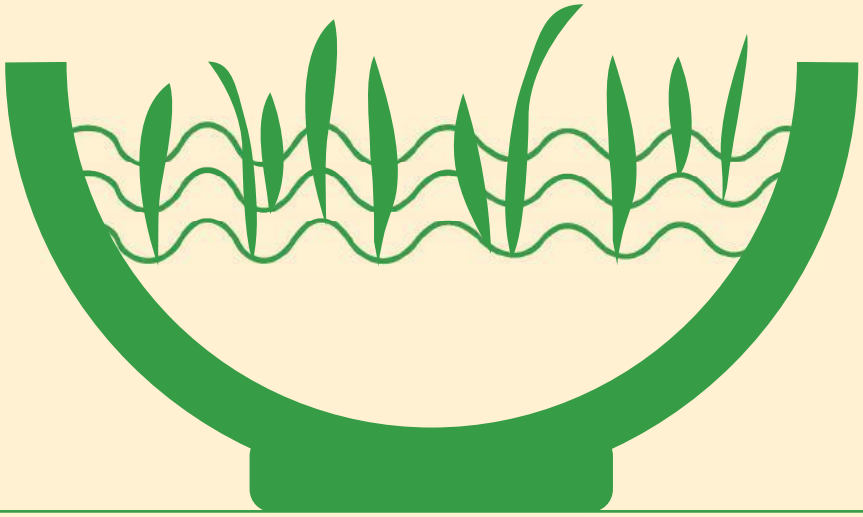
참고자료
· 서민수 (201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학교 운영 사례」, 『한국환경교육학회 2014 하반기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1–146쪽.
· 신성식 (2011).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푸른나무.
· 통계청 (20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두레생협 홈페이지 http://dure-coop.or.kr
· 아이쿱 홈페이지 https://www.icoop.or.kr
· 아이쿱자연드림 블로그 https://blog.naver.com/icoopkorea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oorimil.or.kr
· 행복중심생협 홈페이지 http://happycoop.or.kr

지속가능한 농업을 책임지는 소비자 되기,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 되기,
밥을 나눠 먹는 관계망 넓히기….
이런 삶이 생산과 소비와 생명이 하나인,
이미 있었던 공동체의 원형을 닮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이다.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실천들은
생협 안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

특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생협은 협동의 힘을 통해 공동생산과 공동구매라는 특성에 따라 운영을 하고, 친환경 농업과 식량 자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거부한,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 먹을거리 운동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반성과 일상의 자치운동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먹을거리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협 조합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한살림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 GMO 반대운동

그동안 TV로만 보았던 청와대 분수대 앞을 최근에 세 번이나 다녀왔다. 3월 12일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조직과 60여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시민청원단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 4월 12일 20만 명의 청원(21만 6,886명 참여)이 완료된 청와대 답변 요구 기자회견, 5월 9일 청와대 답변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일정이었다. 청와대 답변은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기업 논리를 그대로 옮겨 쓴 듯한 내용으로 사실상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는 답변이었다.

20여 년 진행해온 GMO 반대운동은 시민의 건강권은 물론 시민주권인 식량자급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국적기업의 GMO 종자는 유전자변형을 통한 종자 특성의 인체 위험성뿐 아니라, 종자 독점과 종자와 한 몸인 제초제와 농약의 남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구 환경오염으로 귀결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GMO 작물 농업과 대척점에 있다. 이는 소농과 기업농의 대결이며, 종자 전쟁이다. 이미 소수의 초국적기업은 세계 종자주권을 다량 확보하고, 이에 더해 GMO 종자를 개발하여 종자시장을 GMO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이 입증되고 있는 GMO 임상 결과를 가볍게 무시하거나 매장시키는 등 그 위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식용 GMO 작물 수입국이지만 원재료 기반 표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먹을거리 선택권에 앞서 GMO에 대한 정보조차 막혀 있는 상태로 지난 20여 년을 보내며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증가했다. 질병과 GMO 먹을거리의 역학관계는 계속해서 추적되고 있다. 먹을거리 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 GMO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20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GMO 반대 국민청원은 새로운 시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시된 'GMO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Non-GMO 표시 허용'은 시민의 건강과 주권 회복 문제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종종자 운동과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을 통해 GMO의 대안을 넓혀 나가고, 궁극적으로 GMO 작물, GMO 식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탐욕의 다른 모습을 한 '새로운 종자 GMO' 대신 생명의 먹을거리로 지속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농업

정부의 식량증산 계획으로 1970년대 농약과 화학비료가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농민 사망사고가 속출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농민의 80% 이상이 농약중독을 겪게 된다. 이에 농민운동은 새로운 가치 인식과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전환되었고, 1980년대 후반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생명공동체 운동이 확장되었다. 가톨릭농민회 회장을 역임하고 원주에서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주도하던 박재일은 1986년 12월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작은 쌀가게를 열어 한살림을 시작했다. 한살림 생협은 농업이 인간

DMZ 평화농장 손 모내기 체험(2017)

삶의 기초라는 인식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농 공동체 운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실현하고 있다.

2008년 여름, 아산·당진 지역 한살림 생산자조합 소속 유기농가의 친환경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형이 낮은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의 질소와 인 성분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나 생산자도 모르고 있다가 수질검사에서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동고서저 특성을 갖는 한반도 지형으로 서해안 쪽 농

경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허망함에 빠진 생산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농수로에 추가로 정화시설을 만들고 물 정화용 붓꽃을 심는 등 바삐 움직였다. 논두렁에 줄지어 서서 설명을 듣던 소비자 조합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는 벼만 응시했다.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현장이었다. 결국 그해 아산, 당진의 971톤 유기농 쌀은 '미인증 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전 예약까지 하며 100% 책임 소비를 하고, 인증제도의 허점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은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가치를 확인하며 도농 공동체 운동에 큰 신뢰를 쌓는 한편, 오염된 우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정부 농업용수 인증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유기농 쌀 생산지에서는 이후 한 달은 꼬박 논바닥에 엎드려 지내야 한다. 벼보다 빨리 자라는 풀을 뽑는 시기를 놓치면 그해 쌀농사를 망치기 때문이다. 우연히 수입 우렁이 양식장에서 풀을 먹는 우렁이를 발견한 뒤 도입된 우렁이 농법은 풀매는 유기농 농부의 일손을 돕는 일등공신이다. 햇빛, 공기, 물, 흙, 벌레, 농민의 땀과 미생물까지 참여하여 농사짓는 유기농 쌀의 가치와 유기농지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이다.

2014년 파주 DMZ 안에 조합원 출자와 조직 기금을 통해 한살림 평화농장 3,000평을 마련했다. 임진강 옆 장단반도 일대 갈대밭을 개간하여 조성한 유기농지이다. 그런데 장단반도 유역 임진강은 한동안 홍수 예방을 이유로 4대강 공사와 같은 준설사업이 시행될 계획이었다. 지역 단체와 농민들이 연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한강 유역 환경청의 부동의를 얻어내 준설을 막아낼 수 있었다. 협동으로 마련한 유기농지가 농사를 채 지어보지도 못하고 임진강 준설토 하적장으로 바뀔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평화농장 조합원 출자는 DMZ 공간에 '농사로 일구는 평화'라는 가치

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라지고 있는 농지를 지키고 그 농지에서 영그는 쌀 한 톨 한 톨이 생명평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2016년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어 모내기와 벼 베기 등 도농 교류를 진행하고, 수확한 유기농 쌀은 전량 친환경 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3. '침묵의 봄',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지난 2017년 우리는 살충제 달걀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A4 용지 두 장 크기의 양계장 케이지에 갇힌 채 공산품처럼 생산되는 산란 닭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밀집 사육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진드기 감염을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산란계에서 발견된 살충제 성분은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친환경 양계 조건의 최상급인 곳에서 발견된 것이기에 충격은 더했다. 닭은 땅을 부리로 파고 고르는 습성이 있는데, 방사된 닭이 오염된 땅을 쪼아 먹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었다. 그 땅은 과거 과수원 부지였는데, 30년 넘게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은 땅이었다. 50여 년 전 『침묵의 봄*Silent Spring*』(1962)에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경고했던 내용이 증명된 것이다. 생산자는 억울함을 항변했지만, 결국 건강한 닭들은 살처분 되었고 친환경 양계장은 폐업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재앙을 이번에는 고스란히 닭에게 덧씌우고 말았다.

"해충을 완전히 박멸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며 해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제철에 맞게 작물을 고르게 심으면 먹을 만큼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한살림 생산자의 증언이 레이첼 카슨이 내놓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안과 겹친다. 협동조합의 나라 덴마크

는 '인간의 욕망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핵심이다.

4. 물을 살리는 비누, 물살림 운동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공기, 땅, 하늘을 되돌려 주는 일은 우리들 주부의 일이고 어른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오늘도 나는 이웃에게 합성세제를 풀어먹이지 않았다."라는 1989년 한 조합원의 '한살림 일기'가 방송에 나오면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살림은 더 이상 집안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세계'를 발견하고 '병들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지구와 뭇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땅과 물과 하늘을 살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없으며, 이는 혼자서 할 수 일도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합성세제 사용을 멀리하고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어 쓰는 운동을 펼치던 중,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수질 오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합성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확인되었고 조합원 활동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때 한살림은 해고 노동자 5명이 모여 만든 생산 공동체와 손잡고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가루비누 생산을 시작했다. 이 작은 생산 공동체는 '물살림'이라는 상호를 달고 2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은 당당히 자립하는 생산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물을 살리기 위한 비누, 물살림 운동은 조합원들의 생활실천 운동과 자주관리 협동조합 형태의 작은 생산자 공동체를 자립 가능한 생산자로 함께 성장시켜 '호혜의 공동체'를 만든 사례로 남았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6주기 '나비행진'(2017)

5. 탈핵운동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조직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생명적인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다양한 탈핵운동을 펼쳤다. 또한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치를 만들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70여 개 단체)'에 참여하고 각종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데도 힘썼다. 또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생활 속 실천 과제를 만들어 공유하고,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과 탈핵을 위한 조합원의 생활양식 전환운동을 펼쳤다.

1. 가까운 먹을거리를 이용하며 간단히 요리하기
2.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3. 실내 적정 온도(여름 28도, 겨울 20도) 유지하기

한살림 안성 햇빛발전소 전경

4.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전등을 끄고 생명의 촛불 켜기
5. 이웃과 핵 없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6. 핵을 반대하는 정치, 지자체장에게 투표하기

—한살림(2012)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생활 속 실천 과제'

2012년 한살림에서는 탈핵 대안운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결정했다. 햇빛발전소 출자운동에는 1,300여 명 조합원이 참여하고 예정한 9억 원을 훌쩍 넘겨 13억 원이 출자되어, 2014년 새로 건립되는 안성 물류센터 지붕과 지역 생산지에 500kWp 햇빛발전소를 건립했다. 2018년 현재 한살림 햇빛발전소는 누적 CO2 절감량은 1,091톤으로, 30년 수령 소나무 16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내었다. 탈핵에 대한 염원 속에서 공통의 필요로 모아

진 조합원의 힘은 에너지 전환을 실험하는 신나는 경험이 되었다. 2017년에는 2차 햇빛발전소 건립운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하여 10억 원의 출자금을 조성했고 올해 가공생산지 지붕에 약 400kWp 용량 발전소 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6. 생활실천운동 : 에코 가족운동, 식생활 교육

에너지와 소비 문제에 대한 조합원 학습 모임인 '에코가족운동'을 주기별로 운영했다. 각 가정의 에너지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여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플러그 뽑기에서 시작하여 전자제품의 거품 빼기, 소비생활 등 일상의 점검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냉장고 다이어트'는 과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참여자들이 전과 후 냉장고 안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생활의 전환을 약속하는 활동이었다. 가정용 대형 냉장고에 과소비를 일으키는 경제 작동 원리가 있고, 그 안을 가득 채웠던 식재료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서가 모아졌다.

>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냉장고에 쌓여가는 것이 내 탐욕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가족의 한 끼, 이웃과의 한 끼에는 그리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 냉장고 사이즈를 줄여 전기 사용도 줄이고 낭비 없는 알뜰한 소비를 하겠다.
>
> —한살림고양파주, 에코가족 평가서(2016)

생협의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국민식생활교육네트워크, 경기식생활교육네트워크, 고양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 활동은 초·중·고등학교 식생활 교육과 영양교사 및 시민 대상 식생활 교육이다. '식단, 요리법, 첨가제 문제, 직접 요리

하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농지에서 직접 생산 체험 수업까지, 먹을거리의 순환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건강, 환경, 배려'라는 식생활 교육의 가치는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까지 담아낸 먹거리 교육으로 생협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발휘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교육 활동으로 껍질 채 먹는 요리, 남은 식재료 활용법 등 다양한 요리법과 생 쓰레기 퇴비화를 통해 텃밭과 베란다 작물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살림 고양파주생협 생활실천운동(2018)

7. 옷이 학교가 되는, 의류 재활용 사업

한살림에서는 국내 농업 보호정책으로 국제 물품 교역 없이 오랫동안 아시아민중기금에만 참여해오다가 2년 전부터 설탕을 공급(선택)하고 있다. 아시아민중기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곳 중에서 파키스탄 무료학교 지원재단과 연결되어 작년부터 한살림에서 '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재활용 옷을 모아 수출하여 그 기금으로 파키스탄 슬럼가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면화 수출 4위국인 파키스탄은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으로 교육과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의류시장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버리는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아깝지만 내 몸이 변하여 못 입는 옷을 골라서 모은 옷이 학교지원금으로 쓰이는 의류재활용 사업은 조

2018년 한살림 옷되살림 운동, “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합원들에게 새로운 살림운동이다. 쏟아져 나오는 옷을 끊임없이 구매하는 소비 행태에 대한 반성과 같은 지구인으로서 소비와 부가 편중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포함된다. 쓰레기장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학교 교실 안에서 방문자인 우리를 반겨주던 아이와 한살림 매장에 마련된 재활용 의류함에 가져온 옷을 넣던 엄마와 함께 온 조합원 아이는 지구촌 운동으로 만나고 있다. 생협이 공정무역을 넘어 민중교역으로 인적 교류와 소농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처럼 옷이 학교가 되는 의류재활용 사업은 시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있는 국제연대 활동이다.

8. 병 재사용 운동

한살림은 자원순환운동으로 2015년부터 5종류의 규격 병에 대해 재사용을 시행했다. 물류센터 안에 병 세척시설을 만들고, 병에 붙은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행구어 매장에 반납 하거나 공급 시 수거하고 있다. 빈병을 요긴하게 재사용하던 조합원들이나 귀찮아서 내놓지 않던 조합원을 설득하며 자원순환운동을 운영했다. 30% 이상 수거가 일반화되면서 세척시설 가동은 정상화되었지만,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세척병의 순환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원 보존 운동이자 순환운동인 유리병 재사용 사업은 여러 조직이 연대하여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 생협의 경우, 대표적 재사용 병인 우유병은 일반 우유병과 달리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고가이지만, 여러 생협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재사용 병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리병의 재질을 보강하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러 생협이 함께 재사용 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올해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중국 왕구량 감독의 〈플라스틱 차이나 Plastic China〉(2016)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산업을 고발한 영화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인터뷰에서 왕 감독은 "다른 국가로의 쓰레기 수출은 비양심적인 행위다. 자국 쓰레기는 자국에서 해결할 때 쓰레기 재앙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귀촌한 지인은 시골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이 쓰레기 문제였다고 한다. 도시에서는 분리를 해서 내놓기만 하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쓰

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에 무감각했는데, 시골에서는 집에 쌓여만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한다.

생협에서는 포장지 문제에 대한 항의와 제안이 조합원들로부터 자주 들어온다. 비닐 포장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에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특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물류 시스템을 통해 물품이 들어올 때 소포장 없이는 이동 과정에서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제품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 인증에 따른 물품 포장 규격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생협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담아내는 동시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영국 토트네스Totnes 식품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별 포장 없이 상자에 들어 있는 물품을 각자 낱개로 담아 간다. 로컬 물품들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의 전국 물류 시스템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한살림도 통합 포장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포장재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작게는 가방 안에 장바구니를 넣고 다니는 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10. 맺으며

한 기업의 가전제품 광고를 보았다. 아이들과 친정에 놀러 온 젊은 엄마, 퇴직을 하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친정아버지는 세탁기에서 건조된 옷을 꺼내며 딸과 손녀를 반기고, 함께 음식을 하고 나누는 가족은 음식 냄새를 걱정하며 옷 소독기에 겉옷을 넣고, 친정 부모님을 부러워하는 딸의 한마디로 광고는 끝을 맺는다. "평범하고 소소한 생활"의 서포터 역할을 강조했다는 이 광고는, 의도와는 달리 고소득층 가정을 배경으로 물질적 풍요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를 충동하는 자본주의 원리의 한 단면이다.

소비만을 강조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누구의 몫일까.

쓰레기의 문제까지 책임을 지는 소비, 에너지의 문제와 먹을거리의 문제에서도 개인의 책임을 인식할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자연 개발과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 작동 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립적 삶이 작동되어야 한다. 소박한 삶 실천하기, 몸을 이용한 자급 가능한 것 찾기 등이 우선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삼쇠Samsø라는 덴마크의 작은 섬은 주민이 에너지의 생산자이다. 4,000여 명 전체 주민이 출자하여 섬 안과 주변 바다에 풍력발전소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기, 이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책임지는 소비자 되기,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 되기, 밥을 나눠 먹는 관계망 넓히기…. 이런 삶이 생산과 소비와 생명이 하나인, 이미 있었던 공동체의 원형을 닮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이다.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실천들은 생협 안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

참고도서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 한살림 20년의 발자취』. 그물코.
· 오로지 (2015).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명지사.
· 마이클 부스(Michael Booth, 2015).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 미친 듯이 웃긴 북유럽 탐방기』(The Almost Nearly Perfect People : Behind the Myth of the Scandinavian Utopia). 김경영 옮김(2018). 글항아리.

김경하
더나은미래 부편집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미션에 근거해 사업을 펼치고 있느냐다.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기업의 미션’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지 않은가.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도록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일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생각한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2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시민 불안감도 커졌다. 지난 5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839명이 가장 불안해하는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 오염'(5점 만점에 3.46점)이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 3명꼴이다.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수억 원을 배상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 수준은 형편없다. 환경부가 전국 석탄화력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대기배출부과금' 총액은 겨우 70~80억 원 수준이다. 이 또한 '총량 규제'가 아니라, '농도 규제'에 그친다. 환경 규제가 헐거운 한국은 기업하기엔 좋은 나라일지 몰라도, 이젠 환경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다.

사실 기후변화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나라가 사라지고, 기습적인 대형 태풍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세계

지난해 3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3.5도 이상 상승할 경우 전 세계 생물종의 40~70%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서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된 사회문제였다. 상당수가 환경문제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풀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온 국민이 직접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학부모가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회 토론회에 나서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반갑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즈니스는 위기를 맞았다. 2007년 이후 유럽연합EU 내 24개 알루미늄 제련소 중 세계 1, 2위를 다투던 알루미늄 제련소를 포함해 11곳이 폐업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전 세계 환경보호 기술 규제는 322건으로 역대 둘째를 기록했고, 특히 중국의 기술 규제가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의 기업은 '환경 리스크risk'를 무시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반대로, 기회는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1] 브랜드부터 시민 소유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1세대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현주소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성공 전략을 짚어본다.

1 업사이클링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에 속하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2. 자동차 폐가죽으로 만든 패션 브랜드, 모어댄

최근 떠오르는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모어댄MORE-THAN'이다. 모어댄은 자동차 폐가죽으로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다. SK 최태원 회장이 '2018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모어댄 가방을 가지고 나와 직접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해 화제가 됐다. 이어 SK그룹과의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현장에서도 김동연 부총리에게 모어댄의 백팩을 소개했고, 김 부총리가 구매한 것으로도 유명해졌다.

▲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모어댄이 만든 백팩을 착용한 트위터 사진. ©랩몬스터 트위터

▼ 모어댄 브랜드 '가방이 된 자동차' 컨티뉴(continew) 백팩 소개 이미지. ©'컨티뉴' 홈페이지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랩몬스터RM가 모어댄 백팩을 멘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RM백'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랩몬스터가 착용한 가방이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폐차장에서 나온 자동차 시트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개념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이어 개그맨 강호동,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등 연예인들이 잇달아 모어댄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1년간 모어댄의 인지도도 훌쩍 성장했다. 작년 3월 정도만 해도 한 달에 10~20개가량 판매했다면, 올해는 400개 이상 판매하고 있다. 3년 전 환경의 날(6월 5일)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인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한 가죽 시트와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 가방, 지갑, 신발 등을 만든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모어댄의 미션이다.

왜 하필 자동차 폐기물일까.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나와도 안전벨트와 시트는 해결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최이현 모어댄 대표는 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냈다. 매년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만 400만 톤가량, 자동차 폐가죽으로 가방이나 패션 아이템을 만들면 매립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 더구나 자동차 시트 가죽은 고온과 습기, 수많은 마찰 등 외부 환경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죽보다 4배 정도 비싼 고가의 재료였다.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질 좋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모어댄에서는 폐가죽을 수거한 뒤, 자체 기술로 가죽을 세척 건조하고, 열로 코팅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동차 폐가죽을 재활용했을 때, 가방 1개당 1,642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폐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지만, '친환경적인 소비'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디자인과 품질로 1차적인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다. 명품 브랜드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던 분들에게 상품 기획과 디자인을 맡기고, 수십 년간 명품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온 장인들에게 제작을 맡기고 있다. 또한

채용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실제로 모어댄 직원 20명 중 13명이 경력단절여성이다(2018년 3월 기준).

제품 가격은 2~3만 원대의 카드지갑이나 쇼퍼백부터 10~30만 원대의 백팩이나 토트백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2016년 9월 정식 출시한 후 웹사이트뿐 아니라 교보문고 핫트랙스와 백화점 등 11군데에서 숍인숍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2017년 9월에는 고양 스타필드에도 입점했다. 모어댄이 한국의 '프라이탁FREITAG'[2]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3. 시민들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무섭다. 2017년 OECD가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2006~2016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23년 전인 1990년보다 2.38배 증가했다. 특히 OECD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60년 조기 사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1,109명으로 2010년(35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2,052명)과 인도(2,0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탈석탄'에 방점을 둔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에는 203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 스위스의 유명 업사이클링 가방 브랜드, 트럭 위에 씌우는 방수천으로 가방 천을 만들고, 어깨끈은 폐차에서 뜯어낸 안전벨트로 만든다. 평균 가격이 50만 원을 넘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예쁘고 비싼 쓰레기'로 불리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올해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제도 신설한다. 신재생 설비 용량 비중은 올해 전체의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변화 이슈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행보가 기대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2013년 2월 설립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공공시설 옥상에 햇빛(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주택에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에너지 시민혁명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30여 명의 시민 출자자들이 설립한 유한회사 '시민발전'이 모체다. 시민발전은 한국 최초의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로서 서울의 부암동에 있는 에너지전환 사무실, 파주 창비 출판사, 부안의 원불교 교당, 부안성당, 부천 지평교회, 일조각, 청파교회 등 전국 각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함께 법인 형태를 변경하면서, 한국 최초의 에너지협동조합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로 주력하는 활동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다.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소 보조금 지원사업과 함께 성장해왔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시작, 2014년부터 지자체로는 최초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대개 260W짜리 미니 발전소다. 한 달

평균 양문형 냉장고의 월 사용량인 2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연간 6만 4,000원~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한전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전기 전압보다 출력이 높아,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먼저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전기계량기상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5년간 약 7,000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다.

개인이 직접 태양광 전지판을 구매해 설치할 수도 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 전지판을 설치하면 무엇이 다를까. 핵심은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전기를 더 싸고 많이 쓰는 데 있지 않다는 것.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습관을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둔다. 에너지 생산 외에도 에너지 관련 교육,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학교나 공공기관의 옥상에 대용량 전지판 설치사업도 진행한다. 2014년 4월에는 8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서울 상원초등학교 옥상에 37.2kW 용량의 전지판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조합원들은 매년 3~5% 가까이 출자배당을 받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400여 명 수준인데, 조합원이 많을수록 큰 단위의 태양광 사업도 펼칠 수 있다. 발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몫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좌우한다. 미세먼지 이슈로 전 국민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기회일 수 있다. 독일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이다. 덴마크는 총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70%(약 100조 원)를 협동조합을 통해 충당한다. 대표적인 곳이 덴마크의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Middelgrunden Wind Farm다. 이곳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1997년 설립된 풍력터빈협동조합인데, 코펜하겐 주민, 지역 발전소 및 덴마크 국민이 참여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999년 1만 명의 주민에게 주식 우선 매입권을 부여했고, 현재는 주민 50%, 지역 발전사 50%의 지분 소유 구조다. 한편,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법은 모든 신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0%의 주민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4. 1세대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진화

윤리적 패션 생태계를 만드는 오르그닷

올해로 설립 10년차에 접어든 친환경 대표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오르그닷은 버려진 빈 페트병과 버려진 어망을 이용해 실을 뽑아내고, 무표백·무형광 면으로 만든 옷, 가방, 앞치마 등을 판매한다. 오르그닷의 대표 제품은 바로 '무가공면' 티셔츠이다. 탈색, 염색 등을 전혀 하지 않고 100% 면으로 만든다. 단점이라면 아이보리색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새하얀 옷들은 모두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장기간 인체에 사용될 경우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연 매출은 약 10억 원 정도. 홈페이지로 단체복 제작 의뢰를 받아 판매하는 것이 주된 비즈니스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 구단의 유니폼을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성공이 회사 성장에 발판이 됐다. 야구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해도 찢어지지 않아야 하기에, 무려 300kg의 무게를 견디는 원단을 만들어내야 했다. 2010년 당시 친환경 옷이 경기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4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다행히 개발에 성공했고, 오르그닷은 2011년부터 3년간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그린 유니폼'을 제작했다.

2016년부터는 '디자이너스 앤 메이커스Designers & Makers'라는 플랫폼을

▲ 오르그닷 대표 제품들. ⓒ오르그닷

◀ 오르그닷이 만든 친환경 SK브로드밴드 동계 점퍼. ⓒ오르그닷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쉽게 말해 생산자와 디자이너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신진 디자이너는 각자의 니즈에 맞는 공장을 검색을 통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봉제공장도 신규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 1년에 4~5개월은 일감이 없는 국내 봉제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패션산업은 전 세계에서 식량 다음으로 큰 산업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지만,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도 심각했다. 그렇다면, 친환경 생산 활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김방호 오르그닷 대표는 친환경 옷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디자이너·봉제공장 등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기업의 과제라고 말한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 나무 심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

트리플래닛은 '나무 심기'를 비즈니스로 삼는 소셜벤처다. 비영리단체가 아닌 기업이 나무를 심는다니, 독특하지만 2010년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트리플래닛의 핵심은 '나무 심기'에 있다. 올해로 창업 9년차,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초창기에는 나무 심는 게임을 개발했다. 게임에서 유저(사용자)들이 나무 심는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 심은 나무가 실제 숲을 만드는 모델이다. 게임 속 아기 나무 캐릭터를 물, 비료 등 아이템을 사용해 성장시키면 된다. 농작물 게임 등 일종의 소셜 게임과 비슷하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한화,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공익 마케팅의 일환으로 숲 조성비용을 후원하고, 해당 기업의 로고가 게임 내 아이템에 등장한다. 트리플래닛은 퍼네이션fun+donation, 재미있는 기부의 선발주자로서, 창업 첫 해에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 앱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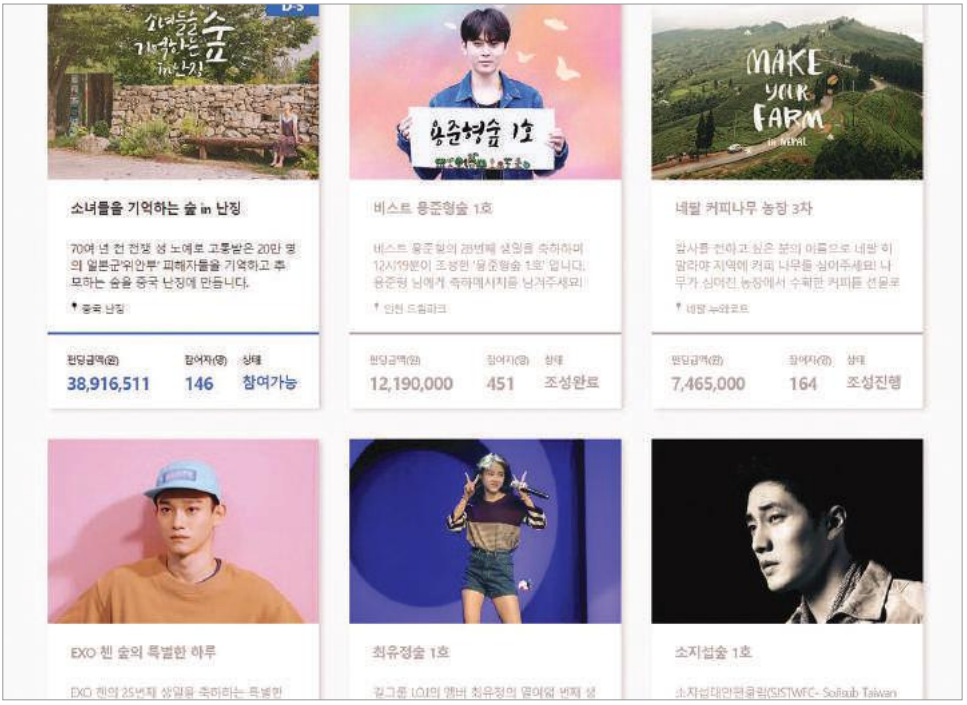
두 번째 버전은 '스타숲' 만들기로 이어졌다. 팬심을 자극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한 것. 2012년, 최초로 조성된 스타숲은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의 '투애니원2NE1숲'이다. 한류 열풍이 가속화되

'세월호 기억의 숲'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의 모습. ⓒ트리플래닛

면서, '소녀시대숲', '김수현숲', 'EXO숲' 등 스타의 이름으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에 80여 개의 스타숲이 조성됐다. 스타숲 프로젝트 전체 참여자의 약 40%가 중국, 프랑스, 멕시코 등 해외 팬들이다.

지난 2015년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을 숲 만들기에 참여시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진행한 '네팔 커피나무 농장 조성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진 피해로 무너진 네팔의 커피나무 농장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 명의의 농장이 생겼고, 네팔 커피도 리워드 받았다. 이런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에 과실수 4만 1,000주를 심어 3,000가구, 2만여 명의 기아를 해소하고 소득 증대를 도왔다.

올해 핵심 과제는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과연 숲을 만든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트리플래닛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가량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



트리플래닛은 2015년부터 크라우드펀딩형 숲 조성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전까지는 기업, 기관 중심의 숲 만들기였다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대중들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트리플래닛 홈페이지

다. 지난 1년간 트리플래닛은 2017년 서울에 조성한 4개 숲(서울로 7017 미세먼지 Free 도시숲, 청계천 미세먼지방지숲, 어린이대공원 미세먼지방지숲, 수도권매립지 미세먼지방지숲)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추산할 수 있는 산출 방법을 제공했다.

트리플래닛이 조성한 4개의 숲 면적은 축구장 약 12배 크기인 총 6만 9,834㎡, 이곳엔 2만 1,125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트리플래닛의 4개 숲이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총 364.7kg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1,435만 1,631시간 가동해야 하는 양이다(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30평대 기준). 59만 7,985일, 총 1,638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총 2억 2,962만 6,096원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절약한 셈이

지난해 12월 트리플래닛은 어린이대공원에 세 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공원 정문 대로변과 후문, 공원 숲 중심부에 각각 설치했다. 측정기는 태양열로 가동된다.
ⓒ트리플래닛

다. 이뿐 아니라 4개 숲은 이산화탄소 9만 2,954kg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숲이 조성된 지점에 따라, 같은 장소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데이터도 확보했다. 핵심은 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솔루션인 것이 증명됐다는 것. 트리플래닛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반려나무 입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무 심기'를 확장할 계획이다.

5.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공 전략은?

환경문제는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다.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때 환경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성장했듯, 정책의 변화는 비즈니스의 기회이자 반대로 위기로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사이클링 및 친환경 패션을 표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은 패션으로서의 매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디자인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무분별한 에코백 생산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에코 없는 에코백이다'라는 비판적인 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본연의 미션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초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미션이 잘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 시기를 놓쳐서일 수도 있다. 기업들은 원래의 소셜 미션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피벗pivot, 사업 모델을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1세대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인 오르그닷과 트리플래닛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오르그닷은 친환경 패션을 만들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의 기회는 문제로부터 발견되는데, 제2의 도약을 기대해볼 만하다.

또한 트리플래닛은 지난 8년 동안 몇 차례의 사업 모델을 바꿨다. 하지만 일관된 핵심 메시지는 '나무를 심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전문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개발R&D 자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와 숲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선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미션에 근거해 사업을 펼치고 있느냐다.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기업의 미션'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지 않은가.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리 사회의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도록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본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해방을 향한 과학기술'은 바로 슈마허가 꿈꿨던 '인간의 얼굴을 한' 적정기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는 일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이 미션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독한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 나라가 많다. 강바닥이 바짝 메말라 짝짝 갈라진 곳에서 온몸에 파리가 다닥다닥 붙은 채 누워 있는 아이들.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을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도 되는 양 두 손을 모아 마시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아,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한국 기업이 세계 곳곳에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만든다는 텔레비전 광고도 있었다. 사실 전 세계의 군함과 여객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수를 식수로 전환해서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뭄에 고통을 겪는 특정 지역 전체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바닷물로 많은 양의 식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오스트레일리아도 가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말라가고 있다. 특히 서쪽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인 퍼스Perth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자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과정은 이런 식이다.

우선 분당 약 210톤의 물을 빨아들인다. 이 물은 수천 개의 흰색 여과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염분, 해초, 기름, 물고기 배설물 등을 여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수는 퍼스가 필요로 하는 연 3억 톤의 물 가운데 약 5분의 1(17%) 정도를 충당한다. 과학기술이 가뭄에서 퍼스 시민을 구해낸 것이다.

퍼스의 사정까지 염두에 두면, 도대체 왜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세계 곳곳에 더 많이 짓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길을 퍼스에서 부산으로 돌려보자.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마법?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산시 기장군에도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 있다. 약 2,0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기장군의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하루 최대 4만 5,000톤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시설은 2014년 12월 완공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자.

바닷물 담수화 시설에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기장군 바닷물 담수화 시설만 하더라도 먹는 물 1톤을 생산하는 데 4킬로와트시의 전기가 소모된다. 하루 4만 5,000톤의 식수를 생산하려면 무려 18만 킬로와트시의 전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이 월 평균 226킬로와트시 정도니까, 이 정도면 약 80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전기를 하루에 날리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커다란 역설이 발생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 변화를 꼽는다. 그리고 이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온실 기체다.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을 태우는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식수 공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가뭄의 원인이 되는 온실 기체가 바닷물 담수화 시설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 되레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시설에 바닷물 10만 톤이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식수의 양은 4만 5,000톤에 불과하다. 처음 10만 톤 속에 들어 있던 염분은 담수로 빠져나가고 남은 5만 5,000톤은 고스란히 남아서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바다로 돌아가는 5만 5,000톤은 애초에 이 시설이 흡입

했던 바닷물과 다르다.

애초보다 염분이 2배가량 높아져서 바다로 돌아가는 소금물이 바닷물 담수화 시설 인근의 해양 생태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바닷물 담수화 시설 인근의 어민이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산시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2018년 1월 1일자로 관리 인력이 철수했다. 2014년 12월 완공되고 나서 만 3년간 부산시에 담수 공급을 못 하다가 결국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2,0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불과 3년 만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신세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 눈치 빠른 독자라면 하필 부산시 기장군에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 들어선 이유를 짐작할지도 모르겠다. 부산시 기장군에는 국내 24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6기(고리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가 들어서 있다. 이곳의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알다시피 핵발전소는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데 우라늄 핵분열은 전등을 켰다 끄듯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핵분열 반응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이 이익이다. 전기 수요가 많을 때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기 수요가 적으면 핵발전소 전기가 남아도는 일이 발생한다.

수많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어놓은 핵발전소의 전기가 남아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아닌가? 추가 핵발전소가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다. 핵 발전 확대를 추진했던 이들은 이 시설이 핵발전소의 남는 전기를 꿀꺽꿀꺽 먹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처럼 당장 수돗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굳이 핵발

전소 앞바다에서 빨아들인 바닷물을 담수로 바꾼 찝찝한 물을 상수도원에 섞어 마실 이유가 없다. 결국, 부산 시민의 반대 끝에 2,000억 원짜리 해수 담수화 시설은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되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책을 쓴 E. F.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1911~1977는 이미 40여 년 전에 부산시 기장군 바닷물 담수화 시설의 운명을 예고했던 듯하다. 그는 바닷물 담수화 시설과 같은 거대기술super technology에 일찌감치 회의적이었다. 그가 지적한 거대기술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기장군 바닷물 담수화 시설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자.

첫째, 거대기술은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낭비해서 얻은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에너지를 얻으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든 우라늄이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하루 가동하는 데 800가구가 1년간 쓸 전기를 소비해야 하는 기장군의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그 단적인 예다.

둘째, 거대기술은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바닷물 담수화 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 태우는 화석연료 때문에 온실 기체가 발생한다.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얻는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의 위험이 있다. 처리하기 어려운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한다. 부산물인 고농도의 소금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다.

셋째, 거대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나 부산시는 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만약 물만큼이나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라면 어떨까? 그런 지역에서 담수화 시설은 그림의 떡이다.

슈마허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대기술이 아닌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 중간기술은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태계에 주는 영향도 적다. 특히 이 중간기술은 그것이 필요한 지역의 맥락에 맞춤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곧바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슈마허는 중간기술을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Technology with a Human Face"로 정의한다. 가난, 전쟁, 생태계 파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류의 삶이 나아지려면 핵발전소 같은 거대기술보다는 중간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간기술은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적정기술의 예를 살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 글머리에서 흙탕물을 마시는 아프리카 이웃의 이야기를 했다.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는 설사 비가 오더라도 맑은 물을 먹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루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처럼 고가의 정수기를 집마다 들여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는 덕분에 세계 인구의 10억 명 이상이 물속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때문에 감염되는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에 약 5,000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설사로 사망한다. 만약 이들이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생명 빨대Life-Straw'는 바로 이런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진 적정기술 상품이다. 스위스의 젊은 과학자, 엔지니어가 힘을 합해 개발한 이 생명 빨대는 길이 25센티미터 정도의 빨대 모양 휴대용 정수기다. 화학약품이나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약 1,000리터의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다. 물속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을 100% 가까이 걸러준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는 곳이 있다면, 생명 빨대를 꽂고 빨면 된다. 이 생명 빨대를 통과하면서 물속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물질 등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입속으로 들어온다. 놀라

지 마시라! 가격은 대량 생산할 경우 2~3달러(약 2,000~3,000원)에 맞추는 게 가능하다. 또 필터를 갈아주지 않아도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주목받는 적정기술 상품 가운데 '물 펌프Super Money-Maker Pressure Pump'도 있다. 이 펌프는 전기나 연료가 없어도 사람이 페달을 밟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다. 9미터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고, 호스를 연결해 최대 200미터까지 물을 보낼 수 있다.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수단 등 아프리카 곳곳에서 쓰이는 이 펌프의 무게는 약 2킬로그램, 가격은 약 1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펌프 덕분에 아프리카 농민은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물을 대서 연중 작물 재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농민의 소득도 늘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프리카의 물이 부족한 가뭄 지역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2,000억 원짜리 거대기술일까, 아니면 단돈 3,000원이면 1년 내내 최소한 먹는 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생명 빨대'일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000억 원과 3,000원의 차이만큼이나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

성공한 과학기술 vs. 실패한 과학기술

이 대목에서 짚을 게 있다. 과학기술과 환경의 관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담아야 할 키워드는 '맥락context'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오지에 맞춤한 기술이 서울이나 심지어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는 시에서 도시 곳곳의 식당과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한다. 이렇게 수거한 폐식용유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아주 간단한 공정을 거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바이오디젤유油로 바뀐다. 그라츠는 이렇게 폐식용유에서 얻은 바이오디젤유를 시내를 오가는 버스 연료로 사용한다.

어차피 버려져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식용유를 버스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바이오디젤유와 같은 식물 기름을 사용함으로써 땅속에서 캐낸 석유(경유)를 태우지 않고서도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라츠는 우리나라 대구처럼 분지에 자리 잡은 탓에 대기오염으로 골치를 앓았다. 식물 기름은 경유보다 대기오염 유발 효과도 적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석유 대신에 식물 기름을 얻겠다고 인도네시아의 밀림을 태우고 야자수 농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야자수에서 얻은 야자기름(팜유)으로 바이오디젤유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오랑우탄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 동식물과 원주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얻은 바이오디젤유를 서울에서 수입해 버스 연료로 쓴다면 어떨까?

지역에서 버려질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든 바이오디젤유는 아주 멋진 적정기술이다. 앞에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바이오디젤유 공장이 생기면 지역에 일자리까지 만들어진다. 반면에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얻은 바이오디젤유를 원거리로 이동해서 쓰는 일은 적정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기술도 적정기술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가 '플레이 펌프Play Pump'다.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플레이 펌프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리면서 노는 놀이기구인 이른바 '뺑뺑이'와 펌프 기능을 합친 발명품이다. 뺑뺑이를 돌리면서 노는 동안 자연스럽게 땅속의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아프리카에 변변한 놀이기구 하나 갖춰져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물을 긷고자 몇 시간을 걷는 대신 뺑뺑이를 돌리면서 놀면 된다. 1989년 남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기업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아이디어는 아프리카 현실이 안타까운 여러 선진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가운데에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의 아내 로라도 있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뛰어난 혁신'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로라 부시는 201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플레이 펌프 4,000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6,000만 달러(약 673억 4,800만 원)를 모금하는 캠페인에 전체 4분의 1 정도인 1,640만 달러(약 185억 4,500만 원)를 지원했다.

이런 열기 덕에 플레이 펌프는 2009년까지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잠비아 곳곳에 약 1,800대가 설치됐다. 정말로 '기적의 뺑뺑이'가 된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플레이 펌프는 아프리카 곳곳에서 흉물로 전락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플레이 펌프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뺑뺑이는 가속도가 붙으면 저절로 돌아간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뺑뺑이를 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아이도 놀이터에서 몇 시간씩 뺑뺑이를 타지는 않는다. 더구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많은 아이들이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플레이 펌프가 땅속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온종일 뺑뺑이를 돌리는 일은 즐겁지 않을 뿐더러 금세 지친다. 결국 플레이 펌프를 돌리는 일은 아이가 아니라 성인 여성의 몫이 됐다. 하염없이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성인 여성의 모습은 얼마나 모욕적인가.

더구나 대당 1만 4,000달러(약 160만 원)인 플레이 펌프는 기존 수동 펌프보다 4배나 비싸지만, 시간당 퍼 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수동 펌프는 마을 사람이 직접 고쳐 쓸 수 있지만, 플레이 펌프는 부품이 금속으로 싸여 있어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다. 아프리카 오지의 농촌 마을에 수리기사가 제때 올 리가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럴듯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아프리카의 물 부

족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역의 맥락을 무시한 과학기술 해법이 어떻게 자원을 낭비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플레이 펌프는 지금도 적정기술의 처참한 실패 사례로 두고두고 적정기술을 고민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자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마지막 사례다. 가끔 적정기술을 '로우 테크놀로지low technology'와 헷갈려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아주 기본적인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도 이런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전 세계 곳곳의 실험실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혁신의 결과로 얻어진 '하이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 역시 맥락에 맞춤하게 배치하면 지역 사회의 공동체, 더 넓게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당장 3,000원짜리 생명 빨대를 만든 과학기술 역시 2,000억 원짜리 바닷물 담수화 시설만큼이나 하이테크놀로지다.

어떤 이들로부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악마의 기술'로 매도당한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어떨까? 블록체인은 '이론상으로는' 지금까지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또 자산을 주고받는 과정의 길목마다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뻥'을 뜯어온 온갖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테크놀로지다.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나 핵에너지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자기 집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거쳐서 공급하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만약에 전력 공급 시스템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집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필요한 다른 곳으로 공급되고, 그 기록은 고스란히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저장된다. 블록체인의 특

성상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면 투명한 전력 거래 현황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자원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런 자원과 비용 탓에 정부나 거대 기업에 의존해온 일을 공동체가 가져올 수 있다.

알다시피, 인터넷의 초기 형태는 1969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미국 대학 몇 곳과 연결한 '아르파넷ARPA Net'이다.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 곳곳에 생존한 군대끼리 연락할 수 있는 대안의 통신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군사기술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은 '감시'와 '이윤'으로 상징되는 닫힌 인터넷을 고수하려는 이들과 '자유'와 '소통'으로 상징되는 열린 인터넷을 지향하려는 이들이 싸우는 각축장이 되었다. 어쩌면 인터넷이 세상에 자리를 잡았던 지난 30년간 열린 인터넷을 꿈꾸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면 우리의 인터넷 풍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 중인 하이테크놀로지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은 권위적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온갖 거래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중국이 그런 미래를 구상 중이다). 반면에 정부, 대형 금융기관, 대기업이 독점해온 각종 거래의 주도권을 공동체가 찾아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해방을 향한 과학기술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의 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적정기술 이야기를 하나 언급하고 끝내자. '로봇'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요즘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같은 말도 떠오를 테고, '일자리를 빼앗는 재앙'이 아닐까 걱정도 될 테다.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온 철갑을 두른 기계 덩어리도 떠오를 테고.

그런데 최신(!) 로봇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1990년대 초반 대학에 입학한 조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소프트 로봇'의 권위자다. 소프트 로봇은 딱딱한 금속 대신에 유연한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로봇이다. 소프트 로봇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금속 로봇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 재난 구조 현장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터에서도!)

지금 조규진 교수는 팔이나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장갑형 로봇 슈트Exo-Glove Poly를 개발 중이다. '로봇 슈트' 하면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철갑 슈트를 떠올리겠지만 조 교수의 로봇 슈트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놀랍다. 이 장갑형 로봇 슈트를 착용하면 남의 도움 없이 물건을 집거나 문을 열수 있다. 컵 안에 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심지어 혼자서 칫솔질도 가능하다.

조 교수는 팔과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과 머리를 맞대고 이 장갑형 로봇 슈트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심지어 플라스틱 소재라서 착용했을 때 티도 나지 않는다. (슈퍼 히어로는 철갑 슈트를 입고 티내기를 좋아하지만, 장애인은 정반대다.)

조규진 교수는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된 동료 교수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을 돕는 로봇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장갑형 로봇 슈트를 시연한 동영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장갑형 로봇 슈트를 전 세계 팔과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착용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장애인을 돕는 로봇 슈트를 개발하면서 조규진 교수는 문득 1992년 공과대학에 입학할 때 보았던 구호를 떠올렸다. "인간을 위한 기계, 해방을 향한 설계." 공부와 연구에 몰두하느라 그런 구호와 멀어진 듯했지만, 결국 조 교수는 지금 300명의 학생과 함께 그 구호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중이다.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해방을 향한 과학기술'은 바로 슈마허가 꿈꿨던 '인간의 얼굴을 한' 적정기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는 일은 조규진 교수 같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장담컨대, 이 미션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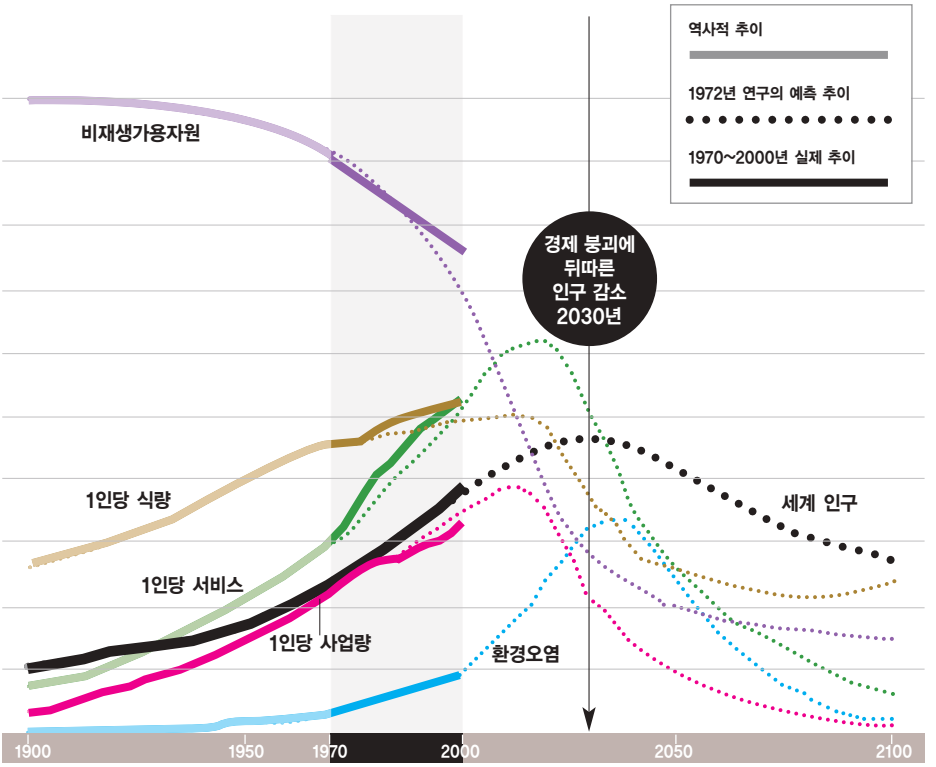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생태위기는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전환은 실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생태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 생태문명을 위한 경제 체제는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

1. 『성장의 한계』, 그 후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발간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무시되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주목을 받았다. 호주 출신 연구자 그레엄 터너(Graham Turner)는 『성장의 한계 30년 뒤의 평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데이터를 로마클럽의 예측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40년 전 저자들의 논의를 검토했다. 『성장의 한계』는 하나의 시나리오만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

〈그림1〉 『성장의 한계』 시나리오와 데이터 경로 분석(1970-2000)



출처 : (Turner, G., 2008 : 42), FIG. 1.에서 재작성. (인용) Smithsonian Magazine (2012. April). https://www.smithsonianmag.com/science-nature/looking-back-on-the-limits-of-growth-125269840/

라 현상의 유지, 개선, 개혁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두고 2100년까지 사회를 변화시킬 5가지 핵심 요소의 궤적을 따라 미래를 예측한 것인데, 그레엄 터너의 분석 결과는 인류가 지난 30년간 '현상 유지 경로'를 밟아 '붕괴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그림1〉 참조). 또 2012년 봄에는 로마클럽과 미국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가 『성장의 한계』 출간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여기에 백발의 노인이 된 『성장의 한계』 저자 두 사람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시대를 만들 수 있던 시기는 '지나갔으며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다'라는 비관적 내용을 담은 발표를 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오염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축의 살처분 등 환경문제와 생태위기에 대한 자료와 뉴스는 넘쳐난다. 잡지 『타임*Time*』의 표지에 멸종위기 동물을 상징하듯 밧줄에 감긴 지구 이미지가 등장한 것이 1988년 말이었고, 1992년 리우에서는 제1차 UN 지구정상회의가 열렸다.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는 '섭씨 2도 유지'에 대한 결의가 있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중에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어났고,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UN 기후 회의에서 캐나다의 스물한 살 대학생이 각국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협상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배출량 궤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지구 온도 상승은 섭씨 4도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그즈음에는 예측할 방법도 역전시킬 방법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한다.

기상이변 못지않게 심각한 건 사람들이 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해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앨 고어Al Gore라는 미국 정치인이 2000년 대선에서 낙선한 후 환경운동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쓴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그저 불편한 문제 제기'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 2007년 진행한 해리스 여론조사Harris Poll의 응답 결과를 보면, 71%의 응답자가 '화석연료의 사용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답했지만, 2009년 그 비율은 51%로 떨어졌고 2011년 6월에는 44%만이 동의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영국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Klein, N., 2014). 상황과 인식 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는 경제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것은 정보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다.' 오래전 책을 읽다 메모해둔 구절이다. 작가는 문학 작품에 대해 한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 생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문화적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미국 예일대학의 문화 인지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가 자신의 신념 체계를 흔들어놓을 우려가 있을 때 인간의 두뇌는 불청객을 격퇴하기 위해 '지적인 항체'를 생산(Klein, N., 2014)한다. 사람들은 현실과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때 현실을 부정하는 편향을 갖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왜 생태위기 징후에 대해 이런 '지적인 항체'를 갖게 되었을까?[1]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했지만 환경과 경제의 대결에서 승자는 '경제'였다.

1 그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 글의 범위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과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적 항체가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경제와 연관된 수준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결국은 '경제'다. 재계 쪽 전문가들은 핵발전이 가장 안정적으로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2조가 넘는 매몰 비용도 강조했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세를 떨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핵발전 안전 신화는 강고했다. 핵발전소 사고는 최악의 재앙이고, 핵폐기물은 처리 방법이 없으며,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은 도시민의 지역민에 대한 폭력이라는 명확한 '사실'들은 힘을 잃었다. (윤지영, 2018)

뉴욕타임즈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저작으로 꼽은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언제나 아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 매번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 베이징에서 숨이 차 쌕쌕거리는 어린 자녀에게 귀여운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방진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는 수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핍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나오미 클라인, 2014. 이순희 옮김, 2016 : 45-46)

여기에는 비단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연과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에 기반한 우리네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도 포함된다. 현재의 글로벌 세계경제 질서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위기를 만들어낸 주범은 아니다. 인류는 1700년대 말부터 석탄을 본격적

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도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기도 했다.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화이트헤드가 『관념의 모험*Adventures of Idea*』에서 말한 대로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하는 이미지와 관념이 있어왔다. 그 이미지와 관념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조차도 그러한 관념을 공유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적 서사cultural narrative[2]가 달라져야 하기에 문명적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적 위기의 근원 역시 '자연은 무한하고 통제하고 지배 가능한 대상이고 인류는 자연계를 지배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우리들의 관념에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기존 사회경제 모델의 기저를 이루는 논리적 가정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내재한 가치 체계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세계관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문명적 수준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는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또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상상과 전망이 필요하다.

3.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점들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에 놓인 철학은 인간과 나머지 자연을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자연을 거대한 기계장치로 파악한 데카르트와 뉴턴의 이원론적이고 기계적인 철학dualism and mechanical philosophy이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으

2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이다(Harari, Y., 2015. 조현욱 옮김, 2015 : 234).

로 인해서 자연은 개념적으로 사물의 조각들로 환원되어 텅 빈 3차원의 기하학적 공간에 놓여 있는 당구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과학혁명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고 근대 과학은 자연에서 신비로움을 제거해 버렸다(Donnelley, S., 2008). 이들의 주장은 20세기 초에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세계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수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상대성이론을 정립했으며 양자역학이나 장field 이론에 대한 지식을 그의 철학적 사유에 적용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플라톤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상사의 한 측면은 자연법칙의 해석을 둘러싼 형이상학자와 실증주의자의 싸움'이고, 17세기 뉴턴이 주도했던 기계론적 세계관은 '형이상학에 대한 과학의 반역'이다. 화이트헤드는 물질이 시간과 공간 내에 단순히 위치해 있다는 이른바 단순정위simple location in space and time론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다(Whitehead, A., 1933. 오영환 옮김, 1996).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으로서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에 관계하는 과학자의 상상 속에 들어 있는 통속적이고 그릇된 형이상학에 의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증주의 학설은 원자론에 그 기초를 두고서 과학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관찰된 사물을 단순한 형식으로 잘 기술해내는 데 있다고 결론내리지만' 자연과 인간을 나누어 사고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닫힌 일관성doctrine of the uniformity의 도그마로서의 '죽은 자연Dead Nature' 인식을 결과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인류)은 자연 속의 요소이면서 자연의 열린 가능성plasticity of nature을 실현하는 존재이며, '살아있는 자연Nature Alive', '자연 속 생명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 현대 철학과 과학의 과제라 생각했다. 화이트헤드는 자연과 생명, 마음, 가치가 하나로 꿰어진 설명을 추구하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과 인간의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경험 간의 단절을 강력히 거부한다. 이러한 내적 연관성,

즉 상호내재성Mutual immanence은 '죽은 자연Nature Lifeless' 개념과 대비되어 '살아있는 자연Nature Alive'이라는 그의 철학적 우주론의 핵심적 개념이 되고 그의 철학이 '유기체 철학'으로 불리는 근거이기도 하다(Whitehead, A., 1938 : 78).

이러한 설명은 진화론과 진화생물학에서는 더욱 익숙하다.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r는 다윈의 진화론은 서구 사상의 중심에 뿌리내려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넘어서도록 하며 명시적으로 목적론적 우주론, 물리(학)주의적 뉴튼의 결정론, 그 외 근본주의적이거나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게 하는 튼튼한 근거라 평가한다(Donnelley, S., 2008. 최종덕, 2002). 세포에서 개체, 그리고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생물학자 찰스 버치Charles Birch는 이러한 사고를 실체적 접근에 대비해서 사건적 접근이라 부른다.

> 원자는 실체적 실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연관되어있고 또 다른 사건들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의 다양성이다. (…) 생쥐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는 전자적, 세포적, 개체적 사건들의 광범위한 집합이다. (…) 장Field 이론,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은 모두 실체적 사고 대신에 사건적 사고를 지향한다. 하나의 사건은 모든 사건들의 환경이 되는 장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며 또한 동시에 그 장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구성되는 것이다. 장과 분리되면 도대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날 수 없는 법이다. (…) 사건은 장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자리에 내포된 복잡한 상호연관성에 의해 구성된다. 문제의 사건이 유전자의 기능이거나 세포 또는 토끼의 기능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능은 전체 환경과 동떨어져서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연관된다.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양식이 곧 기능이다. (Charles Birch, John B. Cobb, Jr., 1981. 양재섭, 구미정 옮김, 2010 : 150)

미국 캔사스주 프레리prairie라고도 불리는 대평원Great Plains 지역에 세워

진 랜드연구소Land Institute는 40여 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온 다년생 다작물 경작perennial polyculture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농법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가장 적합한 농업임을 보여주는 생태 농업의 산실이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년생 다작물 경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집필,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토양학자이자 철학자인 웨스 잭슨Wes Jackson과 시인이자 농부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생태적 사고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개념으로 생물권biosphere 대신 생태권the ecosphere, 생태계ecosystem 대신 생태적 모자이크ecological mosaic of the ecospher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이 이해하는 자연은 유기체적 형태를 거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질서를 창조해내며 뉴튼식의 엄격한 결정주의 대신 더 복잡하면서 덜 결정론이고 통합적인 '오케스트라적 인과관계orchestral causation'로 특징지어진다. 생태계의 오케스트라적 인과관계에는 단일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요소들이 작용한 산출물로서의 결과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토양과 토양 속 다년생 식물들의 뿌리들이 뻗어가며 만들어내는 환경과 조건에 주목한다. 토양 속 20여 개의 영양소가 바람, 물, 중력 그리고 지질활동과 결합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뿌리 구조들의 다양성은 식물들의 생장의 근원이 되는 네트워크로서 그 내부의 다양한 연결의 복합성과 복잡성은 제대로 이해되거나 인지되지 못한다. 토양을 그저 흙dirt으로 부르며 '땅 속 세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지구 생태권 내 거의 절반의 식물들은 여전히 그저 '잡초'로 불리는 것도 그러한 자연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연이나 임의적인 것random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간의 단절 문제를 다루면서 유명해진 스노우C. Snow의 『두 문화*The Two Cultures*』의 최신판 서문에서 편자인 스테판 콜리니Stefan Collini는 다른 분야와 교류 없이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적 연구들이 결국 근대문명의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벗어

난 과학과 인문학 간의 수렴 경향과 협업의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20년간의 소위 '새로운 물리학'은 과학의 모델을 바꾸고 있고 양자물리학이나 카오스이론의 발전은 물질주의의 종언, 즉 뉴튼 이래 물질의 운동과 사물의 기계론적 모델의 종언으로 기록된다(Collini, S. and C. P. Snow, 2012 : 34). 나아가 물리적 세계에서도 우주의 기원이나 물질의 본성에 대한 발견들로부터 예측 불가능성, 무한 개방성openendedness, 심지어 목적론적 요소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상상력의 역할, 범주 자체를 변형시키는 사고로 이어지는 은유와 추론, 과감한 직관이 더 주목받고 있고, 이들 요소들이 과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언제나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과학적 지식의 형성이 문화적 가변성을 갖는 규범과 관행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과학이란 것 역시 예술과 종교가 그런 것처럼 정치와 도덕의 근본 쟁점들과 분리 불가능한 '문화적 행위들 중 하나one set of cultural activities'라고 선언한다(Collini, S. and C. P. Snow, 2012 : 36).

아직 우리의 고정관념과 교육은 기계론적 사고, 이분법적 실체론에 갇혀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 교과 과정에서는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구분되어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혹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뉜다. 이렇게 단절된 채 다른 분야와 교류 없이 진행되는 전문 연구가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와 분리된 경제에 대한 사고와 그에 기반한 경제학은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주어진 안정적인 파라메터parameter에 관한 지식의 연속적이고 원만한 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치가 정상 과학 내 비정상성anomality을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급작스러운 비약이라 할 만한 단절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은 것이 경제학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 생태와 경제

오늘날 우리가 생태계ecosystem라 부르는 개념은 지질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을 집필하면서 언급한 '상호 연관된 종들의 얽힌 복합체entangled bank of interconnected species'에서 유래한다. 다윈은 동물과 식물을 '복합적 관계의 그물에 의해 함께 묶여진 존재(Darwin, C., 1859 : 73)'로 규정했고 에른스트 해켈Ernst Haeckel은 훗날 다윈이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의 조건(들)이라 부른 동식물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들complex inter-relationships에 대한 연구'를 생태학ecology이라 이름 붙였다.

이 글의 앞에서 생태와 경제 간의 긴장을 다루고 생태위기의 원인으로 경제를 들었지만, 생태ecology와 경제economy의 영어 표기와 발음은 연관성이 느껴질 만큼 서로 닮았다. 뿐만 아니라 다윈은 생명체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활동을 묘사하며 '자연의 경제economy of nature'라는 표현을 『종의 기원』 여러 곳에서 직접 사용한다(Darwin, C., 1859). 그는 '자연의 경제'를 생물학적 개인, 종과 환경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망complex web of interactions을 의미하는 것으로 썼고, 이를 반영해서 해켈 역시 생태학을 '자연의 경제에 관한 지식의 본질'이라 정의했다. 다윈이 자연을 '경제'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자연과 경제 사이의 연관과 유사성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었다(Hardy-Vallée, Benoit, 2007).

지구가 제공하고 있는 자연의 경제 내에 인간의 경제가 하위 체계로 존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생산, 분배와 소비 등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변환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이나 비물질적 재화를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경제 시스템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유입되어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이후 폐기물 형태로 자연

생태계로 배출되는 것을 자원흐름through-put이라 한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자연 생태계에서 유용한 형태로 유입시켜 경제활동에 사용한 후 폐기물 형태로 다시 자연 생태계로 배출하는 자원흐름의 과정을 매개로 자연 생태계 안에 배태되어 있다(조영탁, 2013).

그러므로 생태와 경제는 시스템적으로나 순환으로나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의 순환은 생태계의 순환체계 내에서 포함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경제학은 지구 생물권의 존재에 무관심하며 생태계의 순환에 무지하고 경제순환의 물리적 한계를 무시한다. 생태와 경제의 다양한 연관 속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외부성externalities 개념 안에 집어넣은 다음 경제 분석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예외적인 경우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 그 효과를 고려할 뿐이다. 더욱이 토양이나 기후, 생물다양성 등 지구계 생물권의 대치할 수 없는 역할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하나의 사례로 인류가 먹는 농작물의 70%는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꽃가루 운반자 역할을 하는 꿀벌의 도움으로만 가능하지만 경제학자들 중 다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Latouche, Sergeo, 2010. 양상모 옮김, 2014).

스웨덴의 환경학자 요한 로크스트롬Johan Rockström이 제시한 후 UN 리우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용된 행성한계planetary boundaries는 1) 기후변화, 2) 해양의 산성화, 3) 오존 고갈, 4) 질소 순환, 5) 전 세계 물 사용, 6) 토지 이용 변화, 7) 생물다양성 손실, 8) 에어로졸 증가, 9) 화학물질 오염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Rockström et al., 2013). 행성한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생태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 자원의 소비가 생물계의 수용 능력, 즉 지구의 생태용량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넘어 변곡점tipping point에 이르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흐름의 규모'가 커지고 '자원흐름의 독성'이 강할수록 자연 생태계의 부담과 피해는 커진다. 지금은 자원흐름의 규모가 자연 생태계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려

는 상항이고 자원흐름에서의 '감량화'와 '탈독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조영탁, 2013 : 349).

그럼에도 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아마도 언젠가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태와 경제가 하나의 동일한 과정임에도 당시 세대가 왜 그렇게 생태와 경제의 연관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놀라움과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 간극을 연결하고 단절을 메우는 새로운 경제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이 '유한의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인 경제 성장이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 자는 미치광이이거나 또는 경제학자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Jung, Gunna, 2017). 생태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을 경제학에서의 경제순환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생태경제학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류 경제학의 가장 변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Costanza Robert, Herman Daly, Richard Norgaard et. al., 1997).

생태학과 경제학의 통합, 생태와 경제의 통합은 당위적 차원의 필요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현상 유지status quo는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3]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사회적 행태가 지속되면 20세기 전반기 대공황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파괴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른 온갖 위험과 효과를 전부 고려하면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으로 매년 인류 전체 GDP의 5~20%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추정한다. 그는 앞으로 10~20년의 시기가 이후 21세기 후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최악의 효과를 피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전체

3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는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에 대한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이다. 스턴 교수는 2006년 기후변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의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GDP의 1% 정도이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적 고려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한다[4].

피크오일, 즉 화석에너지 시대의 임박한 종언 또한 현상 유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을 말해준다. 웬델 베리와 웨스 잭슨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탄소 배출의 한계점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비록 전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인간 사회가 지닌 성찰과 적응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Berry, Mary, 2017).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고 '노동의 종말'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현실 상황도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프란츠 알트가 강조한 대로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위기는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이고 동시에 함께 해결이 모색될 문제이다(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 15)[5].

5.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경제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제의 단위 요소들은 당위와 윤리의 차원에서 이미 실행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현실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의 사례들

4 저자는 2016년, 보고서 10주년 강연에 참석해서 '지구온난화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비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부진하고 그 속도가 느린데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다(Kahn, Brian, 2018).

5 "에너지 전환, 이를 통한 지구 기후의 구원은 가능하다. (…) 태양 에너지 혁명은 21세기의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워싱턴의 월드워치 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낡은 에너지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의 5배에 달한다. 앞으로 에너지의 전환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 81-82).

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대규모 자원의 집중과 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경제와 다른 대안 경제를 시도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 남서부 슈바르츠발드Schwarzwald, 흑림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650명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항해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1986년)이 그 첫걸음이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독일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2011년 말까지 439개가 되었다(Davidson, Osha Gray., 2012).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성과로 독일에서는 47%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전기의 65%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집중되고 기업이 지배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소규모 분산적이고 분권화된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전환social-economic transition이기도 하다(Arne Jungiohann, 2017)[6].

제레미 리프킨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달리 경제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 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기획임을 강조한다.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

6 원전은 대안이 아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가 프란츠 알트의 말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자력 이용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귀신을 쫓기 위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막아내자는 말인가? 페스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콜레라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 57).

하게 된다는 것이다. 웨스 잭슨 또한 로컬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말하며,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한다(Jackson, Wes, 2018). 제레미 리프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한다[7].

'협력적 공유사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공동 부엌communal kitchens, 지역 재단,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들이다. 여기에 사회적금융, 크라우드 펀딩, 지역화폐, 대안화폐, P2P 대출, 타임 뱅크Time Bank,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 윤리적인 은행 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들이 협력적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역시 이들 사회적경제의 구성 요소들을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 단위로서 제시하고 있으며(Rifkin, Jeremy, 2014. 안진환 옮김, 2014),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0여 년 전, 사회적경제를 '생태적·사회적·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정건화, 2016).

7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공유경제 확산과 확대의 기술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신경네트워크(global neural network created from the combined communications internet, energy internet and logistics internet)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비용을 거의 0으로 수렴되게 함으로써 자유재(free goods)와 풍요로운 자원(제한된 자원이 아닌!)을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배분에서의 시장 영역과 이윤 창출 영역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유자원(a global Collaborative Commons)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6.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

생태위기는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사회, 산업문명의 전환은 실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생태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 생태문명을 위한 경제 체제는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 무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의 대신 경제생활의 목적과 가치가 반영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경제 조직, 그리고 새로운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고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유·무형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생에너지와 농업, 교통과 휴먼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지역들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될 것이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진화의 과정은 생명체, 특히 지능이 있는 동물의 합목적적 행동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진화에서 합목적적 행동의 역할은 특히 인간의 출현과 함께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화가 생태학에서도 중요한 변수이며 생명의 그물web of life에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Charles Birch, John B. Cobb, Jr., 1981. 양재섭, 구미정 옮김, 2010 : 118). 그런 점에서 인간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진화의 의미이다. 사람들이 지식과 발명의 형태로 배우고 전수하는 것들이 미래를 형성하며 인간은 지금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대신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이라는 종은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구원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Charles Birch, John B. Cobb, Jr., 1981. 양재섭, 구미정 옮김, 2010 : 132).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너무 늦지만 않다면 그것은 인류 출현 이래 인류가 행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빅뱅으로 창조된 우주의 일부로서 최소한 두 번 초신성su-

pernova을 통해 재활용된 우주먼지star dust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우주적 기원에 대한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지구의 생태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우주와 우리의 관계이며, 웬델 베리와 웨스 잭슨이 청지기 역할stewardship이라 표현했던(Berry, Mary, 2017), 지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인간 종human species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사물과 세상, 자연을 인식해온 방법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서 '무한성장' 관념의 반反생태적 함의, 반反우주론적 함의를 돌아보고, '생태적 인간Homo ecologicus'으로 향한 '문화적 진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참고문헌
·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2014).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자본주의 대 기후』(*This Changes Everything : Capitalism v.s The Climate*). 이순희 옮김 (2016). 열린책들.
· 세르주 라투슈(Serge Latouche, 2010). 『탈성장사회 :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Pour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Voix et voies de la décroissance*). 양상모 옮김 (2014). 오래된생각.
·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2015).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Sapiens :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조현욱 옮김 (2015). 김영사.
· 윤지영 (2018).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참가기」,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 정건화 (2016).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이병천, 유철규, 전창환, 정준호(2016).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불화와 공존』. 돌베개.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안진환 옮김 (2014). 민음사.
· 조영탁 (2013).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생태경제학의 기획』. 한울.
· 찰스 버치, 존 캅(Charles Birch, John B. Cobb, Jr. 1981). 『생명의 해방 : 세포에서 공동체까지』(*Liberation of Life :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양재섭, 구미정 옮김 (2010). 나남.
· 최종덕 (2002). 「생물학과 철학의 만남」, 『과학철학』 제9호.
· 프란츠 알트(Franz Alt, 1997). 『생태적 경제기적』(*Das Ökologische Wirtschaftswunder*). 박진희 옮김 (2004). 양문.
·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933). 『관념의 모험』(*Adventures of Ideas*). 오영환 옮김 (1997). 한길사.
· Arne Jungiohann, Craig Morris (2017). “Germany Shows it’s Worth Fighting for Energy Democracy”. Resilience.org, June 22, 2017.
· Berry, Mary (2017). *A Conversation Between Wendell Berry and Wes Jackson*. Annual E. F. Schumacher Lectures Book 36. (Kindle editon).
· Berry, Wendell (2008). “The way of Ignorance”. Vitek, Bill and Wes Jackson. *The Virtues of Ignorance : Complexity, Sustainability, and the Limits of Knowledge*. (Kindel edition).
· Collini, Stefan, C. P. Snow (2012). *The Two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tanza Robert, Herman Daly, Richard Norgaard et. al. (1997).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Economics*. St. Lucie Press.
· Darwin, C. (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A Public Domain Book. (Kindle Edition, 1998).
· Darwin, C. (1887).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Darwin*. A Public Domain Book. (Kindle Edition, 2012).
· Davidson, Osha Gray (2012). *Clean Break : The Story of Germany's Energy Transformation and What Americans Can Learn from It*. (Kindle Edition).
· Donnelley, Strachan (2008). “The Path of Enlighted Ignorance : Alfred North Whitehead and Ernst Mayr”. Vitek, Bill and Wes Jackson. *The Virtues of Ignorance : Complexity, Sustainability, and the Limits of Knowledge*. (Kindel edition).
· Turner, Graham (2008). A Comparison of the Limits to Growth with Thirty Years of Re-

ality. CSIRO Working Paper Series 2008-09.
· Hardy-Vallée, Benoit (2007). “The Economy of Nature : A Brief Introduction”. Blog : Natural Rationality. http://naturalrationality.blogspot.com/search?q=Darwin.
· Jackson, Wes (2008). “Toward an Ignorance-based Worldview”. Vitek, Bill and Wes Jackson. *The Virtues of Ignorance : Complexity, Sustainability, and the Limits of Knowledge*. (Kindel edition).
· Jung, Gunna (2017). What Can Economics Do for Ecological Civilization? In Green Transition Toward Ecological Civilization : A Korea-US Dialogue November 7-9, 2017.
· Kahn, Brian (2018). “10 Years on, Climate Economists Reflect on Stern Review”. Climate on Central, 2016.10.28. http://www.climatecentral.org/news/climate-economists-stern-review-20827
· Rockström et al. (2013). B*ankrupting Nature : Denying Our Planetary Boundaries*. (Kindle Edition).
· Stern, Nicholas (2006). Stern Review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Government of the U.K.
· Whitehead, A. North (1938). *Modes of Thought*. The Free Press. (Kindle Editon, 1968).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좌담

참석 **김성경** 자락당 대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오창길 (사)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윤성미 강서아이쿱 이사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

사회·정리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때 2018년 5월 23일(수)

곳 신길동 아이쿱센터

사회 오늘 이 자리에 환경문제와 결부된 활동과 사업을 펼치는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경 저는 자락당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명은 마켓인유Marketinu입니다. 2011년 서울대학교 안에서 벼룩시장을

시작하면서 출발했고 2013년에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을 창립했죠. 군 제대를 하고 돌아왔더니 소비 지향적인 문화로만 채워져 있는 대학문화에 재미가 없어서 벼룩시장을 열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망원동을 포함한 세 곳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옷 매장이 소비만을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었다면, 저희는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오히려 매장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개념, 세컨 핸드샵second hand shop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돗자리 몇 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7,8천 명이 마켓인유에 물건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아직 미미하지요, 구區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데(웃음).

김신범 우리 연구소는 원진레이온 직업병에서 출발했습니다. 1988년쯤에 많은 노동자들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쓰러진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작되었고요, 약 10년 동안은 직업병 인정을 받는 싸움, 공장 폐쇄를 막는 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후엔 피해자들의 손으로 직업병에 관한 병원과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저는 1999년에 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어찌 보면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겼죠(웃음).

저는 노동자들의 병과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알았고 세상의 화학물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장 바깥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차 싶었고, 공장의 문제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지금은 노동조합, 생협, 학부모, 환경단체 등과 함께 화학물질 문제에 대항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선 최근에 아이쿱과 함께 시민들의 바디버든body burden 조사도 해주셨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경제에는 나쁜 경제와 좋은 경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협은 좋은 경제를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망치는 건 나쁜 경제예요. 나쁜 경제에 대해서는 환경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저는 나쁜 경제를 감시하는 운동과 좋은 경제를 만들려는 생협 운동이 만나면 균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김신범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화학물질은, 생물학적 시료(소변, 머리카락, 혈액 등)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연구소에 있고 평소에 사람 몸이 얼마나 화학물질로부터 오염되고 있는지, 또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아이쿱에서 같이하자고 제안을 주셨죠. 처음에 저희는 아이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연구는 줄이는 연구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 친환경 유기농을 섭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줄이는 연구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해보니 아이쿱 조합원들은 우리나라 평균 농도보다는 몇 십 배 낮았어요(웃음). 어쨌든 조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가 노력하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주로 환경 교육과 관련된 정책 생산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환경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

가는 방법들을 고민했었고, 환경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많기 때문에 학교를 초록으로, 즉 녹색교육을 한다는 개념에 착안했어요. 교육이 생태적인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틀어쥐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학습처럼 모든 시민이 생활환경 문제, 화학물질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서 '서울환경학습도시 선언'(2017. 5. 28.)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구를 구하는 초록학교』, 『미세먼지를 부탁해』, 『제비는 내 친구』는 최근 저희가 만든 자료집인데 교사들이 미세먼지 관련 지도안을 개발하거나 생협 조합원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집필자들은 모두 우리 단체 회원들이에요.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각성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 학습도 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저희는 이걸 '시민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오창길 (사)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페트병 마개 분리수거를 하지 않지만 일본은 이걸 따로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활동을 크게 보여주거든요.

윤성미 강서아이쿱생협은 2005년에 양천아이쿱과 분리하면서 탄생했고요, 지금은 조합원이 1,792명(4월 말)이에요. 저는 공감행동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공감이 가는 것들을

윤성미 강서아이쿱 이사

소비자들은 일상 속에 파고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산자들은 제품 포장재를 분리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이중, 삼중 비닐에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 파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행동으로 이어가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일상 참여 활동으로 우유팩 수거, 세상을 바꾸는 마개[1] 같은 자원순환 활동, 절전 소모임처럼 지구 온도 낮추기 프로젝트, 조합원들과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자고 10여 명이 함께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또 제게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바닥재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는데요, 왜냐면 아이 셋을 키우면서 늘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조각들을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 주어서 입에 넣기도 하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오창길 제가 서울시 어린이 놀이터 위원회 활동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원 우레탄 바닥재 문제, 유해물질 등이 없이 흙과 모래, 목재를 중심으로 한 개선사업을 자문하고 있어요.

1 페트병 마개만 분리수거 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의 식수 시설을 마련하는 아이쿱 생협의 캠페인 명칭.

서울시 1,700개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2018년까지 91개를 개선했습니다. 서울시 각 구마다 담당 공무원이 있고, 특히 양천구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 공약에 놀이터 문제—아이들의 놀 권리, 놀 시간, 놀 공간을 확보—가 부각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윤성미 제가 작년부터 세 차례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강서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14개밖에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또 다시 요구하니까 100개가 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재청구를 했지만 적절한 대답 없이 완료 처리를 해놓았어요. 타 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어린이 놀이터를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안전관리를 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칸막이 행정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창길 중요한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데 주거 공간,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놓치고 있어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서 아이들 통학로 대기질을 다 조사했는데, 또 놀이터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넘어간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지자체 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문제죠.

사회 이경재 대표님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요.

이경재 저는 대지를위한바느질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패션을 전공했는데 강원도에 귀촌해서 4년 정도 살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디자인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게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만든 웨딩드레스였고요, 이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

생협처럼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업이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책임 있는 개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면 좋겠어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분리수거 하기 좋은 제품을 개발하라고 말이죠.

게 2005년 일인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만들어 드리다가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2008년에 사업자등록 내고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친환경 의류제조인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에코웨딩이에요. 처음엔 웨딩드레스만 맡다가 점점 결혼식 전체를 에코로 디자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쓰이는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 꽃 장식, 부케, 답례품 등을 모두 친환경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친환경 유니폼이나 천연염색, 천연섬유를 이용한 기념품 등도 디자인합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생협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사회 말씀을 들어보니 환경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실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우선순위 세 개를 뽑으면 공통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경재 저는 먼저 미세먼지, 그리고 원자력 문제를 꼽습니다. 원자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데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론 쓰레기 문제를 꼽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인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

한 것 같아요. 학습만 하면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없고, 환경오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인데요, 이때 실천을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초반엔 그랬습니다만 환경문제 홍보를 강요처럼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마치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그보다는 환경문제를 절대적 가치로 접근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성미 저도 미세먼지, 화학물질,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꼽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큰아이와 함께 환경영화제에서 〈플라스틱 차이나〉[2]를 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 깨달았는데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부터 환경 실천을 배운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리수거도 일상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실천하게끔 만드는 게 참 힘든 과정 같습니다. 이게 달라지려면 소비자들은 일상 속에 이미 깊숙하게 파고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산자들은 제품 포장재를 분리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묶음 할인판매 세트를 이중, 삼중 비닐에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 파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어요.

오창길 저도 비슷한데 우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경문제로 후쿠시

2 2016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중국의 마을 30곳 중 일부를 카메라에 담아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산업의 민낯을 생생히 드러냈다.

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꼽습니다. 미세먼지는 2016년 이후 연속 3년 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보니 작년에는 사회 분야에서 검색 결과 2위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 육아보다도 미세먼지를 더 많이 검색했다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 때도 원전 검색어 순위는 10위 밖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습기와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생활 속 유해물질과 플라스틱, 폐비닐과 같은 자원순환 문제가 연결되어 '생활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4대강, 온실가스 문제 등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생활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 생활환경 문제,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신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문제라는 게 드러난 현상을 말하느냐, 원인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물질과 전염병을 자주 비교하는데, 전염병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인류가 상대해온 문제지요. 그러다보니 정부의 말단 행정 조직에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가 편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화학물질은 1940년 이후로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의 시작과 함께 등장합니다. 화학물질이 문제가 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진 정도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점에서 비슷해요. 그런데 환경문제는 파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핵, 화학물질, 기후변화는 인류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데, 우린 거기까지 가고 있지 못하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 한편으로는 인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관료제나 과학적인 예방체계—도 발전시켜왔고, 동원 자원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 시대인데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갑갑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신범 그렇기도 하지만 갑갑함의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기능한다고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 싶은 의문은 있어요. 정부란 검증된 영역을 중심으로 위기관리를 하는 기능들이 강화되어왔어요. 하지만 환경문제, 화학물질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문제예요. 돈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그만큼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영역이죠. 검증을 전제로 움직이는 정부의 속성 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환경문제를 정부의 손에서 모두의 손으로 가져오는 것에 해결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경 어떤 이슈가 우선순위일지 물으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와닿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부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진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하물며 주변의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 문제. 저도 늘 관심이 많은데 재사용,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대란이 벌어지잖아요. 정부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라 또 터질 수 있는 문제라

김성경 자락당 대표

순서대로 보면 인식-실천-보상인데 실제 행동은 보상-실천-인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보상도 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원전 문제, 화학물질처럼 일반 시민이 보기에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인 것 같아요.

사회 말씀대로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불편한 것을 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행동이 공기청정기 구입처럼 개인적인 자기방어로 집중되기 쉬운데요, 보다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성경 일단 저는, 첫째로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인식하더라도 막상 실천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인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 인식-실천-보상인데 실제 행동은 보상-실천-인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보상도 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중한 것은 개인적인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보상을 주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가게가 분명히 널리 확산되었지만 기부를 통해서만 물건들을 받다보니, 받은 물건 중 일부는 폐기되고 그렇게 폐기되는 물품 처리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면 더 좋은 물건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갭gap을 메울 수 있겠다 생각하며 마켓인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실천이 인식 전환의 차원까지 가려면 어쨌든 개인적인 보상을 주면서, 조직 자체가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 말씀을 들으니 파타고니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재활용 의류 판매라고 하면 일단 그 표현에서 한 단계 매력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다가가는 매력적인 콘셉트가 있지요?

김성경 일단 우리 매장에 들어오시면 보통 재사용 마켓인지 몰라요. 자신이 재사용 마켓에서 소비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런 인식 자체는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매장 자체를 편집샵처럼 꾸며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2000년대 후반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에코웨딩만이 정답이라는 식의 홍보를 했어요. 기존 웨딩은 다 나쁘고, 합성섬유 드레스를 쓰면 안 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신랑신부가 찾아오면 가르치는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대지를위한바느질 메인 홈페이지에는 결혼식을 취지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가 앞에 있고, 친환경 콘셉트는 살짝 뒤로 숨어 있어요. 친환경

을 소비자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개발자인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식한 거죠. 본인이 좋아서 소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었구나, 이런 인식이 드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모 회사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업에서 느낀 것은 개발자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도 마케팅 부서나 재무 부서에서 단가, 원가 등을 따지다보면 도저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생활용품이 거의 다 플라스틱인데 분리배출이 어려운 이유는 용기와 라벨, 뚜껑, 펌프에 들어가는 스프링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리 해체해서 내놓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할 수 없죠. 그때 개발자나 생산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생수 페트병은 라벨을 쉽게 뜯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라벨 실링 기계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작은 개선을 하지 않고 몇 년째 소비자에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나쁘다고 봐요.

저는 생협처럼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업이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책임 있는 개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면 좋겠어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분리수거 하기 좋은 제품을 개발하라고 말이죠.

사회 기업이나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오창길 첫째로, 국내외의 에너지 혁신 선진 사례를 많이 알려야겠죠. 미국

샌디에고는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유전지대인데도, 최근에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16%를 점유하고 있고, 태양광발전도 용량 면에서 5년 안에 미국 내에서 현재 10위에서 2위로 도약할 것으로 태양광에너지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비용은 2010년 대비 48% 하락했고, 2015년에는 6%가 추가로 떨어졌죠. 그래서 2031년까지 태양광 전력망을 70배 늘린다고 선언했어요. 이미 두 곳의 작은 도시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전 개발보다 재생에너지,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훨씬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 사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다량 사도 비닐봉지를 주지 않아서 백팩에 넣고 와야 했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페트병 마개 분리수거를 하지 않지만 일본은 이걸 따로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활동을 크게 보여주거든요. 또 환경 관련 책들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책으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이 있는데 휴대폰 부품의 중요 원료로 쓰이는 콜탄 성분 채굴 때문에 콩고 접경지역의 고릴라 서식지를 파괴하는 실상을 전하면서 환경 실천을 제안하죠. 내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생협의 활동 방식에서 배울 바가 많다고 봅니다. 아까 강서구에 생협 조합원이 1,7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아마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은 수백여 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결혼식, 장례식, 놀이터 등 누구나가 다 겪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선택을 바꾸겠다는 공감을 확산하려면 (제 반성이기도 한데) 경직된 접근이 아니어야 하겠어

요. 환경단체의 이슈처럼 느껴진다면 안타깝지요.

사회 우리 모두의 생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내 생활도 즐겁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오창길 노원구에서 에너지 자립 주택이 실제로 관리비를 줄인다는 게 증명이 되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빗물탱크 보급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무용지물인데 가정주택용, 도시텃밭용은 무척 필요하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대대적으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요.

윤성미 안타깝게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들이 있어도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럴 땐 지자체가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도 그게 주민의 삶 속에서 실행되기 위해선 칸막이 행정도 사라져야 할 텐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김신범 비용을 따지는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몸에 안 좋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접착제를 바꾸자고 말하면 비용 때문에 어렵다던 회사가, 접착제가 새차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접착제를 바꾸더군요. 가능한 비용과 불가능한 비용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까지 관계가 확장되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생산과 소비가 만나서 모두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생협과 같은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협은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쿱에서 교육 요청이 오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갑니다(웃음).

그런데 생협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에는 나쁜 경제와 좋은 경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협은 좋은 경제를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망치는 건 나쁜 경제예요. A 기업이 100원이라도 싼 원료를 사용하면 B, C, D 모두 이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나쁜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피해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나쁜 경제에 대해서는 환경운동단체와 노동조합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저는 나쁜 경제를 감시하는 운동과 좋은 경제를 만들려는 생협 운동이 만나면 균형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 해결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활동이 가능한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오늘 좌담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신범 사실은 행동을 일으키고 역할을 할 때 권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일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경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북유럽에는 친환경 마크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노르딕 스완Nordic Swan[3]

3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이 노르딕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에 따라 1989년 도입한 환경라벨링 제도로,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제품임을 관리 기구로부터 인정받으면 시판되는 제품에 '노르딕 스완'이라 불리는 백조 모양의 인증마크가 붙는다.

이 있는데요. 예컨대, 덴마크 정부가 어린이용품 환경호르몬 조사를 한 다음 학부모들에게 스완 마크가 있는 것만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하죠. 그런데 이런 국가 차원의 마크 말고도,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제비 마크도 있어요. 전 정부가 좋은 친환경 마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시민단체가 또 친환경 마크를 운영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제비 마크를 운영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물어봤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시민단체에서 친환경 마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돌아온 답은 이랬어요. 정부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지는 않다. 시민사회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마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답변을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스완 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친환경 마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비 마크랑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죠,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쟁하는 주체이고, 사회에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바디버든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아이쿱이 국가를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쿱이 GMO 표시 캠페인, 바디버든 캠페인을 통해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면서 권위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조합원들은 아이쿱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문제는, 농약은 잘 관리하게 되었지만 그 밖의 화학물질 관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더 나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해야 하는데, 바디버든 캠페인을 하면서 미강을 주고 유채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홍보를 하는 등 이 권위를 더 키워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이 권위의 허점을 공개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생협이 더 나은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생협이 이 일을 해낼 때 국가도 따라오면서 국민

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모든 생협이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친환경 마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오창길 지진 문제나 가습기, 생리대 문제 모두 기계 기술로 제어하거나 기업 제품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방법이 많아요. 이미 미국에선 시민운동이 옐로우 캡Yellow Cab이라고 해서 친환경 차량이 아니면 등하교 차량으로 학교 주변을 오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국내 학원 차량의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로 10년 이상 된 차량이 70%는 될 겁니다. 여기에 집진 필터를 장착케 하거나 생활녹화운동을 통해서 도시에 방풍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요.

한편,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도시 개발이 20~30년 동안 빠르게 진행된 서울시엔 밀집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없어요. 미세먼지는 지역, 권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걸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는 미세먼지 데이터는 이미 1시간 반 전에 측정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측정하지 않고 정부가 준 발표만 다 믿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과학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하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환경 관련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시민이 무차별로 피해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김신범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게 모든 변화의 출발일지도 모르겠어요.

오창길 그래서 대안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그룹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최근 환경운동에서 일했던 분들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에어가든'이란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에

어컨 정도 크기의 식물이 공기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성경 우리나라에선 은근히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자신들만의 심판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거쳐야 받아들이는 속성들이 있으면 제비 마크 같은 게 나올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누가 좋다는데, 누가 괜찮다던데 하면 믿는 거죠. 유럽에서 넘어왔다고 하면 믿고요. 개인들이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를 매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파급력을 가져갈 것인지 참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사회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책임 있는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신범 생산이 바뀌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바꾸고 공장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산을 바꿀 만큼의 소비자 규모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가 국가의 시스템이나 프레임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발상 자체가 창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경 올해 마켓인유가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마켓인유 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에도 쓸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경재 환경문제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이 공감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실은 아직까지 생존 단계인 것 같아요. 현실에선 생존 단계이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굉장히 넓고 커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고려하다가 힘들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엔 자금 없이 연대하다 보니 돌아가며 희생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협이나 다솜이재단, 아름다운가게처럼 이미 안정화된 선수들이 사회적경제 안에서 다른 조직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서 규모화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규모화된 기업이 나오려면 5년에서 10년은 더 투자하고 연대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오창길 여담인데, 제가 일본에서 '수요일의 고양이水曜日の ネコ'란 맥주를 마셨는데, 이게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피곤감이 오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20~30대 여성, 독신들을 타깃으로 해서 개발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야 겨우 1% 정도겠지만 지지자가 분명히 있는 콘셉트인 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콘셉트를 잘 잡아나가면 광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실한 사람들이 네트워크해서 맥주도 마시고(웃음), 또 아이쿱처럼 먼저 나간 곳에서 한발만 디딤돌도 내어주고. 그러면 바깥세상이 보이거든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심을 두는 일거리를 가지고 연대해야 해요.

사회 긴 시간 함께 풍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슈

협동조합 정체성에 주목한 독일 협동조합의 감사제도

박 성 재
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독일 협동조합 조직 체계]

출처 : 문크너 · 전형수(2010)* , DGRV(2017)**

* 한스 뮌크너 저, 전형수 역(2010).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신협연구』 제55호. 63-129쪽.
** DGRV(2017). "FACT AND FIGURES", www.dgrv.de/en/home.html.

1. 서론

협동조합 선진국 독일은 독특한 협동조합 감사제도로 조합원과 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다. 지분 거래를 금지하는 협동조합의 약점인 시장평가의 제약을 외부감사로 해소하면서, 또 그 외부감사를 협동조합 체제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간섭 등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분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를 통해 시장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 협동조합은 투자 대상이 아니며 인적 결사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제 상태 및 그 성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협동조합도 내부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 업무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의 감시일 뿐이며 시장의 평가까지는 담지 못한다.

독일은 이 문제를 외부감사의 의무화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인 "조합원 편익 증진promotion of members"[1]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에 대한 감사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오직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서 특수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협동조합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앞으로 살펴볼 독일의 협동조합 감사제도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합원 보호와 그 편익

1 Grosskopf, Münkner, and Ringle(2016)은 조합원 편익 증진을 의미하는 promotion of members 또는 member promotion을 엄격히 정의한다. 오직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편익이 발생했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협동조합 존재 자체가 경쟁을 촉진한 것이므로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편익 증진'이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에게도 그 이익이 해당되기 때문이다(Grosskopf, Münkner, and Ringle. 2016. 70-72).

증진,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 협동조합 감사제도의 특징,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 관련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Grosskopf, Münkner, and Ringle(2016)의 자료를 주로 참고했음을 밝힌다[2].

2. 협동조합 감사제도의 특징

협동조합 제도

독일 협동조합은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일반법에 의해 규율된다.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은행, 농촌, 중소기업, 소비자, 주택, 에너지 등 6개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각 그룹 협동조합은 지방의 단위조합, 지역연합회, 전국연합회의 3단계 계통 조직을 갖고 있으나 중간연합회가 없거나 전국연합회가 없는 것도 있다[3]. 3단계 계통 구조를 가졌던 협동조합들도 경제사회 환경 변화, 시장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합병을 통한 규모화·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중간에 위치한 지역연합회가 단위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에 흡수되어 그 숫자가 감소했다.

각 그룹별 협동조합은 주택협동조합을 제외한 5개 그룹이 독일협동조합·라이파이젠연합회DGRV라는 전국총연합회를 구성한다[4]. DGRV 회원

2 Grosskopf, W., H.-H. Münkner, and G. Ringle(2016). *Our Co-operative : Idea–Mission–Achievements*. second, revised version. LIT. 156-164를 발췌, 요약하여 그 내용을 주로 반영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연합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협동조합은 전국연합회도 없다.

4 박성재, 이명헌(2017).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의 길 : 독일 사례와 시사점」. 『한국협동조합법제도개선연구 1』.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참조.

으로는 독일라이파이젠연합회DRV, 독일국민·라이파이젠은행연합회BVR, 독일중소기업그룹ZGV, 독일소비자협동조합중앙연합회ZdK 등 4개의 연방 단위 연합회와 5개의 지역연합회, 6개의 전문협회와 56개의 전문기관 등이 속해 있다.

독일의 모든 협동조합은 공인된 협동조합 감사연합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연합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DGRV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감사 업무인데 주로 5개의 지역연합회와 전문협동조합감사연합회가 이를 수행하고, 본부는 일부 회원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5]. DGRV가 실시하는 감사 외 다른 주요 기능은 회원들을 대표한 이익 대변과 대외협력 창구 역할이다. 연방연합회를 갖지 못한 에너지협동조합을 위한 전국연합회의 역할도 수행한다.

감사제도의 특징

독일의 협동조합 감사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협동조합감사연합회에 가입해야 하고, 그 연합회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감사에는 회계감사 외에도 경영을 평가하는 성과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정부는 감독을 빌미로 협동조합에 개입하지 않는다.

외부감사는 DGRV 지역연합회와 감사전문연합회, DGRV 본부가 수행한다. DGRV 본부는 금융, 유통, 서비스 분야의 중앙 협동조합Zentralgenossenschaft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형태를 갖춘 회원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시장에서 공인된 회계사

5 협동조합 감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합회는 FPV와 PV이다.

또는 회계기관을 선택하지만 협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 감사연합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협동조합 감사와 일반회사의 감사는 〈표1〉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일반회사는 회계와 연간 수익에 대한 장부 감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 감사는 이에 더해 경영진이 조합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일반회사는 총회에서 회계감사(기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감사연합회의 감사만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그 경제 상태나 경영 성과를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자신의 조합을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기 조합의 상태를 알 수 없다. 회계감사관은 이러한 협동조합 경영 투명성의 약점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외부감사제도가 협동조합 정관 자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외부감사라는 방편을 통해 협동조합의 시장 평가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결

〈표1〉 협동조합 감사와 일반회사 회계감사의 비교

비교 요소	협동조합 감사	일반회사 회계감사
1. 목적	경제 상황과 경영이 신중하고 부지런한 협동조합 매니저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진술	회계와 연간수익에 대한 장부 감사
2. 감사 대상	시설 장비, 협동조합의 자산 및 경영	연간 경영보고를 포함한 연간 수익과 그 장부들
3. 감사 범위	법과 정관에 일치하고 협동조합 매니저가 신중하고 근면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장부와 회계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에 따라 일치하는지를 입증
4. 책임 기관	당해 협동조합이 속한 협동조합감사연합회	총회에서 임명한 공인회계사
5. 동기	조합원 보호는 물론 신용 공여자를 보호하여 협동조합운동을 촉진	신용 공여자와 그 경제에 이해를 갖고 있는 기업 보호, 주주 보호

출처 : Grosskopf, W., H.-H. Münkner, and G. Ringle(2016 : 161)

과적으로 정관 자치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협동조합 감사제도의 역사

독일의 협동조합 감사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가 도입된 것은 협동조합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했지만 협동조합 선구자인 슐체-델리치Hermann Schulze Delitzh의 선구적 혜안이 작용한바 컸다. 그는 국가가 감독을 이유로 협동조합에 개입하는 것을 염려하여 자체적으로 감사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려 했다.

19세기 중반 협동조합이 빠르게 확산되자 협동조합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세력이 늘어났다. 슐체-델리치는 시장의 신뢰 문제가 협동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협동조합 스스로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경영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① 경영자의 오류 교정, ② 장부기록과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교육 제공, ③ 올바르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의 구조를 바로잡아주면서, ④ 잠재적인 조합원이나 예금자들에게 협동조합이 안전함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그 대책으로 회계감사제도가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6].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협동조합지역연합회가 맡도록 했다.

슐체-델리치가 협동조합 감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자 그 비판 세력들은 정부가 협동조합을 감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슐체-델리치는 정부가 협동조합을 감독할 경우 이를 빌미로 협동조합을 간섭할 위

6 Timothy W. Guinnaney(2001). "A 'Friend and Advisor' : Management, Auditors, and Confidence In Germany's Credit Cooperatives, 1889-1914". Yale Economic Growth Center Discussion Paper, No. 824.

험성이 있는 데다 조합원들도 스스로 조합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잊어버리고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가 감독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1889년 협동조합법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이 회계감사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개입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협동조합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은 시대적으로 매우 앞선 것이었다. 일반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제도가 의무화된 것은 이보다 42년이나 지난 1931년이었다.

협동조합법 제51조는 모든 협동조합은 최소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을 때 단위조합은 지방법원에 회계감사자를 지정해주도록 요청하거나, 아니면 전문회계 조직으로 전환한 협동조합지역연합회가 고용한 자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명분으로 정부가 끼어들 여지를 없앤 것이다.

1934년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감사를 대폭 강화했다. 등록된 모든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 경영의 질을 평가하는 성과감사를 추가했다. 성과감사는 경영자가 조합원 편익 증진promotion of members을 위한 경영을 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법은 자산 35만 마르크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협동조합 감사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감사연합회는 협동조합 감사관으로 최소 1명 이상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73년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협동조합감사연합회는 최소 1명의 허가받은 회계사를 이사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6년 법 개정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자산 규모가 100만 유로 이하이면서 연간 매출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주고, 감사관은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새롭게 규정했다(법 제55조 2항). 둘째, 감사보고서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인정받은 자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4. 협동조합 감사의 3대 과제

3대 과제

감사 종류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또는 재무회계감사financial (formal) audit와 경영성과감사performance (material) audit of management로 구분된다. 재무회계감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계장부와 연차보고서 등 상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평가한다. 경영성과감사는 의사결정과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것으로 원칙과 목표에 맞추어 경영을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회사의 회계감사가 연도의 성과, 장부와 회계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또 법과 정관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인 데 반하여 협동조합은 경영 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까지 묻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만이 갖는 특수한 제도로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 편익 증진member promotion'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감사는 협동조합의 경제 상태와 경영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설 및 장비, 경제 상태, 경영을 감사의 대상으로 한다. 이 관계로부터 감사의 3대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회계장부 및 연간수익 감사audit of the books and the annual return이다. 회계장부 감사는 모든 회계와 장부가 적절히 기록되고, 재고는 빠짐없이 계산되었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증된 것인지를 감사한다. 이는 장부의 정확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만을 허락한다. 최종 판단은 오직 연수익 감사에만 허락한다. 이러한 감사는 경제 상태와 경영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경제 상태 평가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이다. 감사관이 협동조합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업 행정의 관점에서 첫번째 과제에서 발견한 사실을 평가해야 한다. 경제 상태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설명 자료로부터 출발한다. 과제의 중심 목표는 소득과 지출의 관계, 자산과 재무 상태 파악에 둔다.

셋째, 경영감사management audit이다. 이는 일반회사에는 없는 장치로서, 협동조합 감사 특유의 것이다. 그 영역은 ① 경영 조직(직원의 자질, 임원의 자질, 업무 분담, 내부 보고체계 준수), ② 경영 수단(장부와 회계, 활동 계획, 내부 통제), ③ 경영 성과(일반적인 경영의 규칙 준수, 내부 감독, 회사 지배구조와 협동조합의 특별한 요구사항의 준수 등)를 포괄한다.

경영감사는 경영진이 조합원 편익 증진member promotion을 의무사항으로 고려했는지부터 평가한다. 경영이 편익 증진 계획에 바탕을 둔 경영이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감사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 큰 역할을 한다. 사실 조합원 편익 증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오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사관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에 의존한다.

주식회사 등은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지만 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회사는 성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떨어진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지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투명성 측면에서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패가 주식회사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협동조합이 지급불능 비율이 낮고 파산을 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성과감사가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연합회와 감사위원회의 협조

감사연합회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라는 보완 관계로 작용한다. 감사연합회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외부감사로서 과거의 행적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기관으로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연합회의 감사 의견에 따라 잘못된 문제를 고치도록 한다. 외부감사는 의견만 내는 것에 비해 감사위원회는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서 외부감사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통제는 외부감사와 내부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함께 이뤄질 때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외부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자문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인력과 내부 지식을 동원하여 외부감사를 지원한다.

감사의 효과

협동조합 감사연합회는 많은 협동조합을 감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시장의 특수한 문제까지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감사연합회가 협동조합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경영인의 책임을 묻고 경영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협동조합만이 이러한 감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 효과에 대한 기준은 조합원의 이익 보호, 협동조합 기업의 장기 존속, 그리고 조합원 편익 증진의 효율성이다. 문제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감사의 의견대로 하면 과연 문제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 다른 비판은 독일식 협동조합 감사제도가 자유 경쟁을 해치고 협동조합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협동조합이 협동조

합감사연합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협동조합감사연합회가 협동조합 감사를 독점한다는 비판이었다.

EU는 일반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과 협동조합 감사의 특수성 사이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고자 했다. 독일식의 협동조합 회계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고려해야 하는 EU로서는 조율의 필요성이 있었다. EU의 노력으로 협동조합감사연합회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이사를 공인회계사로 채워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협동조합감사연합회는 이 조항에 동의하고 성과감사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일반회사와 협동조합 감사제도의 차이점을 줄이려는 방향은 협동조합 감사관으로 공인회계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5. 시사점

독일 협동조합 감사제도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율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질줄 알아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독일은 투자 대상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서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 지분 거래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감사의 제도화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최우선 목표인 조합원 편익 증진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감한 평가의 잣대를 가져감으로써 경영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을 실현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농협도 단위조합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협동조합의 예를 따른 것이지만 아직 경영성과감

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농협 내부의 감독체계만으로도 충분한데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단위농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축기관이며, 예금의 대부분이 비조합원 예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외부감사 의의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예금자나 채권자 등의 권익 보호에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얻는 시장의 신뢰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서는 큰 효과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의 경우 외부감사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상을 본받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슈

소비자는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의미와 과제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가습기 살균제, 발암물질 생리대, 라돈 침대, 살충제 계란 등 생활용품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포비아phobia'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위주 정책으로 국민은 뒷전이다. 안전 기준은 허술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 정부 정책이 국민 안전보다는 기업 위주와 산업 활성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제도의 끝판왕은 짝퉁 GMO 표시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명체다. 식량 부족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는 포장을 한 채 정부와 과학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전 세계로 급속히 퍼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천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식용 GMO 농산물도 220만 톤이 넘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과자류, 두부류, 라면류, 식용유, 액상과당, 장류, 통조림류 등 약 500개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식품 대기업에서 제조·생산한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GMO 수입을 많이 하고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GMO 표시는 없는 이상한 표시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가 GMO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거나, 조금(3% 이내) 들어가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 대기업은 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GMO 원료를 사용하고도 전혀 표시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없어진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운동 퍼포먼스(2018. 3. 12.)

청와대는 응답하라

짝퉁 GMO 표시제를 개혁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지난 20년간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시제도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물렀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했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제 강화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부

푼 희망으로 설레었다. 그러나 설렘은 분노로 바뀌었다. 안타깝게도 취임 1년이 되어도 약속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GMO 표시제 개선 활동을 했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을 중심으로 57개 소비자-환경-농민-학부모-생협 단체들이 모여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했다. 시민청원단은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GMO 학교급식 금지, Non-GMO 표시를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정 현안에 관해 물으면, 정부가 답을 하는 정책이다.

알 권리와 국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청원에 대한 국민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에서는 청원 참여를 요청하는 자발적 글이 이어졌고,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 캠페인도 진행됐다.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급식 퇴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청원 참여를 홍보했다. 특히 생협 매장과 학교 주변에서 주부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그 결과 21만 6,88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하루 평균 7,3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이다.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국민 염원이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 기본권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 답변

국민청원이 끝나고, 약 1달 후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물가 인상 및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유보하고, 책임을 사회적 합의 기구로 넘긴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답변이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 표시제 강화와

〈표1〉 국민청원 주요 일지

날짜	내용
2018. 03. 12	GMO 완전표시제 및 GMO 학교급식 금지 국민청원 시작
2018. 03. 31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참여자 10만 명 돌파
2018. 04. 02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집중 캠페인 전개(~11일까지)
2018. 04. 09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 돌파
2018. 04. 11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마감. 총 216,886명 참여
2018. 04. 25	국민청원 청와대 간담회 개최
2018. 05. 08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을 축소하거나 근거 없이 기업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GMO 원료를 기름·전분·당뿐이라며 애써 GMO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GMO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아, GMO 식품은 공공 급식에 쓰이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나아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Non-GMO 표시에 대한 답변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청와대는 Non-GMO 표시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Non-GMO는 GMO 표시가 안 되는 현실에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율적으로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청와대 답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GMO-free와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서 표시하는 Non-GMO 표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국제적으로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해야

청와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연구 결과가 개선 방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도 청원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GMO 표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사회적 합의를 위한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를 구성했다. 해당 협의체는 2018년 5월까지 총 3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GMO 완전표시제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회의 안건과 자료는 비공개했고, 회의 역시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합리적 논의를 위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주장만 난무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지나 노력 없이, 협의체를 GMO 표시제도 개선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와 가족,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야 한다.

싫든 좋든, 공은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협의체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

부가 최소한 GMO에 대한 문제점과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아닌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청와대 약속처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 소비자 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 단체나 산업계, 학계만이 아니라 농민, 학부모, 급식, 환경, 종교, 생협 등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논의는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회의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

다양성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GMO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20년이 되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Monsanto가 전 세계 GMO 종자의 90%를 독점하고 있다. 전 세계가 GMO에 의존한다면 다양성은 파괴된다. 종자의 다양성, 식량의 다양성, 나아가 생명·환경·농업·농촌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우리는 특정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

GMO가 심각한 것은 한번 생태계로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승인받지 않은 GMO 유채가 재배되어 전국적으로 퍼졌고, 정부의 노력에도 GMO 유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이 GMO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현장에서 만난
브라질 연대경제의
자주관리

모두가 스스로 주인 되기

특별 기고

주영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학습성장부문

모든 일을 모든 이가, 모든 결정을 모든 이가

"네? 회계 담당자도 매월 바뀌요? 모든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회계를 맡는다고요?"

"그래요. 다른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해요. 조합원 모두가 조합의 모든 일을 다 돌아가며 맡아요. 지금은 내가 회계를 맡고 있고 마리Marie가 시장에서 원단을 사오는 일을 맡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장부를 어떻게 쓰고 옷감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해요. 지금 재봉을 하는 사람도 다음에는 재단을 해야 하고요."

노스 협동조합Cooperativa NOS의 조합원 조Joa의 대답에 놀란 나는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규칙은 어떻게 정했나요? 누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나요?"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여름 햇살이 따가운 아침이었다. 나는 생태 도시로 유명한 브라질 남부 꾸리찌바Curitiba 시의 파벨라Favela, 빈민가 빌라 토레스Villa Torres에 있었다. 빌라 토레스에 사는 10명의 여성이 모여 아이들의 체육복과 에코백 등 봉제품을 만드는 노스 협동조합의 연대경제 작업장이었다. 노스는 포르투갈어로 '우리', 브라질 남부 원주민의 말로는 '바느질 실밥'을 뜻한다고 했다.

미싱과 재단용 탁자가 놓인 작업 공간을 둘러보니 우리의 자활기업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이곳으로 나를 안내해준 연대경제 인큐베이터 단체 트릴랴스 인큐베이터Incubadora Trilhas의 이자벨Isabel이 조의 말을 영어로 내게 옮겨주었다.

노스 협동조합(Cooperativa NOS) 조합원들과 함께 ©Trilhas/Grasiele Modesto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정해요. '모두가 모든 일을 알고, 또 모든 일을 하고, 모두가 같이 결정한다.' 노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트릴랴스와 함께 정한 원칙이에요."

"그럼 만약에 조합원 중 누구 한 사람이 논의 자리에 없으면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결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있을 때 결정해요."

놀라웠다. 출장 전에 브라질 연대경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어렴풋하게 짐작은 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다.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 브라질 혹은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이런 걸까? 아니면 연대경제가 본래 이런 걸까?

자주관리, 도대체 뭐기에

2018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아 일주일간 브라질 꾸리찌바에 다녀왔다. 지구 반대편 나라 브라질을 방문하는 드문 기회였기에, 브라질의 연대경제Economia Solidária, Solidarity Economy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다. 맡고 있는 일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섹터의 조직 운영과 교육 훈련을 고민하는 것이다 보니, 연대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동하고 학습하는지 궁금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과 사회연대경제 연구자 미구엘 히로타Miguel Hirota Masayuki 등 여러 분의 도움으로, 심포지엄 앞뒤 일정을 활용해 꾸리찌바 지역의 연대경제 협동조합 한 곳, 매장 두 곳, 그리고 대학 인큐베이터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이 글을 빌어 위 두 분을 비롯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브라질의 연대경제에서 가장 궁금하고 관심 가는 내용이 바로 '자주관리auto-gestão'였다. 국내 사회적경제에서는 그리 자주 언급되지 않는 용어인데, 브라질 연대경제를 설명한 여러 자료들마다 연대경제의 핵심 원리

브라질 노동부 산하 연대경제국(SENAES)은 연대경제의 핵심 가치를 다음의 7가지로 밝히고 있다.

(1) 임금노동 대신 자주관리
(Self-management instead of wage labour)
(2) 경제관계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ic relations)
(3) 경쟁 대신 협동
(Cooperation instead of forced competition)
(4) 다양성 중시 : 이윤보다 인간
(Valuing diversity. Human beings are more important than profits)
(5) 지역의 지식 중시, 항시 교육 훈련
(Valuing local knowledge, constant learning and training)
(6) 사회 정의와 해방
(Social justice and emancipation)
(7) 환경의 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출처 : 브라질 연대경제국 홈페이지(http://trabalho.gov.br/ecosolidaria/secretaria-nacional-de-economia-solidaria)

로 자주관리를 첫손에 꼽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경제에서 자주관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제 조직을 경영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고용되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 놓인 이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자주관리는 포르투갈어로 아우토제스텅autogestão이라 하는데 여기서 auto는 '스스로', gestão는 '관리, 운영, 감독'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보통 self-management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자칫 개인 차원의 자기관리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 쉽다. 실제 의미를 조사해보니 개념과 맥락이 전혀 달랐다.

국내 사회적경제에서 자주관리라는 용어는 주로 노동자들이 직접 공장이나 설비, 시설을 인수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례(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나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유기농 생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정도이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자주관리 개념을 연대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궁금했다. 도대체 자주관리가 무엇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자주관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연대경제 현장에서는 자주관리를 어떻게 학습하고 훈련하며 실천하고 있을까? 브라질행 비행기를 타면서 함께 실은 질문들이었다.

연대경제의 제1법칙
: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주인 되기

한국과 밤낮과 계절이 정반대인 브라질에서, 나는 10명의 꾸리찌바 여성들로부터 질문의 대답을 듣고 있었다. '모든 일을 모든 이가, 모든 결정을 모든 이가 한다.' 구성원member 모두가 조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지

고, 모든 의사결정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내린다는 대답이었다.

비슷한 놀라움은 다음 날, 꾸리찌바 광역권의 위성 도시인 상조세두스피냐스Sao Jose dos Pinhas의 번화가에 위치한 연대경제 매장 두 곳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매장 한 곳은 10개 연대경제조직EES : Empreendimentos de Economia Solidária, solidary economy enterprises이, 또 다른 매장은 6개의 연대경제조직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별도의 매장 운영 주체가 있고 단체들이 그곳에 공동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개 연대경제조직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자의 매장은 단체별로 1개월씩 돌아가며 매장을 운영하고, 후자의 경우 단체마다 매장 담당자를 정하고 이들이 모여 상시 운영을 맡고 있다

상조세두스피냐스 시내 중심가의 연대경제 매장 ©YoungHo Joo

고 했다. 전자의 경우 매장 운영은 단체들이 돌아가며 맡지만, 의사결정은 10개 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운영회의에서 내린다.

"그럼 매장도, 말하자면 연합 자주관리 방식인 거네요?"
"네, 그게 연대경제니까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피곤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일은 대체 언제 할까? 만약 한 사람이 조합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할까? 다음 달까지 노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줄루Julu에게 물었다.

"모든 사람이 조합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있고 또 잘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가 아기를 안은 채로 웃으며 대신 답했다.

"맞아요.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재봉이 잘못되면 잘못 박음질된 부분을 손으로 일일이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다시 재봉틀로 박을 수 있는데, 재봉 작업은 재미있지만 뜯는 작업은 사실 아주 귀찮고 번거로워요. 다들 하기 싫어해서 한동안 뜯는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도 있어요. (웃음) 물론 결국은 다시 하기로 했죠. 하지만 모두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고 싫은 일이란 걸 아는 거죠."

줄루가 덧붙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또 잘하는 사람만

노스 조합원들이 함께 정한 조합의 가치들
©Youngho Joo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일을 계속 안 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과 관련된 조합의 결정을 내릴 때, 모두가 함께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모두가 알아야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조금 감이 잡히는 기분이었다. 연대경제는 모든 구성원이 정말로 조직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기를 추구하는구나. 이상이나 슬로건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주인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다. 모두가 주인이 되려면, 모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가져야 한

제품에 조합 태그를 달며 설명 중인 이번 달 대표 줄루 ©Trilhas

다. 그런데 모두가 결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와 권력 차이 때문에 사실상 함께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많은 협동의 현장에서 '공동 책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용되며,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마리와 줄루의 대답에 따르면, 브라질 연대경제에서는 아니 적어도 노스와 트릴랴스에서는 '모두가 주인 되기'라는 난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일에 모든 의무와 책임을 함께하고, 이를 통해 정보와 권력의 격차를 줄인다. 이 바탕 위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서 합의하여 의사결정 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모두가 주인 되기를 추구한다면, 자연스레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나뉘는 임금노동 관계는 연대경제와 맞지 않다. 지역 명망가나 활동가, 혹은 사회혁신기업가가 리더가 되어 기업을 설립하고 자원을 구해 소외계층을 고용하거나 돕는 비즈니스를 하는 접근법도 맞지 않다. 구성원이 진짜 주인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자주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연대경제국이 연대경제 7가지 핵심 가치의 맨 첫 번째 항목으로 "임금노동 대신 자주관리Self-management instead of wage labour"를 선언한 것이 새삼 큰 의미로 와닿았다.

스스로 주인 되게 돕는 생태계 : 연대경제 인큐베이터ITCPs

이렇게 '스스로 주인 되기'를 우선하는 연대경제의 가치는 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방식과 시스템에도 깊이 녹아들어 있었다. 트릴랴스의 디렉터 로렌샤Lourenca Santiago와 내게 트릴랴스를 소개해준 연대경제 연구자 베아뜨리즈Beatriz Caitana da Silva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베아뜨리즈는 브라질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연대경제라는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말한다.

"1990년대 초반에 베치뇨Betinho[1]가 히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파벨라에서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파벨라 주민들이 조직

1 브라질의 사회운동가이자 사회학자인 허버트 호세 드 수자(Herbert José de "Betinho" Souza, 1935–1994)를 말한다. 빈곤 퇴치 운동과 빈민들의 생활 조건 향상에 대한 공로로 1994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돕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고안했죠. 베치뇨가 연대경제라는 말을 만들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활동에서부터 빈민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고 이를 돕는 조직들이 결합하는 연대경제의 접근법approach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후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폴 싱어Paul Singer[2]가 연대경제의 개념과 접근법, 원칙을 정리하고 많은 활동가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이러한 전통은 브라질 연대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냈다. ITCPsIncubadoras Tecnológicas de Cooperativas Populares, Technological incubators of popular cooperatives라고 불리는, 종합대학에 기반을 둔 연대경제 인큐베이팅 조직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대학의 역할은 주로 학술 연구와 사회적기업가 양성, 즉 사회적경제 연구자와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브라질의 ITCPs는 대학(원)생들이 주체가 되어, 종합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연대경제조직EESs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혹은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8년 결성된 브라질 ITCPs 네트워크Rede ITCPs에는 2017년 현재 브라질 전역 62개 대학의 연대경제 인큐베이터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신생 연대경제조직이 자주관리를 이루고 경제적·운영적인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2 폴 이스라엘 싱어(Paul Israel Singer, 1932–2018)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계 브라질 경제학자이자 교육자이다. 브라질 연대경제의 스승(guru)으로 불린다. 룰라(Lula) 전 브라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브라질노동자당(PT)의 창설 멤버이기도 했던 그는 2003년 룰라가 집권하고 노동부 아래 연대경제국(National Secretariat for Solidarity Economy, SENAES)을 신설할 때 연대경제국장을 맡아 2016년까지 역임했다. 2004년 연대경제국장 재임 중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유명한 슬로건을 연대경제의 표어로 채택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16일 상파울루에서 별세했다.

노스 협동조합과 상조세두스피냐스의 연대경제 매장 방문을 도와준 트릴랴스도 꾸리찌바의 파라냐가톨릭대학PUCPR에 기반을 두고 있는 ITCP이다. 트릴랴스는 현재 꾸리찌바 광역권에서 노스 협동조합을 비롯해 약 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로렌샤에게 트릴랴스의 인큐베이팅과 자주관리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부탁했다.

"우리가 연대경제조직을 인큐베이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주관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는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조직을 만드는 단계(보조), 2단계는 스스로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생활), 3단계는 법인격을 갖추고 자주관리를 지속해 나가는 단계(지속가능), 4단계는 시장과 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단계(규모)로 구분됩니다. 4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보통 8명 이상이 모임을 결의하고 전원이 모였을 때 트릴랴스 트레이너가 기본 원칙들을 안내한다고 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결정은 모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전원 만장일치로 내린다. 단계별로 조직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는 체크 리스트가 있어, 항목별로 확인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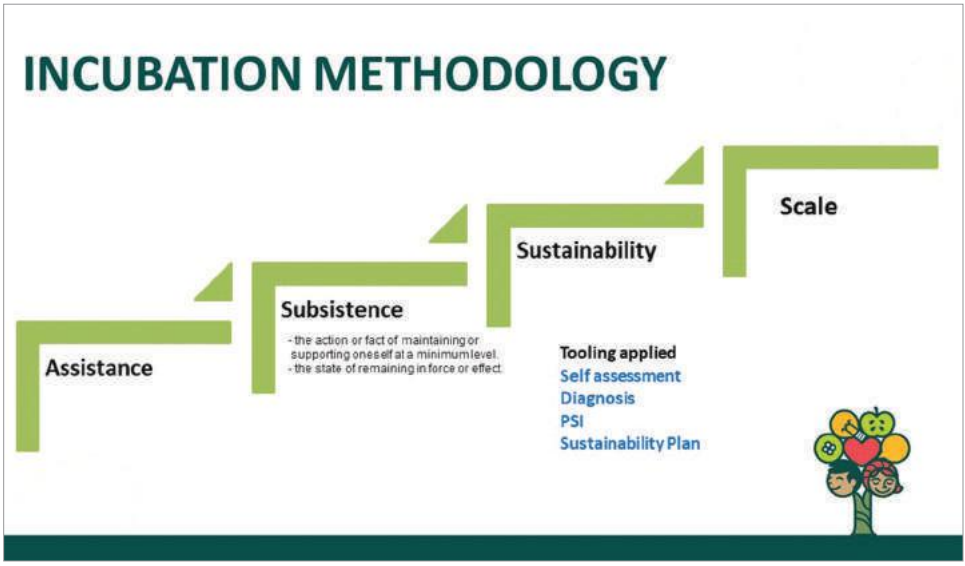
"트릴랴스가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역량을 점검하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건가요?"

"아뇨, 구성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체크 리스트를 갖고 스스로 직접 점검하게 해요. 서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합의하면서 스스로 자가평가self-assessment를 합니다. 모임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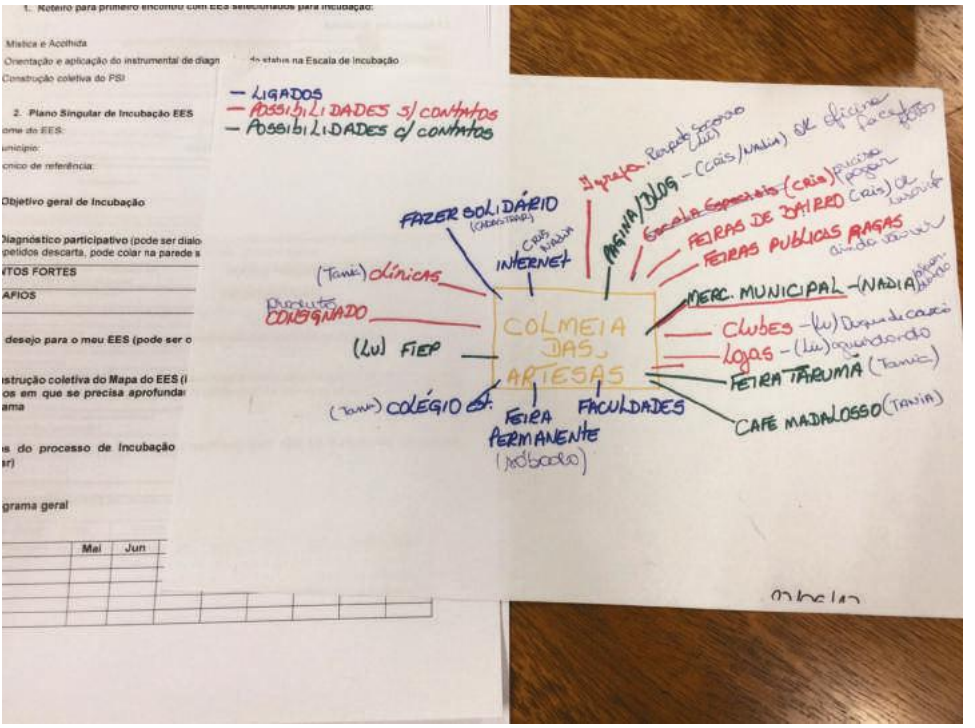
본인들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모여 하려는 일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과 현재 가진 것들을 확인하고, 또 모임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 맵을 그리는 과정까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화하고 또 충돌하면서 진행한다고 했다. 그 과정을 거친 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프로젝트 계획과 우선순위를 구성원들이 결정하면, 트릴랴스 담당자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합의하고 인큐베이팅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인큐베이팅과 자주관리 훈련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스스로 만들고, 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야 자주관리를 지속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2년차가 되면 인큐베이팅 이후의 지속가능 계획을 구성원들이 함께 세웁니다. 스스로 3단계,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트릴랴스의 연대경제조직 인큐베이팅 단계도 ©Trilhas



한 연대경제조직의 구성원들이 직접 작성한 이해관계자 지도 ©YoungHo Joo

로렌샤는 대학 내 연대경제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존재할 경우, ITCP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예컨대 의류를 생산하는 연대경제조직의 경우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 대학의 디자인학과 학생들 혹은 연구소와 연결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노스에서 만드는 학교 체육복 디자인도 PUCPR의 디자인학과 랩이 맡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서의 사례 관리case management와 같은 자원 연계 접근법이다. 트릴랴스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사회복지학, 국제개발,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이들로 이루어져 있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트릴랴스

Trilhas는 포르투갈어로 길들tracks, trails이라는 뜻이다. 여러 갈래의 길들이 모여 협동과 연대의 길을 이루는 듯했다.

연대경제와 해방의 교육학

한국에서 내가 접한 사회적경제 교육 훈련이 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 교육 방식인 데 비해, 브라질에서의 교육은 하나의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소외계층 스스로 그 조직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고 말하자, 베아뜨리즈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볼 때 바로 그 지점이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ship와 연대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대학 도시로 유명한 포르투갈 코임브라Coimbra에서 8년 동안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프로젝트 관리social project management 연구 경험이 있는 그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용어를 포르투갈은 물론 유럽에서도 여러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라는 관점인데 창업가 정신과 사회혁신, 사회적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전development의 도구로서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회적 프로젝트들이 이 관점을 따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경제와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인데 연대경제가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로렌샤가 덧붙였다.

"연대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적 관계,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의 경제 관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처음 내게 베아뜨리즈와 연대경제를 소개해준 미구엘의 설명과도 맞닿는 내용이었다. 브라질 연대경제는 현 경제체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self-organized, 스스로 관리하는self-managed 경제를 추구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들도 구성원들과 연대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008년부터 수차례 브라질 현지에 체류하면서 연대경제 현장을 연구했던 미구엘은 연대경제의 바탕에 해방의 교육학을 주창한 브라질 교육운동가 파울루 프레이리[3]의 페다고지Pedagogy 철학이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들려주었다.

더 큰 규모에서의 자주관리는 브라질에서도 도전 과제

현장에서 본 연대경제의 자주관리는 분명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10~20명 규모의 조직이라면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모든 일을 모든 이가, 모든 결정을 모든 이가' 방식의 자주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0명, 100명, 더 나아가 아이쿱처럼

3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1997)는 브라질의 교육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이다. 글을 모르는(비문해) 농민과 빈민들을 대상으로 읽기/쓰기(문해) 교육을 펼쳐 큰 성공을 거두었다. 문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은 민중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자각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방의 교육학을 주창하여 교육철학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 : 억압된 자들의 교육학)』를 비롯한 그의 저술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트릴랴스 구성원들과 함께. 맨 오른쪽부터 그라찌, 이자벨, 로돌포, 주영호, 로렌샤 ©Trilhas

4,000여 명의 직원을 둔 조직에서도 과연, 같은 방식으로 자주관리가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을 전하자 로렌샤와 베아뜨리즈, 그리고 인터뷰에 동석한 트릴랴스 트레이너 그라찌Grasiele Modesto와 트릴랴스의 모母단체 소셜 마리스타Social Marista의 디렉터인 로돌포Rodolfo Schneider까지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로돌포가 대답했다.

"동의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연대경제조직

들은 소규모입니다. 수십, 수백 명 이상 규모의 조직에서 자주관리를 훈련하고 실행하려면 분명 그에 맞는 또 다른 접근법과 방법론이 필요할 거예요. 아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아마도 회생공장recovery factory[4] 같은 곳에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규모화된 조직에서 자주관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답은 여기 브라질에서도 뚜렷하게 없는 것일까? 꾸리찌바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상파울루Sao Paulo에서 만난 또 다른 연대경제 활동가 드니스Denise Counselor를 붙잡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유네스코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브라질 연대경제를 브리핑했던 그녀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예요. 자주관리를 이루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아요. 공장 단위의 사례는 아무래도 브라질보다는 아르헨티나나 칠레에 더 발전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대규모 생산 중심인) 브라질의 산업 구조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쉽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협동 현장 사례들을 더 살펴봐야겠다는 다짐을 대답 대신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4 노동자회생기업(ERTs : Empresas Recuperadas por sus Trabajadores, worker-recuperated enterprises)을 말한다.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기업주가 경영을 방기한 공장을 노동자들이 인수, 재건하여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2000년대 경제위기 가운데 등장했으며, 2000년부터 연평균 20.5개가 증가하여 2013년 311개에 달했다고 한다. 업종으로는 주로 야금(금속), 인쇄, 섬유 및 봉제 공장이 많다.
출처 : Ruggeri & Viela (2015). "Argentina's Worker-Recuperated Enterprises, 2001-2013 : A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Findings". *JEDO*, Vol. 4, Issue 1 ; 김형미(2018.4.3). 성남시사회적경제아카데미 제17기 기초 과정 "영화로 보는 사회적 경제" 강의 원고에서 재인용.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과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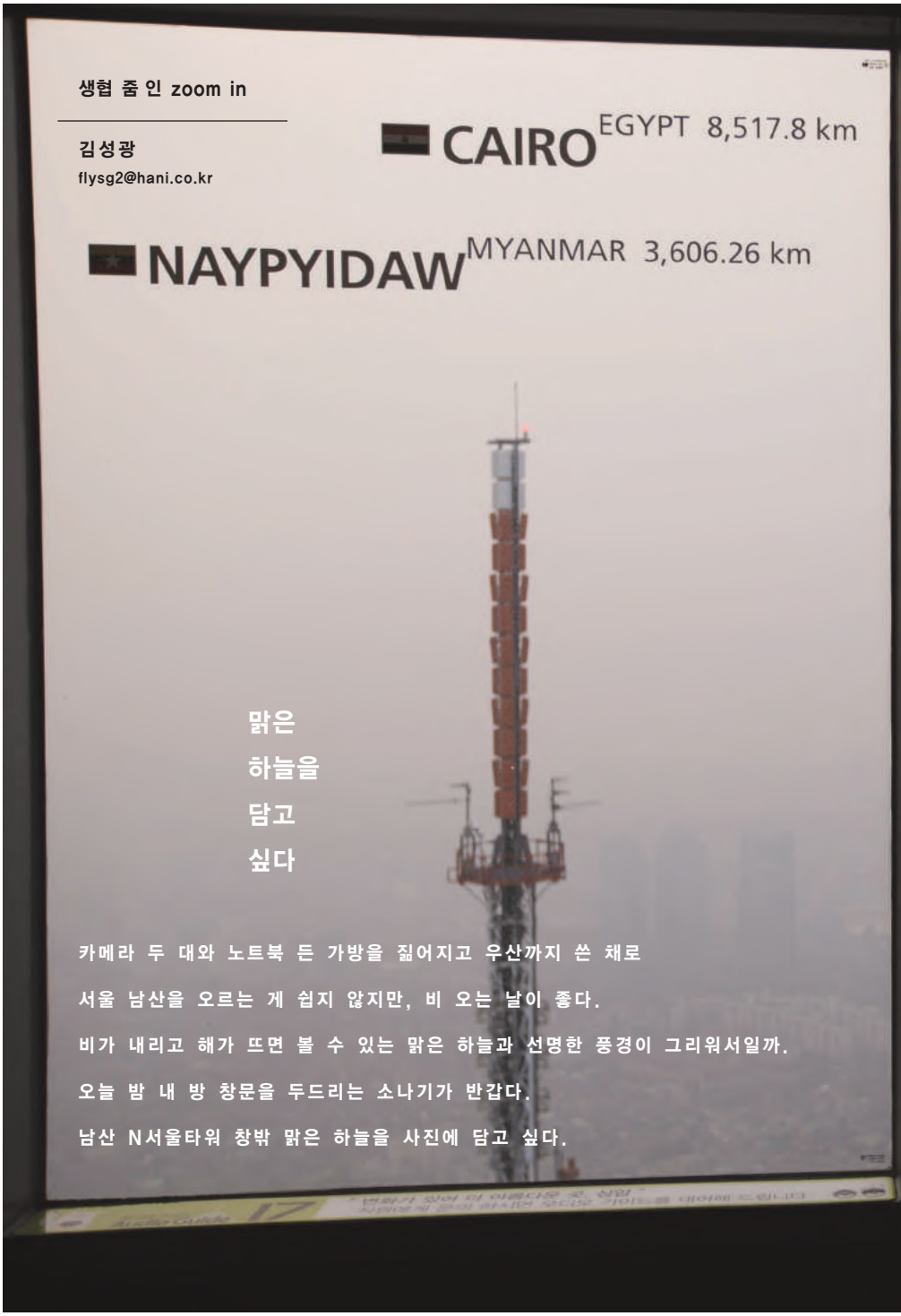
짧은 기간 브라질 현지에서 본 연대경제의 자주관리는 예상보다 더 근본적radical이었다. 조직 내부뿐 아니라 조직의 연합 단계에서도 자주관리의 원리로 매장을 운영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동시에 운영 과정이 매우 피곤하겠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다. 한국에서라면 이러한 접근법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밀려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이러한 피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끈질기게 스스로 주인 되는 경험을 쌓고, 구성원의 자주관리를 이루며, 조직 간 협동과 연대의 생태계를 넓히려는 시도가 브라질 연대경제의 숨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매우 제한된 관찰로부터 나온 단견이다. 연대경제 전체가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접한 소규모 조직들의 수준에서만 유효한 설명일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 또한 각 지역과 국가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 방문이었다. 브라질 연대경제를 만나고 돌아와 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보다는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추구하는 쪽에 좀 더 가깝게 걷고 있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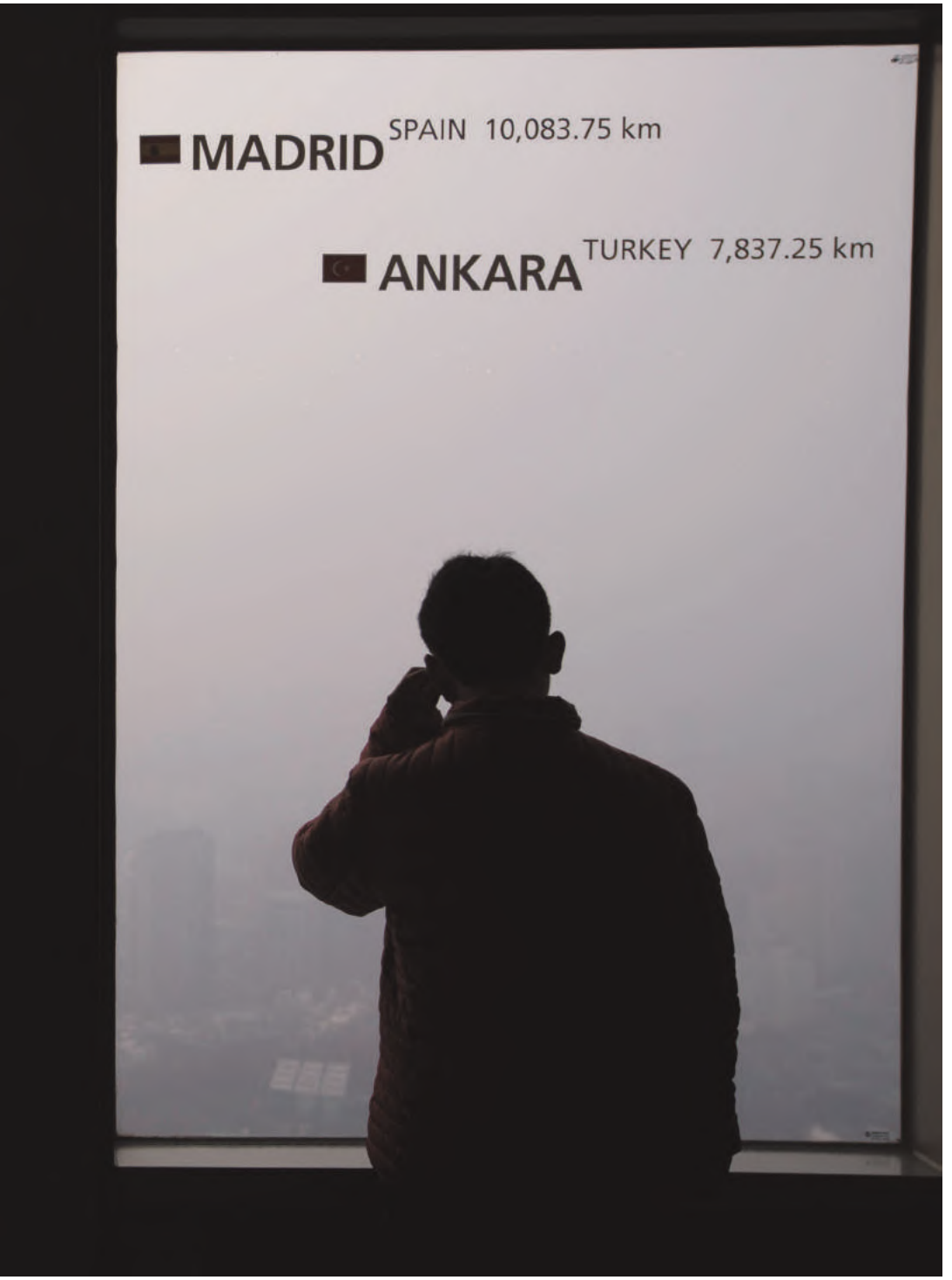
생협 줌 인 zoom in

김성광
flysg2@hani.co.kr



맑은 하늘을 담고 싶다

카메라 두 대와 노트북 든 가방을 짊어지고 우산까지 쓴 채로
서울 남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지만, 비 오는 날이 좋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면 볼 수 있는 맑은 하늘과 선명한 풍경이 그리워서일까.
오늘 밤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나기가 반갑다.
남산 N서울타워 창밖 맑은 하늘을 사진에 담고 싶다.


MADRID SPAIN 10,083.75 km
ANKARA TURKEY 7,837.25 km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2

협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송인창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

차형석 〈시사IN〉 기자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이라는 모임이 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을 가진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인다.
몇년 전 〈한겨레〉의 김현대 기자가 주도해 만든 모임으로
부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인물들을 만나왔다.
송인창 현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50)과 처음 인사를 나눈 것도
그 모임에서였다. 당시 그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의 1대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해피브릿지는 몬드라곤과 협력해 2014년에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를 만들었다).
나를 포함한 포럼 멤버들은 그와 해피브릿지협동조합에 궁금한 점이 많았다.
저녁 시간에 해피브릿지 사무실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주식회사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해피브릿지 사례는
그만큼 흥미로운 면이 많았다.
2012년에 해피브릿지의 브랜드 '국수나무' 가맹점 300호점이 오픈하고,
이 해에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나가던 주식회사가 2013년 초에 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까.
우리 포럼 멤버들은 모두 궁금해 했다.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 모임을 가졌다.
그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훨씬 전의 '히스토리'가 궁금했다.

>>> 송인창 소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수록된 『내가 시작한 미래』를 보니, 청년 시절에 가톨릭청년운동을 했다고 소개되었던데.

1986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어수선한 시기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한국항공대에서 항공통신을 전공했으니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금쯤 IT쪽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을 텐데(웃음). 대학에서 어찌어찌하다 독서토론 서클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과 맞닿았으니까

'왼쪽' 책을 많이 읽었다. 학교에서는 그 서클을 만났고, 활동은 가톨릭 쪽에서 많이 했다. 가톨릭 신자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활동도 했다. 당시에 정의구현사제단도 만들어지고 민주화의 큰 흐름이 있었다. 운동성이 있는 가톨릭계 단체들이 모인 단체에서 사무간사 역할도 했다. 따까리죠, 따까리(웃음). 북부 지역 쪽의 가톨릭 지구 청년연합회장도 했는데, 그때 부회장이 지금 '와이프'다(웃음).

>>> 가톨릭 단체 활동을 오래 했나?

1991년에 결혼을 하고 가톨릭청년회 활동은 1992년 정도까지 했다. 〈한겨레신문〉 지국에서 일했다. 당시는 노동운동, 지역운동 하던 분들이 〈한겨레신문〉 지국장을 많이 했다. 월곡지국 운영하던 지국장이 노동상담소 관련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노동상담소 일을 전담할 테니 '니가 지국을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월곡지국을 맡게 되었다. 그때 활동하던 가톨릭청년단체 사무실도 월곡지국으로 이사해 단체와 지국을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었다(웃음).

그렇게 2~3년 〈한겨레신문〉 지국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던 다른 지국장 분들도 많이 그만두고. 모임 가도 재미가 없고 그렇더라. 그만두고서 옷장사도 하고, 세차장도 하고 여러 자영업을 했다. 그러다가 〈한겨레신문〉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 노원구를 거점지국으로 만들어 지원할 테니 해보라고. 그래서 〈한겨레신문〉 노원지국장으로 '컴백'했다. 그때 당시 한 지국에 평균 부수가 500부인가 그랬는데, 내가 2,000부까지 해봤다. 2년 정도 했다. 옷 장사 해서 돈도 벌어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지국 일도 하고. 그러다가 성당에서 같이 활동하던 선배를 만났다. 민주화운동으로 감옥도 갔다 온 분인데, 나와서 어찌어찌하다 쌀 유통업체 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중계동에 2002아울렛이 생긴다, 거기 양곡 코너 운영권이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

그때 와이프가 옷장사 일을 접을 때였다. 와이프와 한 후배가 그 양곡코너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노원구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매장도 있으니 쌀 사업을 해보자'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의기투합해 1997년부터 아예 '쌀장사'를 시작했다.

>>> 〈한겨레신문〉 지국장, 옷 장사, 세차장, 쌀장사… 나름 '파란만장' 하네요(웃음).

아울렛 매장을 중심으로 '쌀 유통업'을 하다가 '갑질'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된다고 봤는지 양곡 담당하던 과장이 퇴직하고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잘렸다'. 거의 쫄딱 망했다(웃음). 그러다가 1999년에 대전에서 식품유통 공장을 하는 이원호 대표를 만났다(현재 이원호 씨는 대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때 나도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했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원호 대표도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이원호 대표와 나, 둘 다 잘 아는 한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그의 이력을 보고서 막연하지만 어떤 신뢰가 있었다. 이원호 대표 쪽이 생산과 지역을 담당하고, 우리 쪽이 서울을 담당했다. 이원호 대표는 서울에 영업소가 필요했고, 우리는 쌀장사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네트워크가 있었다. 사업을 같이 한 거다. 이원호 친구들, 성당 선배들, 내 친구들 해서 열댓 개 영업소를 두었다. 하나하나 독립적 사업자들이었다. 각각 독립돼 있으면서, 공장 물건을 팔면서 브랜드를 같이 썼다. 각각의 영업소들이 협동조합처럼 협업한 셈이다. '무슨 제품을 만들까' 같이 모여서 의논해 제품 개발도 하고. 같이 공동 구매도 하고 영업 노하우도 공유하고.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사업자협동조합처럼 운영했다.

>>> 개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다가 하나의 회사가 된 게 언제인가?

한 회사가 된 게 2007년이다. 히스토리가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처럼 사업을 하다가 2003년에 위기가 왔다. 구제역 파동 때문이다. 그때 갈비집에 냉면과 갈비를 납품하는 일이 주 사업이었다. 구제역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 거다. 매출이 확확 떨어졌다. 그 일이 있고서 2004년에 '화평동왕냉면'을 시작했다. 영업소 중에 부천영업소가 있었다. 인천 화평동이라는 동네에 세숫대야 냉면을 파는 냉면집이 열한 군데 있다. 그걸 보고 부천영업소가 여름 동안만 냉면 배달 전문점을 해본 거다. 그런데 냉면이 잘 나가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에, '고기가 안 나가니 냉면전문점을 내 냉면만 팔자'고 한 거다. 석관점을 최초로 시작했는데 '첫 날, 50그릇만 나가라'고 바랐다. 그날 150그릇 나가고, 그다음 날 300그릇 팔렸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영업소들도 다 냉면집을 시작했다. 많이 팔리는 곳은 하루에 1,000그릇까지 팔렸다. 다른 영업소에서 하나하나 열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100개의 화평동왕냉면 집이 생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듯이 '탑 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생긴 거다. 공장에서 생산한 면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니까, 서로 '너도 해, 너도 해' 한 거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었다니까(웃음). 그렇게 매출을 회복했고, 그 즈음에 '우리 이번 기회에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하게 된 거다. 2007년 7월에 공장과 영업소가 하나의 법인으로 모이게 되었다.

>>> 모일 때부터 어느 정도 '지분'이 있던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협동조합이 있는지도 모를 때였지만, 구조가 비슷했다. 2007년에 그렇게 한 회사가 되었는데, 사

업이 잘 안 됐다. 화평동왕냉면이 100개까지 갔으니까 200개, 300개까지 금세 갈 줄 알고 공장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놓았다. 갈비를 일부 캐나다에서 수입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다. 경제가 요동치고 환율에 직격타를 맞았다. 그때 2006년에 런칭해 7개점까지 내고 답보돼 있던 '국수나무'를 다시 하게 되었다. 화평동왕냉면에 집중하느라 '성당 친구'에게 '양자 보내듯' 넘긴 브랜드였는데 10~11개 점포까지 늘고서 장사가 괜찮더라. 그 친구에게 가서 '다시 같이 하자'고 설득했다. 2009년 10월부터 국수나무가 확 뜨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국수나무가 1년에 100개씩 늘어났다.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 사업에 붙인 거다.

>>> 우여곡절이 많았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언제부터 고민하게 되었나?

사업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가다가 꺾어지고 가다가 꺾어지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밑으로부터 힘을 합하는 구조였다.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2007년에 한 회사가 되면서 우리의 가치를 '참식(건강한 먹을거리)'과 대안기업에 두었다. 회사가 좀 더 커지면서 '하나로 묶으려면 체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대주주 6명이 공유했다. 내가 사회적기업추진위원장을 맡고, 임원들이 사회적기업가 과정에 참여해 교육받고 토론했다.

2011년에 이탈리아 볼로냐를 가게 되었다. '협동조합이 비즈니스로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멤버들과 볼로냐에 같이 가보고. 다들 동의해 2012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내재화하자'고 결정한 거였는데, 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든 거다. 애초에 우리는 정관특위를 만들어서 정관에 협동조합의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딜레마에 빠졌다. 법인격(주식회사)은 그대로 두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진짜 협동조합이 될 것인가. 사실 후자는 안 해본 일이니 리스크가 있지. 대주주가 두 파로 나뉘었다. 저는 후자를 주장했다. '전자로 결정돼도 괜찮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자. 비즈니스는 외부적 환경과 흐름을 봐야 하는데, 흐름이 협동조합 쪽으로 간다. 이명박 정부가 협동조합이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다. 사회적기업추진위원장 맡아서 해외도 가보고 하니 느낌이 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협동조합을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선점하자. 어차피 우리가 협동을 할 거고, 우리가 치고 나가 멋지게 하면,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꼬셨다(웃음). 전환하면서 내부유보금은 1/3은 주주들이, 1/3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나머지 1/3은 사회를 위해 쓰도록 하자고 남겨 두었다.

>>>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어려운 점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방법의 문제인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협동조합을 해석한다.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협동조합은 평등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월급의 차이가 있지? 주식회사일 때는 네가 선배니까 이해하는데, 이제 똑같은 거 아니야? 혹은 '주인노동'이라며?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주인이니까' 이렇게 협동조합을 잘못 이해하는 게 혼란을 가져온다. 소유구조, 경영구조, 통제구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거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변화다.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가 머리

로는 되는데 해본 적이 없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공화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 변화 과정에 적응하는 데 '몸앓이'가 있었다. 이제 그런 갈등은 우리 안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중이다(웃음).

경영 지표에 대한 고민도 있다. 사업과 결산 등 모든 회의의 지표는 재무적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어떤 성과를 냈고, 조합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마인드 셋 문제다. 권리를 주장할 때는 조합원,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직원. 권리와 책임의 언밸런스. 이건 조합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다. 타협과 합의의 트레이닝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 요즘 주로 무슨 일을 하나?

해피브릿지 실무에서는 빠지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 주로 세 가지다. 해피브릿지가 지금 60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데, 가맹점이 본사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갑질'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고 각계 사람들도 만난다.

한국은 전체 고용 중 자영업자 비중이 31.3%로 OECD 평균 15.8%에 비해 약 두 배가 높다. 자영업자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많이 만나왔는데, 이 시장이 거의 '제로섬' 게임이다.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만큼 나가는 구조다. 개인 신용으로 2억에서 많게는 5억을 마련해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신용불량자가 된다. 프랑스를 살펴보니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이 잘 되어

있더라. 빵집을 예로 들면 파리바게트 본사 가맹점을 모집해 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빵집들이 모여 본부를 만들고 체인화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속한 연합회, 협동조합은행 등에서 대출을 해 필요한 자본의 15~20%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더라. 프랑스에서는 이런 협동조합형 체인이 전체 유통시장의 35%를 차지한다. 이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한국의 자영업 시장이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시장에서 이런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자 등과 연구 모임을 해왔다.

>>>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나?

본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식일 경우에 본사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매출·이익이 늘어난다. 가맹점을 안 내줄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장사할 능력이 있나 없나 따지지 않는다. 프랑스의 옵틱2000Optic2000이라는 안경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가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1962년에 설립한 안경재료공동구매협동조합. 1,000여 개의 안경 판매상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조합원 5명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판도 좋아야 하고, 가입하게 될 경우 추천하는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에서 돈도 빌려준다. 상호신용, 상호부조에 따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다섯 명이 보증을 설 정도라면 파산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프랑스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약점도 분명하다. 가맹 조합원 숫자가 더디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옵틱2000만 해도 일정 조합원 숫자까지 늘어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모델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적 맥락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해볼 만한 모델이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 조직하고 설득하는 중이다.

>>> 세 가지 일을 주로 한다 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좀 뜬금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 관련 일이다.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가 몬드라곤과 함께한 연구소이다. 몬드라곤에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Mondragon Team Academy, MTA'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져와 일종의 대안대학 프로그램을 만들려 한다.

해피브릿지를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운영하다보니 '기본적으로 협동하는 테크닉, 자세가 필요하고,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야겠다'고 느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1등 할까를 배워온다. 그렇게 경쟁하는 법만 배워오다 대학 졸업 후 협동조합 만든다고 협동이 되겠나? 머리로는 협동이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웃음).

몇 년 전에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를 만든 이가 한국에 왔다. 그때 이 교육과정을 중국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해에 과정이 있다고 해서, 등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가며 배웠다. 처음에는 창업프로그램으로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의 본질이 결국 '협동'이더라. 원래 핀란드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을 몬드라곤이 수입했고,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경험을 녹여내 응용버전을 만든 것이다. 몬드라곤 대학의 프로그램은 이렇다. 교실, 교수, 텍스트가 없다. 1,000권 가량 적혀 있는 책 리스트를 준다. 마음대로 읽고 북리뷰만 써내면 된다. 대신 공부한 것을 팀원끼리 공유해야 한다. 15명이 팀을 짜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회사를 차린다. '코치'가 흐름만 잡아준다. 실제 창업을 하고 협동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0명 넘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50%가 졸업 후에도 그 프로젝트 회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게 4년 과정인데 한국에서 일단 6개월 과정을 맛보기로 해보자고 해 시작했다. 성균관대, 계원예대, 청강문화산업대에서 관심을 보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밖에도 공간을 마련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마치고나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 이 과정을 말

했더니 괜찮은 솔루션으로 받아들였다. 서울혁신파크 안에 공간을 마련했다.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

>>> 관심 두고 있다는 세 번째 사업은?

협동조합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팀 창업이 가능할까. 이를 돕는 펀드와 공공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 기존 협동조합과는 어떻게 협업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 한다.

협동조합과 연결된 고민에서 출발했다. 해피브릿지는 처음에 식품유통업을 했고, 2004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넘어왔다. 식품유통업할 때는 유능한 인재가 말 잘하고 성실하고 낯가리지 않고 영업 잘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넘어와서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외식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다. 결국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바뀌는 거다. 그런데 노동자협동조합은 해고가 없다. 일반 회사는 사업 전환을 하면 기존 인력을 정리했을 거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 몬드라곤도 혁신을 무척 강조한다. 몬드라곤은 회사의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려 나가는 걸 시스템화했다.

우리에게도 팀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이 필요하다. 또 협동조합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사업이기도 하다. 중앙·지방 정부가 지원해 주식회사 10개 만드는 게 고용에 도움이 될까, 협동조합 10개 만드는 게 도움이 될까. 당연히 후자다. 얼마 전부터 '팀 푸드 인큐베이팅'이란 일을 시작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와 해피브릿지의 협업이다. 해피브릿지의 한 공간을 교육장으로 쓰고, 청년들이 외식 아이템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에게는 여

태까지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교육을 하고 창업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창업 공간이다. 공공이 갖고 있는 '남는 공간'을 찾고 논의해가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펀드도 만들려고 한다. 해피브릿지에서 5,000만원을 내놓았다. 이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 창업 생태계 모델링을 하고 있다.

송인창 소장을 만난 게 6월 1일이었다. 그 며칠 전에 송 소장은 제주에서 10km 마라톤을 뛰었다고 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글을 보고서 '취미가 마라톤인가' 했다. 아니란다. 마라톤, 처음 해보았다고 한다. 친구가 한번 뛰어보자고 해서 뛰었단다. 8km가량 뛰었을 때,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골인 지점이란 생각에 계속 뛰게 되더란다. 사회적경제 쪽 사람들과 함께 뛰고 싶은 마음이 들더란다.
인터뷰를 마치고 송 소장은 또 다른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을 연구하는 미국 연구자와의 약속이다. 그가 협동조합 전환 때 예측한 대로, 해피브릿지는 '한국 노협'의 대명사가 된 듯하다. 조합원 86명, 프랜차이즈 매장 600여 개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라톤 이야기로 시작한 인터뷰. 굴곡이 있던 해피브릿지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린 한 문장은 이렇다. '역시 협동조합은 장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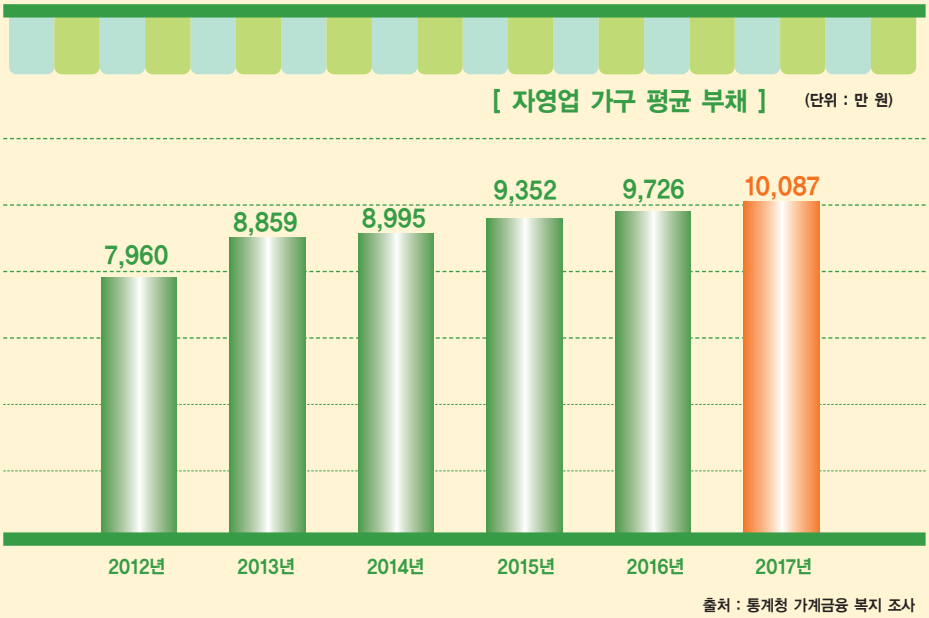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

1

자영업의 문제를 극복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김현하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 조사

각 유형별 협동조합의 특수한 지위나 사업 방식은 협동조합의 비교우위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재를 제공할 수 있고, 생산자협동조합은 자영업자들과 가족 단위 사업에 조상하는 사람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동자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 조건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비교우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협동조합 유형별로 이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한국의 소상공인은 조기 은퇴나 높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30대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년 대비 100.73%로 증가한 것도 위축된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이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는 이것마저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생존율은 2017년 20.1%로 5명이 창업하면 4명은 문을 닫습니다.[1]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의 기반이 부채라는 점입니다.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부채가 임금노동자보다 약 20% 높고, 특히 고금리의 제2금융권 부채가 전체 부채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안고 있는 폭탄이 터지면, 생계소득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가계의 다른 자산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1 「5명 중 4명은 망하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자영업자'」, 『조세일보』, 2017.9.2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9/20170921335924.html

진출, 과다경쟁은 물론 상당수 자영업체가 외식업인 점을 고려하면 원자재 물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을 더욱 위기로 내모는 요소입니다.

협동조합을 충분한 자원이 없는 약자들의 연대라고 정의한다면, 현재의 자영업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협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자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거나 선택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살펴보려 합니다.

협동의 방식이 곧 협동조합 비즈니스

먼저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업의 형태가 곧 비즈니스 모델이 되므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동할지에 대한 구상이 없으면 협동조합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저 형식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협업 방식 중 하나는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에서 원재료를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버거킹은 RSIRestaurant Service, Inc, 던킨도너츠는 NDCPNational Distribution Commitment Partnership, LLC라는 구매협동조합을 만들어 밀가루와 설탕, 각종 소모품을 공동구매하여 마진 없이 조합원 매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소유한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원재료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불공정행위와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구매는 개별 업체들이 이미 구매하고 있는 물품들을 함께 구입하여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한 설비나 기반이 필요하지 않은 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로 협동조합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영업과 같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생존의 영역은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이익

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기존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공동구매에 참여할 동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당연한 입장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탈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시도가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요합니다. 던킨도너츠의 구매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구매량의 70%를 협동조합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최소구매이용량제도를 정관에 두고, 이를 어길 시 조합원 제명 등 강력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 모두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합원과 혁신을 견인하는 조합원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아무도 혁신에 앞장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의 방식을 구상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기여도를 높이고, 무임승차의 문제를 막기 위한 보상과 벌칙은 비즈니스 모델만큼이나 협동조합 운영에 중요합니다.

규칙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많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개인사업에 몰두해 협동조합 운영에 소홀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신뢰가 쌓이는 경험을 함께 만들지 못하고, 협동조합의 이익 분배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조합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조합원의 책임과 권한을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규칙에 반영해봅시다. 사각의 링에 심판 없이 오르면 권투가 아니라 싸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이용의 협업

공동구매가 원재료 조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공동생산은 혼

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같이 생산하기 위한 협동입니다. 동네빵네 협동조합은 알고 지내던 제과제빵 소상공인들이 빵 생지를 위한 생산공장을 함께 설립하고, 그렇게 생산한 생지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합니다.

빵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설비들은 대부분 수입기기로 가격이 높아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제과점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매일 새벽 탑차로 냉동생지와 반제품 빵들을 공급받아 운영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개인 빵집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네빵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로 공동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생산 설비로부터 다품종의 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제조산업이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동생산은 초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동구매 방식의 협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면 협동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초기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조합원을 모으기 힘들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덴마크 최초의 낙농업 협동조합의 이야기입니다.

> 1882년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동네 농민들을 설득한 이는 스틸링 아네르센이라는 청년이었다. 아네르센은 각 농가가 개별적으로 버터와 치즈를 만드는 것보다 공장을 차려 함께 만들면 훨씬 쉽게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농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동네에서 소를 키우던 농가의 3분의 1은 협동조합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들도 정식 조합원이 되었다. 함께하면 득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가 되자 덴마크 우유 생산농가의 약 90%가 낙농협동조합에 참여했다. 그 이유를 샤를로테는 한마디로 설명했다. "협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 —오연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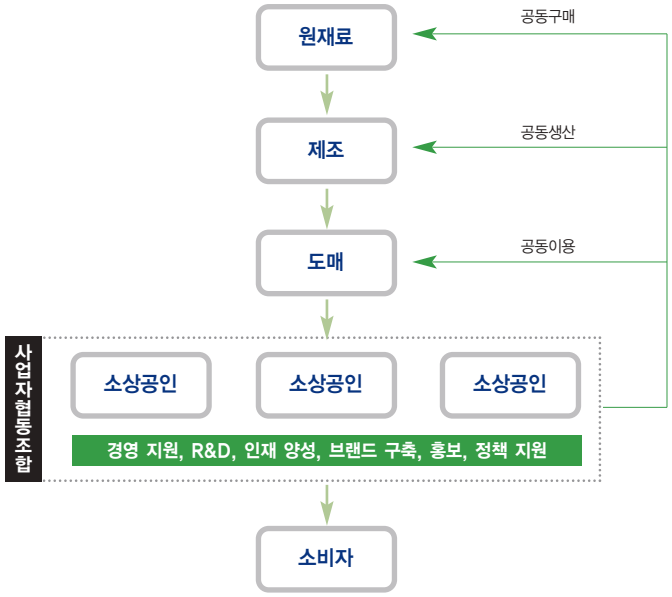
작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저변 확대와 신뢰 구축은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람, 특별히 선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규칙이 현실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는 것처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경험을 통해 조합원에게 소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이용의 협업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혼자서 운영할 수 없는 재고창고를 공동이 함께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구색을 확장하거나 도매영역인 B2B, B2G 시장 진입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서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서점협동조합은 도서 창고와 배달 시스템을 갖춰 온라인 대형 서점들이 장악하고 있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 대량으로 도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창고와 같은 유형의 자산 외에도 ERP, 온라인 통합주문 시스템, 무인 키오스크 등 온라인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공동이용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전국의 매장에서 취합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 지향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가격 정책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지출비용이 크거나 계절을 타는 상품들의 판매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선택한 협업의 방식도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자아도취에 빠져 잘 판매될 것이라는 착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협동의 방식은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일 뿐, 조합원과 함께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협업의 방식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협동조합 안에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협업의 구조



직원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만드는 협동조합

월급쟁이가 갑자기 사장님이 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은 고숙련 노동에서 나오는 만큼 고숙련 자영업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지 않고는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협업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를 만드는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 1년 이상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은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3개월 미만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은 26%, 3~6개월 교육을 받은 사람이 32%).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지원과 정책 개발로 조합원을 지원할 뿐만 아

니라 자영업을 고숙련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 고용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만큼 창업 희망자들을 먼저 직원 조합원으로 채용해 훈련시키고, 일정한 준비가 끝나면 사업자조합원으로 독립해 창업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자영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취업과 창업의 중간지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의 풍경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레 전문점이 된 일본의 코코이찌방야CoCo壱番屋 프랜차이즈는 오직 직원만이 가맹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코코이찌방야에서는 꽃이 핀다는 뜻의 Bloom System 정책에 따라 직원으로 최소 2년 동안 회사의 정책과 매장 관리 기술을 배워야만 매장의 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레시피 이해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장과 본사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뢰의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한 사업자협동조합에 어울리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자금을 출자해 직원 조합원으로 일한 뒤,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신뢰를 쌓고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창업한다면 고숙련 자영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반복되기 쉽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이종 분야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동일 업종이 아닌 이종 분야의 사업체들간에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이종 분야간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한 장소에 모일 때 시너지가 큽니다. 이는 목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체로 자영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장을 내는 것이 좋지만, 그런 곳은 이미 임대료와 권리금이 오를 대로 올라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후미진 골목과 상권이 무너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종 분야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단점이 가득한 지역을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곳으로 재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종 분야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범위의 경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각 협동조합의 본래 설립 목적이 존재하는만큼 이종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기획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것에 중점을 둔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문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특정 지역(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은 저렴한 제품을 구할 수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자아에 부합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에 사람들이 찾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광주 구도심 재생사업의 하나인 광주폴리Folly는 어느덧 3차를 맞이했습니다. 제 3차 광주폴리(도심 속 소형 건축물)의 하나인 쿡Cook폴리는 맛집형 폴리라는 주제로 광주 청년들이 만든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청년들은 비어 있는 한옥을 리모델링해 침체된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독특한 라이프스타일로 장진우 거리를 만든 기획자 장진우 쉐프가 쿡폴리에 참여한 것도 장진우 거리에서 발견한 문화 콘텐츠의 힘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쿡폴리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 상권 활성화 이후에 몰아칠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맛집형 폴리로, 쇠락한 도시에 비집고 들어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는 폴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요식관련 청년들을 모집하여 이들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회적 이슈도 함께 진행한다. 이미 이태원 장진우 골목에서 시작하여 스핀들 마켓에 새로운 푸드 코트형 점포를 설립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장진우가 기획가로 참여한다.

—광주폴리Ⅲ 쿡폴리 소개 중에서

영화 〈올드보이〉의 영문 포스터는 천편일률적인 네온 불빛 간판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는 이국적인 풍경일 수 있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자영업의 몰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은 특별한 경쟁력 없이 휘황찬란한 상업 간판들이 '나부터 살고보자'는 살벌한 경쟁 속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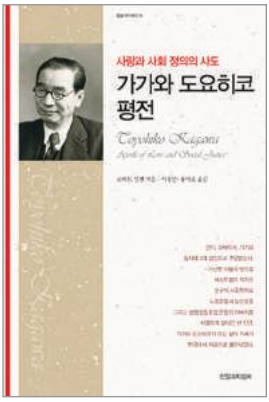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협동조합을 붐이 아닌 대안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음에 안도합니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4위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만 챙기는 '개점휴업 협동조합'을 양산한다는 오해를 빚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현금성 지원으로만 이뤄진다면 몰개성의 자영업을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 바꾸는 길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동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도시재생, 인재양성 등의 정책과 만나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시민이 만나 거리의 풍경을 바꾸고,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서평

평화를 향한 또 다른 길, 협동조합운동과 우애의 경제학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로버트 실젠 지음, 서정민·홍이표 옮김
신앙과지성사, 2018

김 이 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오산학교와 같은 배움터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며 그 후신인 풀무학교가 있는 홍동마을을 들렀다. 홍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느티나무 헌책방에서 제목에 끌려 구입한 책이 『우애의 경제학』이었다. 이 책으로 가가와 도요히코를 처음 만났다. 그는 신학도 시절에도, 목회자가 된 후에도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20대부터 성서를 들고 고베 빈민촌에 들어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과 함께했고 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임을 예리하게 파악했다.

가가와는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교적 실천' 방법을 모색했다. 그 방법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었다. 그는 시행착오를 거쳐 1920년 고베구매조합을 안착시켰고, 이후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으로 활동을 넓혔다. 이에 그는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라 일컬어진다.

단비 같은『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가가와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20세기 내내 일본 사회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일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혁명을 추구하거나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았던 탓에 주목을 덜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의 자전적 소설『사선을 넘어』가 1920년에 출간되면서 그는 일본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하지만 그의 동지가 "지금의 젊은이들은 가가와의 이름을 거의 모른다"고 한탄할 만큼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올해 초 교토에서 열린 학회에서 '고베 쌀 소동과 가가와 도요히코의 논의'를 발표한 일본인 연구자와 만난 필자는 가가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가와는 오랜 빈민촌 생활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평생 질병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거의 매일 글을 썼고, 38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그의 인세는 대부분 협동조합 등 사회운동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일부는 1980년대에 한국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지만 그 후 20년 동안 세 권의 책이 소개되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가가와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국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책이 미국인 저널리스트 로버트 실젠이 쓴『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 사랑과 사회 정의의 사도』이다. 이 책은 가가와 목사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1988년에 영문 저서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가가와의 삶을 일본어, 영문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고 가가와의 차녀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전체상을 그렸다. 동시에 기존에 나온 가가와에 대한 이상화나 찬양

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서술이 아닌 그에게 부족한 인식이 무엇인지,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설명 등을 통해 가가와의 삶을 균형 있게 기술했다.

협동조합, 인간본위 문명 형성의 방법

한국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가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에 책 서두에는 한국 생협 관계자의 추천이 실렸다. 추천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가와의 활동은 협동조합에 한정되지 않고 평화와 인격경제, 자본협동, 비착취와 같은 큰 숲을 가지고 있다. 즉 그의 모든 활동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만을 위한 맹목적인 종교 활동은 아니다.

가가와는 "저는 부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믿습니다"(325쪽)라고 말했다. 이는 협동조합과 민주적인 사회 질서가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교적 경제의 계획 전체를 의미(325쪽)한다. 그는 20세기 내내 "평화 유지야말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286쪽)이라고 강조했고, 20세기 초 엄혹한 제국주의 시대에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 개혁으로 세계 평화의 열쇠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협동조합과 그리스도교적 '우애의 경제'를 연결시킨 배경에는 그의 빈민촌 거주와 유학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고베 빈민촌에서 지내던 가가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미국 유학을 떠난다. 1916년 여름, 그는 뉴욕에서 양복재봉직공 노동자 6만 명이 데모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137쪽)며 일본 노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주도한 총파업이 실패하고 보통선거권 획득이 어려워지자 투쟁 방식을 둘러싸고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파벌이 생기게 된다. 가가와는 파벌들

간의 내부투쟁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설립을 돕는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우리의 노동운동을 자본주의에 팔아먹고 있다"고 비판 받았다. 반면 미국에서 복음과 협동조합 강연을 할 때면 "사회주의 망령"이나 "그리스도교를 가장한 소비자협동조합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불온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자의 공격을 받고,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자로 인식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거듭된 것이다. 가가와는 이런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가와가 인식하는 협동조합은 "재화를 존경하는 현대사회"를 변화시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로 환원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더불어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명암을 예리하게 파악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어떤 착취도 할 수 없고, 자본이나 특권의 축적도 없으며 계급간의 투쟁도 없는 그런 국가 혹은 사회질서가 필요하다"(294쪽)라고 말했다. 즉 어떤 '주의'냐의 문제는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가가와는 협동조합 경제에 의한 '비폭력 혁명'으로 비착취의 원칙, 형재애의 원칙, 나눔의 원칙,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지탱하는 '가가와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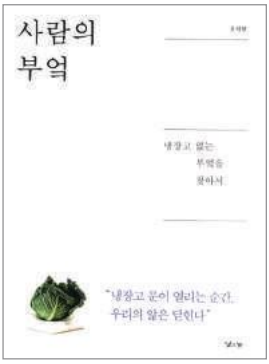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된 지 30년이 지났다. 올해로 가가와 탄생 130주년을 맞은 것이다. 그가 꿈꾸던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평생 한발 한발 지치지 않고 나아간 것처럼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구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은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서평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귀중한 앎이 닫힌다

『사람의 부엌 : 냉장고 없는 부엌을 찾아서』
류지현 지음, 낮은산, 2017

문보라
아이쿱 기자
서울아이쿱생협 조합원



일곱 살 둘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먹다 남은 치즈, 누나 몰래 먹을 젤리, 아껴 먹고 싶은 사탕 등 아이 손에 들어온 음식은 일단 냉장고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은 빵 비닐을 버렸다간 상당히 곤란해진다. 다시 새로 사 주거나 더 맛있는 음식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 네 번째 칸은 아이의 손때 묻은 음식들로 그득하다.

몇 번 나무라긴 했다. 먹다 남기는 습관은 좋지 않다는 둥, 이러다 냉장고가 쓰레기통이 되겠다는 둥 말이다. 좋은 말로 달래도 봤다. 냉장고 안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그대로인 것은 아니라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제대로 통한 적이 거의 없다. 아이의 한

마디 때문이다. “엄마도 그러잖아!”

아니라고 했다간 무언의 목격자, 냉장고 터줏대감 매실진액의 야유를 들을 것만 같다. 야채칸 지킴이 양파즙도 변심, 아니 변맛(!)으로 나를 나무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아이보다 더 심각하다. 구입한 식재료, 먹다 남은 음식, 집안 어른들께서 주신 발효식품과 건강즙 등 대부분의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다가 명절맞이 기념행사로 일 년에 두어 번 냉장고 안을 정리한다.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을 아이가 봤으니, 큰소리 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복잡한 심정이 소문이라도 났나보다. 처방전 같은 책을 선물 받았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보고 찜해뒀던 『사람의 부엌 : 냉장고 없는 부엌을 찾아서』다. 이 책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류지현 씨가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부엌을 찾아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기록물이다. 이 긴 여정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은 식재료들, 혹은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들을 알리고, 냉장고를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자고 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나아가 그는 사라져가는 음식 저장 지식에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입힌다. 이를 테면, 사과 농사를 지으신 할아버지의 사과 보관법(돌을 괴어 놓은 사과 상자 아래로 찬물을 붓는 방법)에서 영감을 얻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위에 놓을 구멍 뚫린 접시를 디자인한다.

이 작업이 첫발을 뗀 곳은 네덜란드의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이다. 이곳에서 그는 석사 졸업 작품으로 2009년에 ‘냉장고로부터 음식을 구해내자’ ‘지식의 선반’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같이 살던 친구들이 냉장고 안에 보관하던 식재료들을 쉽게 버리는 걸 보고, 냉장고에 지나치게 기대는 부엌 문화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TED 강연, 독일 다큐멘터리 〈쓰레기 맛을 좀 봐〉에 소개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다.

디자이너 류지현 씨의 명성에 비해 책 『사람의 부엌』 표지는 생각보다 단출하다. 하얀 바탕에 초록빛이 선명한 배추(?) 한 포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마치 나처럼 냉장고를 맹신하는 독자에게, 이토록 싱그러운 채소는

냉장고가 아닌 '사람의 부엌'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책장을 넘기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끈 첫 번째 장소는 이탈리아에 사는 렌자네 집 부엌이다. 마침 렌자는 수확한 토마토로 파사타(토마토소스)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겨울을 대비해 김장하는 것처럼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은 먹을 양이다. 그 모습을 보고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렌자는 말한다. "밖에 둬야 맛있는데 왜 냉장고에 넣죠?"

렌자의 정색에서, 저자는 답을 얻는다. 토마토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토마토는 단단한 겉껍질이 없는 까닭에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함을 말이다. 토마토를 밖에 두면 무르거나 상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속이 뜨끔하다. 가볍게 읽어볼 요량이었는데, 형광펜을 찾아 손에 쥐게 된다.

다음은 기름 보관법이다. 1년 내내 기름의 고소한 향과 맛을 유지하려면 통풍이 잘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소금 단지를 두고 그 안에 기름병을 넣어두어야 한단다. 소금 단지가 없다면 소금이 담긴 그릇에 기름병을 꽂아 두어도 좋다고. 그럼 소금도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와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탈리아 바르바레스코Barbaresco의 농부들은 포도송이 보관법이 남다르다. 꽃병에 꽃을 꽂듯, 유리병에 포도송이를 꽂는다.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 작은 유리병들이 일정한 각도로 줄을 맞춰 빼곡히 차 있고, 각각의 유리병에는 포도가 한 송이씩 담겨 있다. 가지만 병 속 물에 잠기고 포도송이는 병 밖으로 나와 있어서 물러지거나 으깨질 염려가 없다. 이 방법으로 9월쯤 수확한 포도를 그다음 해 4월인 부활절까지 보관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냉장고에 보관할 때와는 달리 단맛을 유지해준단다.

이 외에도 별표를 새겨두고 싶은 보관법이 상당하다. 가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꼭지에 밀랍 바르기, 실온에서 향긋하게(!) 달걀 보관하기, 건조대 없이도 감자나 당근 말리기 등 그들의 방대한 경험과 지식

이 냉장고로 인해 저물어 갈까봐 안타까울 정도다.

저자는 말한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인류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귀중한 앎이 닫힌다'고. 그래서 '전통 지식을 이용해 살아가는 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의 부엌을 향해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냉장고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는 이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프로젝트가 그저 경이롭고 신통하다. 자연과 인간이 일궈온 '유산'을 기록해가는 그가 존경스럽다. 당장 냉장고 코드를 뽑지 못할지언정 그의 순례가 순탄하길 바라는 이유다. 유럽, 중동, 남미를 이을 '사람의 부엌' 제2편이 기다려진다.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페트병의 5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

●●●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인 코퍼라티브 그룹The Co-operative Group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수 페트병의 50%를 재활용 플라스틱rPET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제조되는 100% 재활용 가능한 이 페트병은 코퍼라티브 그룹의 PB브랜드 생수에 올해 말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업계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코퍼라티브 그룹의 이번 시도는 소매업체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약 350톤의 플라스틱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퍼라티브 그룹의 코업 푸드Co-op Food 최고경영자 조 위트필드Jo Whitfield는 이번 기회에 공급 및 폐기물망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었으며, 재활용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퍼라티브 그룹의 환경 이슈 관련 책임자인 이안 퍼거슨

Iain Ferguson은 지금까지 그룹의 식품 포장재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지금까지 공급업자들은 페트병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페트병은 재활용임을 나타내는 회색빛을 띠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PB브랜드 패키지를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코퍼라티브 그룹은 포장재의 100% 재활용을 80%까지 달성하고자 하며, 짙은 색의 플라스틱 사용 또한 중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티백을 생분해biodegradation 가능한 종이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코퍼라티브 그룹은 2016년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업계 주도의 전략인 플라스틱산업 재활용 행동계획PIRAP에 참여한 첫 번째 소매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코퍼라티브 그룹의 회원 협동조합인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협동조합The East of England Co-operative은 환경보호를 위해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이후에도 신선식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5개 소매점을 운영하는 이 협동조합은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통조림, 포장식품, 건조식품 등의 식품을 품질유지기한 이후 한 달까지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해당 식품을 과일, 야채, 빵으로 확대하고 품질유지기한 이후 2일까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케이크 또한 기한 이후 7일까지 판매한다. 해당 상품들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푸드뱅크 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없고, 따라서 협동조합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30~50%는 소비되지 않고 폐기된다.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협동조합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매년 적어도 2톤의 폐기물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조 : 더 코퍼라티브 그룹(www.co-operative.coop)
Co-operative News(www.thenews.coop)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협동조합(www.eastofengland.coop)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세운 미국 최대의 유기농생산자 협동조합

●●● 미국의 유기농생산자 협동조합인 올가닉 밸리Organic Valley가 재생가능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대규모 식품업체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올가닉 밸리는 15개 지자체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퍼미드웨스트 지자체 에너지 그룹UMMEG, 태양에너지 개발업체인 원에너지 리뉴어블OneEnergy Renewables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올가닉 밸리가 위치한 위스콘신에 12MW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시작한다.

올가닉 밸리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133개 친환경·유기농 식품회사들의 그룹인 기후 콜라보레이티브Climate Collaborativ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2017년 3월 기후의 날 행사에서 올가닉 밸리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2019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100% 조달할 것임을 선언했다. 2012년 이미 올가닉 밸리는 5MW의 풍력발전소 설치에 투자했고, 본사 건물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으나 사업의 성장으로 인해 필요량의 약 50%만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로 위스콘신 전체 태양에너지 사용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올가닉 밸리가 17MW 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29MW 규모가 생산될 예정이다. 올가닉 밸리는 본사는 물론 버터 및 우유 가공시설, 유통센터 등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가닉 밸리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통해 올가닉 밸리와 지역사회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파트너십은 올가닉 밸리의 '동물,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여 꿀벌 등 수분매개자 친화적pollinator-friendly 기준을 채용할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토지에는 잔디나 자갈을 사

용하지 않고 생물 친화적인 초원으로 대체된다. 완성된 초원은 토착 꽃과 풀, 식물들로 구성될 것이며, 벌과 나비의 서식지가 될 것이라고 올가닉 밸리는 밝혔다.

창립 생산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조지 시몬George Siemon은 농부에게 바람과 해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1988년 일곱 농가가 설립한 올가닉 밸리는 현재 2,000여 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매출은 10억 달러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를 농가 모두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미 220개 농가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이끌면서 올가닉 밸리는 바이오디젤 생산, 수분 매개자 친화적 태양광 기준 마련 등 환경에 대한 헌신을 매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600만 달러이다.

참고 : 올가닉밸리(www.organicvalley.coop)

생활 속
사회적경제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인식합니다.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다보면 때론 엄마의 꿈은 아이의 꿈, 그 자체가 돼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엄마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엄마의 꿈'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엄마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둔 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꼭 묻어둔 '내 꿈'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엄마들의 협동조합을 살펴보려 합니다.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한편으론 그 두 공간의 거리를 좁히려 고민하고 행동하는 엄마들의 선택을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의 꿈을 펼치다

신효진
편집위원회

노는엄마협동조합

노는엄마협동조합은 '놀이가 곧 교육이다'라는 취지 아래 보드게임과 스포츠스태킹Sport Stacking(스피드스택스 컵을 쌓고 내리면서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을 중심으로 두뇌활동, 신체활동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을 엄마들이 직접 개발하고, 수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2013년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전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엄마들의 동아리가 2016년 2월 협동조합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까지 했죠.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폰 게임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에 낯설어하죠. '노는 엄마'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놀며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보드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스포츠스태킹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운동을 합니

다. 아이와 항상 부대끼면서 쌓은 엄마의 내공과 보드게임 강사, 스포츠 스태킹 자격증이라는 실력으로 '노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만이 아닌 놀이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려 합니다.

재미있게 잘 노는 것도 능력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물어보기보다 재미있게 잘 놀았는지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는엄마협동조합 카페(http://cafe.naver.com/norimom)를 참고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동화나무

경북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생한 사회적협동조합 동화나무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동화구연 강좌를 함께 듣던 '동기'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2003년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인형극, 탈인형극, 구연동화 등의 공연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이제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 중입니다.

경북 칠곡에 자리 잡은 동화나무는 칠곡세계인형음악극 축제에 6년째 꾸준히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공모전, 평생학습박람회 등에서 수상을 하며 인형극단으로서의 동화나무, 엄마들이 모여 일군 단체로서의 동화나무 모두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7명의 조합원 전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가정에 머물면서 묻어둔 꿈을 동화나무를 통해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화나무가 지역에서 경력단절 엄마들에게 안정적이며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 취약 지역에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조합원 각자가 방과후학교 교사, 동화구연 강사, 지역아동청소년 지도교사 등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동화나무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에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엄마들의 꿈이 멈추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화나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onghwanamu)을 참고하세요.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생협평론 2012 여름(7호)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지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피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쿱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롱(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회,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생협평론 2017 봄(26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3	2008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_김창진 편저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_G.D.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_G.D.H. 콜 저 | 홍기빈 옮김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엄은희·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협—의 동향』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장종익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장상환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지민진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지민진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손범규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희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_지민진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박상선·권영기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홋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사례』『거버넌스』 ____이경수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경수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_윤길순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_윤길순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